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강경종·김종우·김종욱·김선태·주홍석·홍은선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RIVET

기본연구
—
2022-04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강경종·김종우·김종욱·김선태·주홍석·홍은선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 R I V E T

머 리 말

우리나라는 현재 학령인구의 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이 대학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자원 규모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의 입학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전문대학에서는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의 한 축으로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및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현재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미달로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감소 현황,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 정부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에 바탕을 두어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대학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 구조개혁의 방안 및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강경중 박사가 연구 책임을 맡아 총괄 진행하였고, 2장은 김종욱 박사, 홍은선 박사, 3장은 주홍석 교수, 4장은 홍은선 박사, 김선태 박사, 5장은 김종우 박사가 공동 집필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102개 전문대학의 기획처장 및 관계자와 FGI 조사 및 면담에 참여해 주신 12명의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 전문대학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가는 물론 전문대학 스스로도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한 전문대학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여러 정책 제언이나 의견은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연구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힌다.

2022년 10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류장수

제목 차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의 방법	8
제4절 용어의 정의	12

제2장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_13

제1절 학령인구 및 노동시장 인력수요	15
제2절 전문대학 입학생 및 학과 현황	32
제3절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에 대한 시사점	54

제3장 전문대학 구조개혁의 정책 및 제도 분석_57

제1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분석	59
제2절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72
제3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	82

제4장 전문대학 구조개혁 실태 조사_93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95
제2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실태 조사 분석 결과	97

제3절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9

제5장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_135

제1절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 137

제2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방안 142

Summary_157

참고문헌_161

부록_167

본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022년도에 작성하여 제공한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강경중)이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www.krivet.re.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 차례

〈표 2-1〉 인구수 및 생산가능인구(2022-2040년)	16
〈표 2-2〉 인구수 및 학령인구(2022~2040년)	17
〈표 2-3〉 지역별 학령인구(2022~2040년)	18
〈표 2-4〉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23
〈표 2-5〉 경제활동인구 전망	24
〈표 2-6〉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24
〈표 2-7〉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25
〈표 2-8〉 15세 이상의 고용률 전망	26
〈표 2-9〉 학력별·산업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28
〈표 2-10〉 학력별·지역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30
〈표 2-11〉 학력별·규모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31
〈표 2-12〉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2000~2021년)	32
〈표 2-13〉 2021년 전문대학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34
〈표 2-14〉 2021년 전문대학 소재지별 충원율	34
〈표 2-15〉 2021년 전문대학 계열별 충원율	35
〈표 2-16〉 전문대학 학과 분류	36
〈표 2-17〉 신입생 충원 관련 계열별 분석 대상 전문대학 및 학과 현황 ·	38
〈표 2-18〉 2021년 기준 계열별 전문대학 학과 현황	39
〈표 2-19〉 2021년 인문·사회계열 신설 학과	40
〈표 2-20〉 2021년 자연과학계열 신설 학과	41
〈표 2-21〉 2021년 예·체능계열 신설 학과	42

〈표 2-22〉 2021년 공학계열 신설 학과	43
〈표 2-23〉 지역별 입학정원	44
〈표 2-24〉 계열별 입학정원	46
〈표 2-25〉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평균)	47
〈표 2-26〉 계열별 신입생 충원율(평균)	48
〈표 2-27〉 지역별 경쟁률(평균)	49
〈표 2-28〉 계열별 경쟁률(평균)	50
〈표 2-29〉 졸업생 취업 관련 계열별 분석 대상 학과 현황	51
〈표 2-30〉 지역별 취업률(평균)	52
〈표 2-31〉 계열별 취업률(평균)	53
〈표 3-1〉 2003~2008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61
〈표 3-2〉 2003~2008년 대학 통·폐합 및 폐교 현황	62
〈표 3-3〉 2008~2013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65
〈표 3-4〉 2009~2013년 대학 통·폐합 및 폐교 현황	66
〈표 3-5〉 박근혜 정부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67
〈표 3-6〉 2013~2018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68
〈표 3-7〉 2018~2021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71
〈표 3-8〉 2003~2022년 4개 정부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주요 내용과 성과	82
〈표 3-9〉 2003~2022년 4개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과 성과	84
〈표 3-10〉 2003~2021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조조정 규모 비교 · 87	

〈표 4-1〉 실태 조사 설문 구성	96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8
〈표 4-3〉 향후 3년간(2023~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보가 안정적인 계열 및 학과	99
〈표 4-4〉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가 입학한 학생 수	100
〈표 4-5〉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가 입학한 학생 수	101
〈표 4-6〉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대학 ·	102
〈표 4-7〉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대학 ·	102
〈표 4-8〉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모집한 계열 및 학과 ·	103
〈표 4-9〉 대학 소재지별 20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비율 및 학생 수	104
〈표 4-10〉 입학정원 규모별 20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비율 및 학생 수	105
〈표 4-11〉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	105
〈표 4-12〉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	106
〈표 4-13〉 최근 3년간 (정원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요 계열 및 학과 ·	107
〈표 4-14〉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계열 및 학과	108
〈표 4-15〉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계열 및 학과	109
〈표 4-16〉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평균 취업률	110
〈표 4-17〉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평균 취업률	110
〈표 4-18〉 대학 소재지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	111
〈표 4-19〉 입학정원 규모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	112
〈표 4-20〉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해당 지역/타 지역)	112
〈표 4-21〉 입학정원 규모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해당 지역/타 지역)	113
〈표 4-22〉 대학 소재지별 2023학년도 입학정원(신입생 충원율) 확보 예상 비율	113
〈표 4-23〉 입학정원 규모별 2023학년도 입학정원(신입생 충원율) 확보 예상 비율	114
〈표 4-24〉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 개편 유무	114
〈표 4-25〉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 개편 유무	115
〈표 4-26〉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신설한 계열 및 학과	116
〈표 4-27〉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신설한 계열 및 학과	117
〈표 4-28〉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폐과한 계열 및 학과	118
〈표 4-29〉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폐과한 계열 및 학과 수	119
〈표 4-30〉 대학 소재지별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이유	120
〈표 4-31〉 입학정원 규모별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이유	120
〈표 4-32〉 전문대학 주요 정책별 기여 정도	122
〈표 4-33〉 전문대학 주요 정책별 지속 필요 정도	123
〈표 4-34〉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	125
〈표 4-35〉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령 제정 시 우선 사항	126
〈표 4-36〉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별 필요 정도 ·	12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8
[그림 2-1] 학령인구(2022~2040년)	17
[그림 2-2] 대학 입학정원 및 입학인원(추계)	21
[그림 2-3] 생산가능인구 추이	22
[그림 2-4] 산업(중분류)별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업종	27
[그림 2-5] 직업(중분류)별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업종	28
[그림 3-1] OECD 주요 국가의 전문대학 설립유형별 비율 비교	89

요 약

1.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의 한 축으로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및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현재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미달로 구조조정애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대학은 나뉠대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달 학과 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인력 양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경직된 규제, 수도권과 지방의 인식 차, 비인기 학과 등으로 상황에 맞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에서는 자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발전적 구조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감소,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 정부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 등에 바탕을 두어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대학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 구조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등 전문대학의 위기 상황 분석, 노동시장 수요와 연계한 전문대학의 학과

현황 파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정책 진단 및 대안 도출, 전문대학 측면에서의 자체 구조조정 현황과 향후 방향 조사,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및 분석, 자료 분석,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개최, 정책 세미나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진행 절차 및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p>학령인구 감소 및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추이 분석 • 노동시장 수요 분석 • 전문대학의 학과 현황 및 추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연구 및 분석 • 자료 분석
<p>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정책 진단 및 대안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현황 분석 •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 전문대학 정책의 진단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연구 및 분석
<p>전문대학의 자체 구조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 정부의 정책 지원 현황 •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 •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FGI • 전문가 협의회
<p>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 •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인프라 측면, 정체성 확보 측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 전문가 협의회 • 세미나 개최

다.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의 ‘구조개혁’은 ‘구조조정’에 앞서(또는 더불어) 전문대학의 발전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법/제도, 인프라 등을 변화시키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2.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

가. 학령인구 및 노동시장 인력수요

대학 입학가능자원 규모는 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이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도 2040년에는 2022년 대비 77.7% 수준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438천 명에서 2040년 5,204천 명으로 향후 18년간 2,234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입학연령 인구에 대해서는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 유지가 예상된다.

학력별 생산가능인구는 ‘중졸 이하’에서 감소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감소세로 나타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학교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경제활동인구는 ‘중졸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졸’ 및 ‘전문대졸’은 2025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대학교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전망을 보면 중분류 수준에서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보건, 음식,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하며,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에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 취업자 전망을 보면 중분류 수준에서 보건·복지·돌봄 관련 종사자, 공학기술직, 정보통신기술직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전망되었고, 매장판매직, 기계조작직, 영업직 등에서 감소가 전망되었다.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의 학력별·산업별 부족률 관련해서는 학사 2.3%, 고졸 2.2%, 전문학사 1.9%로 나타났으며, 전자, 기계, 화학,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 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문대학의 입학생 및 학과 현황

2021년도 전문대학의 전체 충원율은 84.4%로 총 24,190명(15.6%)이 미충원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문대학의 충원율이 86.6%로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충원율 82.7%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계열별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자연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충원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에서 충원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에서 입학정원이 있는 학과의 전체 입학정원은 2019년 163,517명, 2020년 161,386명, 2021년 155,420명이며, 연평균증감률은 -2.51%로 감소 추세이다.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190개 대학교의 입학정원은 감소 추세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종, 인천, 울산 지역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수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

계열별 입학정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은 감소 추세이고, 자연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계열별 취업률 현황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연평균증감률은 -1.97%로 감소 추세이고, 자연과학계열은 0.66%으로 증가 추세이며, 예·체능계열은 -1.51%로 감소하고, 공학계열은 1.76%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전체 133개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2018년 70.4%, 2019년 69.9%, 2020년 68.0%이며, 연평균증감률은 -1.72%로 감소 추세이다.

2020년 기준, 취업률이 낮은 학과로 인문·사회계열은 호텔경영과, 사회복지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등이 있으며, 자연과학계열은 안경광학과, 헤어과, 애완동물의료과, 호텔조리과 등이 있었고, 예·체능계열에서는 스포츠레저과, 미용과, 실용음악과, 연기와 등이 있으며, 공학계열에서는 조선기술과, 항공기술과 등이었다.

다.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에 대한 시사점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전체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문대학의 계열별 입학정원은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은 감소 추세이고, 자연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학과 관련한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크게 보면 입학할 대상의 요구와 졸업 후 취업할 산업사회의 요구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대학 입장에서는 인프라(교수, 시설, 설비 등)의 구축 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신설에 있어서는 산업사회의 요구와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은 교육수요 및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되, 향후 취업과 연계되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과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전문대학 구조개혁의 정책 및 제도 분석

가.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분석

4개 정부에서 진행된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를 전문대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3~2022년 4개 정부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주요 내용과 성과

정부	구조개혁 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노무현 정부 (2003.2.~ 2008.2.)	<p>[구조개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정부의 소득 2만 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대통령 보고 시 구조조정 논의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고등교육 정책과 동반하여 대학 구조개혁 추진 <p>[구조개혁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전문대학을 국립일반대학과 통합 • 사립전문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 '04년 대비 '06년도 입학정원의 10% 감축 대학에 한해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국·공립대학, 지방대학 중심으로 구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 3개교, 입학정원 2만 명(-5.5%) 감소 - 전문대 10개교, 입학정원 7만 1천 명(-17.9%) 감소 • 국립전문대학의 급격한 소멸 • 근본적 해결보다는 국립대학 중심의 손쉬운 구조조정

정부	구조개혁 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p>이명박 정부 (2008.2.~ 2013.2.)</p>	<p>[구조개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학 미충원을 급증과 다수 부실대학 출현 예상 • 대학이 자율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구조조정 기반 조성 필요 <p>[구조개혁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대학 평가기준 마련 • 대학 평가를 통한 부실대학 판정 • 평가 결과 하위 15%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 이 중에서 최하위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공개 •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사립대학, 지방대학 중심 정원 감축 - 일반대학은 1개교가 늘어, 입학정원도 2천 명(-0.6%) 감소에 그침 - 전문대학은 8개교, 입학정원 3만 4천 명(-14.6%) 감소 • 전문대학 축소로의 soll림이 극심하게 진행
<p>박근혜 정부 (2013.2.~ 2017.3.)</p>	<p>[구조개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입학자원이 급감, 대학들의 미충원 확산 가시화 •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요구 증가 •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우려.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부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p>[구조개혁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기에 걸친 입학정원 감축 추진 • 1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하고, 5개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실시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대학 구조개혁, 자발적 퇴출 대학의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정부 시기 역시 전문대학, 사립대학, 지방대학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진행 - 일반대학 입학정원은 2만 9천 명 감소(-8.4%) - 전문대학은 3만 2천 명 감소(-16.1%)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폐기로 한계 대학의 자발적 퇴출 유도(잔여재산 처분 특례) 근거 마련 실패

정부	구조개혁 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문재인 정부 (2017.5.~ 2022.5.)	[구조개혁 배경] • 1주기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전국 단위 세세한 등급화로 서열화하고, 지역대학 고려가 부족했으며, 재정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 여건 개선이 미흡했다고 평가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심화,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고등교육 신뢰 회복 필요 [구조개혁 주요 내용] •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상위 64%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로 진행 • 하위 36%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II)'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정원 감축 권고	• 대학 자율에 맡겨 감축 인원이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음 • 전문대학 중심의 감축은 여전한 추세 - 일반대학은 247명 감축에 그쳐 거의 변동 없음 - 전문대학은 1만 2천 명 감소(-7.2%)

나.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4개 정부에서 진행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2003~2022년 4개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과 성과

정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p>노무현 정부 (2003.2.~ 2008.2.)</p>	<p>[특성화사업] • 기존에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통합</p> <p>[주문식교육사업] • 주문식교육은 특성화사업과는 별도로 추진 •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애로기술 개발 지원</p> <p>[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 기존에 진행되어 온 '산학협력촉진사업'을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12개까지 추진되었던 재정지원사업을 3개의 사업으로 통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4년 대학 및 전문대학에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기 시작 • 2005년에 교육부 직제 중 전문대학을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전문대학정책과가 신설
<p>이명박 정부 (2008.2.~ 201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사업과 주문식교육사업 종료 <p>[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 2단계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2009.3.) • 2009~2011년간 13개 대학에 연간 80억 지원(대학별 5~7억 지원) • 산학협력 체제 구축, 현장실습 및 캡스톤 디자인, 중소기업 애로기술 개발 및 지도 등 • 2단계 사업 종료 후 2012년부터 LINC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지속</p> <p>[교육역량강화사업] • 2008년에 500억 규모로 시작하여, 2009년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과 'NURI사업(전문대)'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통합되면서 예산이 2,310억으로 확대 • 창의적 우수 인재 양성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물러 펀딩 방식의 재정 지원 • 자율적 재정 집행 보장, 분야별 특성화 추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함 • '교육역량 우수대학지원사업'과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지원'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정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대학 지원 정책은 일반대학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면서, 이 시기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위축됨 •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대학의 교육 여건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로 구성된 공식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포물러 펀딩' 방식과 지원된 예산은 용처의 지정 없이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되어, 대학의 장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블럭 펀딩' 방식 도입

정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p>박근혜 정부 (2013.2.~ 2017.3.)</p>	<p>[전문대학 육성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전문대학 육성 방안’이 마련 • 5대 핵심 과제 추진 :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산업명장기술대학원 육성,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p>[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계열을 특성화하는 I 유형, 2개 계열에 집중하는 II 유형, 특성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III 유형,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대학 모델을 구축하는 IV 유형으로 구분 • 5년간 총 1조 3,729억 원의 투입 <p>[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시행된 본 사업은 기존의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기반 추진 • 산학협력 선도형 10개(교당 5~6억 원), 현장실습 집중형 20개(교당 1~3억 원)를 선정하여 추진(연간 12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14년 78개 대학을 선정한 이후 추가 선정 및 탈락을 거쳐 2018년 82개 전문대학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참여 •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산업명장기술대학원 육성은 추진되지 못함 • LINC 사업은 기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산학협력을 보다 고도화하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지역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원
<p>문재인 정부 (2017.5.~ 2022.5.)</p>	<p>[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자율개선대학 87개교는 자율협약형으로 2,610억 원 지원, 역량강화대학은 신청 대학 중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130억 지원 • 일부 자율개선대학은 평가를 통해 15개교를 ‘후진학 선도형’으로 추가 지원(150억) <p>[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2021년 5년간 매년 약 888억 지원 • 산학협력 고도화형 10개교, 사회맞춤형 학과 증점형 20개교 선정 <p>*사회맞춤형 학과 :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채용연계를 위한 채용약정이 이루어진 학과·전공·트랙 등의 교육과정</p> <p>[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사업(202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에 석사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5개 대학에 100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기본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이 시대적 요구와 산업 및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혁신하도록 지원 • LINC+사업은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체와 대학 간 협력을 보다 긴밀해지도록 지원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에서도 석사 수준(전문기술석사학위 취득)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

4개 정부에서 진행된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전문대학의 축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명목상 고등교육기관의 균형적 구조조정을 통해 고등교육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발적 구조조정과 혁신을 유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의 폐교와 입학정원 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구조조정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균형적인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에 치우쳐 진행되었다. 둘째, 전문대학이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혁신과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전문대학이 어떤 위치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문대학 육성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전문대학 육성법 별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재정 지원 규모 및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성인학습자들의 비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나 실제적으로 학위과정에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전문대학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문대학 구조개혁 실태 조사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구조개혁 관련 향후 계획 및 요구,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도출을 위해 133개 전체 전문대학 기획처장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기획처장 3명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 구성이 적절하고 조사 대상이 응답하기에 수월하게 문항이 제시되었는지 의견을 조사하였다.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에 적합하게 응답 방식을 수정하였으며, 응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문항의 제시 순서를 조정하여 최종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의 협조를 얻어 각 대학에 공문으로 설문을 요청하여 응답을 기입 후 이메일로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하여 102부(133개 전문대학의 76.7%)를 회수하였다.

가.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전문대학에서 입학정원 확보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요 학과에 대해서는 자연과학계열(59.9%), 인문·사회계열(16.0%), 예·체능계열(12.8%), 공학계열(11.3%) 순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에서는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에서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낮게 나타났다.

입학정원 내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의 최근 입학 현황을 보면 입학정원은 연도별로 감소하지만, 성인학습자는 매년 증가함을 나타냈고, 성인학

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모집한 계열 및 학과가 있는 대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대학이 많았다.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를 보면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보다 약 16.9% 높았다. 이는 졸업 후 취업처가 수도권에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 최근 학과 개편을 한 대학은 83개 대학(81.4%)으로 나타났고, 학과 개편을 하지 않은 대학은 19개 대학(18.6%)으로 나타났다. 신설 학과 수는 평균 3.4개 학과이고, 폐과는 220개 학과, 평균 2.7개 학과로 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에서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서(58.4%)’, ‘미래 사회의 변화 대응(24.8%)’,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재정 지원을 위해(8.9%)’, 대학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미래 사회의 변화 대응(43.8%)’으로 전체 응답자와 차이가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서(66.7%)’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나.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서 전문대학 발전 및 혁신에 대한 기여 정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22~)’(1순위),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2019~2022)’(2순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2022~)’(3순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014~2018)’(4순위),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2017~2022)'(5순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2022~)'(6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대학 발전 및 혁신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22~)'(1순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2)'(2순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2022~)'(3순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2017~2022)'(5순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2022~)'(5순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014~2018)'(6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전문대학 발전 및 혁신에 대한 기여 및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014~2018)'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고,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를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전문대학 재정 지원 확대'(1순위),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2순위), '고등직업교육교부금 도입'(3순위), '중장기적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4순위), '한계 대학 퇴로 방안 마련'(5순위),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률 제정'(6순위), '정부 차원의 사회적 산학협력시스템 구축(대학-지역-산업체)'(7순위)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대학 재정 지원 확대',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 등은 높게 요구하였다.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령 제정에서 우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 마련'(1순위),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2순위), '사학에 대한 재정보

조에 관한 사항'(3순위), '타 고등교육기관과 구분되는 전문대학 역할 명확화'(4순위), '퇴출되는 대학의 교직원 임금/퇴직금 보전 방안'(5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에서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로는 전문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역수요 기반 인재양성 분야 및 학과 설립 관련 지역사회 수요 공유 협의체 운영, 직무별 수업연한 다양화 및 일반대학으로의 호환성 확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칭) 직업교육법 마련, 직업교육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성인학습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영역에 해당되는 학과를 일반대학에 설치함으로써 경쟁 및 차별화 발생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전문대학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비율로 정원을 조정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모집정원 축소 및 폐지, 전문대학이 지역중심(지역특화) 대학으로의 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 차원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는 현재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대학 자율에 맡겨 운영해 오면서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중복해서 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정부의 역할로 제시하였다.

다.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현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 강화’(1순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2순위),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3순위), 지역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탁사업 확대’(4순위),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확보’(5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과제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 강화’를 제일 높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전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전문대학의 정체성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가.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육성 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대학의 미래 지향적 인력양성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방안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의 5대 방향에 터해 22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구조개혁 방안 및 추진 과제

방안	과제
1. 중장기적인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	1-1.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모델 및 시스템 개발 1-2.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법령 제정 1-3.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방 교부금 지원 1-4.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1-5. 중등 단계에서 성인학습자에 이르는 연계성 있는 정책 수립
2.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	2-1. 대학의 등록금 인상 자율성 허용 2-2.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특성화 방안 마련 지원 2-3. 고용보험기금 사용을 위한 절차 간소화 2-4.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2-5. 국가 지원 재정의 경상비 활용 비중 확대 전문대학 정책별 기여도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3-1.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한 정원 조정 3-2. 비수도권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3-3. 졸업생들의 일반대학 연계 편입 확대 3-4. 수도권과 비수도권 육성 모델 차별화 방안 모색

방안	과제
4. 질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	4-1. 분야에 특화된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4-2. 성인학습자에 대한 취업지원 역량 강화 지원 4-3. 특성화고와 교육과정 연계 체제 구축(3년+2년) 4-4. 학교법인 자발적 퇴출 유도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4-5. 공영형 전문대학 도입
5.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5-1. 신산업 분야 인재육성 정책 및 지원 계획 수립 5-2. 재직자 직무전환 거점 대학 지정 및 컨소시엄 구축 5-3. 전문대학 교수 산업체 장기 연수 지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용어의 정의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의 입학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 이에 전문대학에서는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2019)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만 6세에서 21세 학령인구는 2007년 1,033만 명 대비 2017년 846만 명으로 10년간 187만 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7년 학령인구는 2017년 대비 190만 명이 감소한 65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2007년 학령인구의 1/3 규모인 36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의 한 축으로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및 산업 발전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현재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미달로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전문대학은 나름대

4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왔으며, 1990년 117개교이던 전문대학이 대학설립기준 완화 등으로 1999년 161개교(허영준 외, 2020: 40) 넘게 늘어나면서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만 얻으면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대학교와도 경쟁 체제를 갖게 되면서 2021년 현재 133개교(교육부, 2021c: 1)로 자체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1년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155,176명, 등록인원은 131,100명으로 미달률이 15.5%(미충원 인원은 2020년 9,182명, 2021년 24,000명)이며, 133개교 중에서 26개 전문대학만 정원을 채우고 있다(교육부, 2021d). 이러한 전문대학의 입학자원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고, 충원률 또한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전문대학이 미달 학과 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인력 양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경직된 규제, 수도권과 지방의 인식 차, 비인기 학과 등으로 상황에 맞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학 학력자의 전공별 취업자 수 전망을 보면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은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자연계열은 2028년에 그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0; 허영준 외, 2020: 22 재인용).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5.6%), 공학계열(-4.0), 자연계열(-4.0%) 등으로 졸업자 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허영준 외, 2020: 22).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에서는 자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발전적 구조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감소,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 정부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 등에 바탕을 두어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대학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 구조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등 전문대학의 위기 상황을 분석한다.

둘째, 노동시장 수요와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학과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한다.

셋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정책 진단 및 대안을 도출한다.

넷째, 전문대학 측면에서의 자체 구조조정 현황과 향후 방향을 조사한다.

다섯째,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전문대학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등 전문대학의 위기 상황을 분석한다.

학령인구 추이를 위해 인구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지역별 학령인구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노동시장 수요와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학과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는 인력공급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고용률,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전망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전문대학의 학과 현황과 관련해서는 입학생 충원율, 지역별·계열별 입학정원 추이, 지역별·계열별 취업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정책 진단 및 대안을 도출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정책은 2003~2022년까지 4개 정부에서 진행된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4개 정부에서 진행된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를 전문대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단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전문대학 측면에서의 자체 구조조정 현황과 향후 방향을 조사한다.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133개 전체 전문대학 기획처장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정부의 정책 지원 현황,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을 5가지로 제시하였고, 이에 더해 각각의 방향에 따른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는 1) 중장기적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5개 추진 과제), 2)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5개 추진 과제),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4개 추진 과제), 4) 질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 방안(5개 추진 과제), 5)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3개 추진 과제) 등 총 22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 자료 분석, 설문조사, 심층 그룹 인터뷰(FGI), 전문가 협의회, 정책 세미나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그림 1-1]과 같은 절차, 내용 및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학령인구 감소 및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추이 분석 • 노동시장 수요 분석 • 전문대학의 학과 현황 및 추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연구 및 분석 • 자료 분석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정책 진단 및 대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현황 분석 •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 전문대학 정책의 진단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연구 및 분석
전문대학의 자체 구조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 정부의 정책 지원 현황 •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 •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FGI • 전문가 협의회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 •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인프라 측면, 정체성 확보 측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 전문가 협의회 • 세미나 개최

1. 문헌 연구 및 분석

문헌 연구는 노동시장의 수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구조 개혁 정책(2003~2022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2003~2022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보도자료 및 전망 DB,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 원의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정책과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계획 및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 추이, 전문대학의 학과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 추이는 인구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였으며, 전문대학의 학과 현황과 관련한 입학생 충원율, 지역별·계열별 입학정원 추이, 지역별·계열별 취업률 등은 대학알리미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설문조사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133개 전체 전문대학 기

10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획저장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과 구조개혁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정부의 정책 지원 현황,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 협조를 얻어 각 대학에 공문으로 설문을 요청하여 응답을 기입한 후 이메일로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하여 102부(133개 전문대학의 76.7%)를 회수하여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응답 내용 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분석 내용별로 빈도 및 평균값 등의 기술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 연구의 추진 단계별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문대학 정책과 관련한 정책 담당자, 직업교육 전문가, 전문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2차례(설문조사의 타당성,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의 타당성 등)에 걸쳐 연구 진행 결과를 자문받았다.

5. FGI(Focus Group Interview)

FGI는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FGI 조사지를 구성(총 14문항)하여,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 및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적인 확인 및 분석, 정책 대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대학 관련 전문가 12명에게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FGI 결과는 5장의 정책 방안에 제시하였다.

6. 정책 세미나 개최

정책 세미나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 24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917A 화상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정책 세미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와 공동으로 대면 및 화상으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전문대학 총장, 직업교육 전문가 등 3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종합 토론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 및 교육부의 전문대학 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많았으며, 개선된 의견은 연구진에서 취사선택하여 최종 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제4절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이 혼재하여 제시되고 있어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이란 경영학에서 경영 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를 축소 또는 통폐합하거나, 인원을 감축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경영 전반의 개선 작업이라 할 수 있다(나무위키(2022). <https://namu.wiki/w/구조조정>. 검색일: 2022.10.24.). 이러한 ‘구조조정’이 정부의 정책 또는 대학의 입장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다.

‘구조개혁’은 ‘구조조정’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구조개혁’은 기업이나 조직 내의 구조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일(네이버(2022). <https://search.naver.com/구조개혁>. 검색일: 2022.10.24.)로 구조에는 다양한 범주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의 ‘구조개혁’은 ‘구조조정’에 앞서 (또는 더불어) 전문대학의 발전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법/제도, 인프라 등을 통해 전문대학을 변화시키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

- 제1절 학령인구 및 노동시장 인력수요
- 제2절 전문대학 입학생 및 학과 현황
- 제3절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에 대한
시사점

제2장 |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

제1절 학령인구 및 노동시장 인력수요

1. 학령인구 추이

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이 대학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서 대학에 입학할 가능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교육부, 2021d: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출생자 수가 2000년 64만 명, 2005년 43만 9천 명, 2010년 47만 명, 2015년 43만 8천 명, 2020년 27만 2천 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2년 51,628천 명에서 2040년 50,193천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2022b). <https://url.kr/l8e9yp1>).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887천 명에서 2040년 28,649천 명으로 감소하여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대비 77.7% 수준으로 예상된다.

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4&vw_cd=MT_ZTITLE&list_id=A41_1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25EC%259D%25B8%25EA%25B5%25AC%2520%253E%2520%25EC%259E%25A5%25EB%259E%2598%25EC%259D%25B8%2. 검색일: 2022.4.14

16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6만 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5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22b). 또한 생산가능인구 중 15~24세 비중은 2022년 14.4%에서 2040년 11.3%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25~49세 비중은 2022년 50.9%에서 2035년 48.7%로 감소 후 증가하여 2040년 49.9%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2b).

〈표 2-1〉 인구수 및 생산가능인구(2022-2040년)

(단위: 천 명)

구분	'22	'23	'24	'25	'30	'35	'40
총인구	51,628	51,558	51,500	51,447	51,199	50,868	50,193
생산가능인구 (15-64)	계	36,887	36,620	36,281	35,854	33,947	28,649
	15~24	5,322	5,134	4,951	4,759	4,492	3,235
	25~49	18,763	18,567	18,347	18,194	16,900	14,287
	50~64	12,802	12,919	12,983	12,901	12,555	11,127

자료: 통계청(2022c). 2022년 장래인구추계/생산가능인구. <https://url.kr/bptlgr.2> 검색일: 2022.4.14.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438천 명에서 2040년 5,204천 명으로 향후 18년간 2,234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22년 2,696천 명, 2040년 2,085천 명으로 2022년의 77.3% 수준이고,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2022년 1,361천 명, 2040년 1,017천 명으로 2022년의 74.7% 수준이고,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2022년 1,315천 명, 2040년 916천 명으로 2022년의 69.7% 수준이고,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2022년 2,066천 명, 2040년 1,186천 명으로 2022

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vw_cd=MT_ZTITLE&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282856599&markType=S&itmNm=%EC%A0%84%EA%B5%AD. 검색일: 2022.4.14

년의 57.4%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22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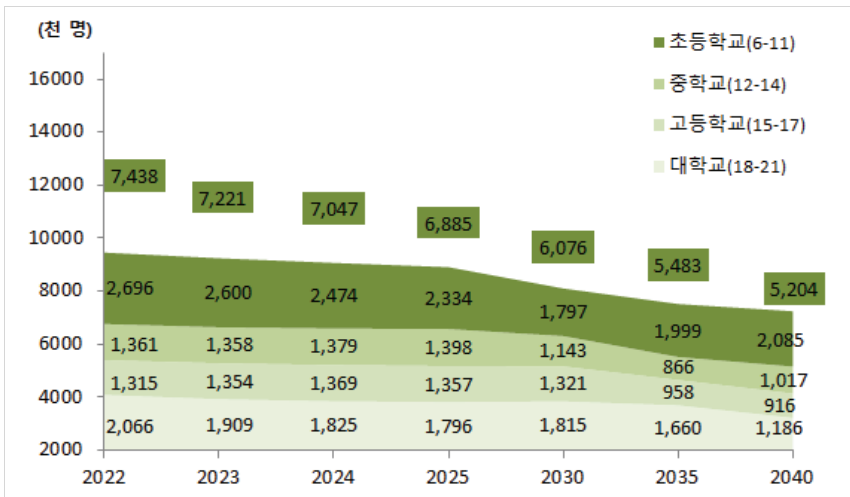
〈표 2-2〉 인구수 및 학령인구(2022~2040년)

(단위: 천 명)

구분	'22	'23	'24	'25	'30	'35	'40	
총인구	51,628	51,558	51,500	51,447	51,199	50,868	50,193	
학령인구 (6~21)	계	7,438	7,221	7,047	6,885	6,076	5,483	5,204
	초(6~11)	2,696	2,600	2,474	2,334	1,797	1,999	2,085
	중(12~14)	1,361	1,358	1,379	1,398	1,143	866	1,017
	고(15~17)	1,315	1,354	1,369	1,357	1,321	958	916
	대(18~21)	2,066	1,909	1,825	1,796	1,815	1,660	1,186

자료: 통계청(2022c). 2022년 장래인구추계/생산가능인구. <https://url.kr/bptlgr>. 검색일: 2022.4.14.

〔그림 2-1〕 학령인구(2022~2040년)



자료: 통계청(2022c). 2022년 장래인구추계/생산가능인구. <https://url.kr/bptlgr>. 검색일: 2022.4.14.

지역별 학령인구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세종을 제

18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한 감소를 보이다가 2025년 기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030년 이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세종,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상 유지 및 완만한 감소를 보이다가 202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2035년 이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부산, 울산, 세종, 경기도,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4년 또는 202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c).

〈표 2-3〉 지역별 학령인구(2022~2040년)

(단위: 천 명)

구분		'22	'23	'24	'25	'30	'35	'40
계		7,438	7,221	7,049	6,890	6,075	5,484	5,207
서울	초(6~11)	396	378	355	331	249	291	309
	중(12~14)	208	204	204	205	159	120	147
	고(15~17)	209	212	211	207	191	132	130
	대(18~21)	358	329	312	304	288	256	179
부산	초(6~11)	155	150	142	133	93	102	106
	중(12~14)	76	76	78	80	65	45	52
	고(15~17)	73	75	76	76	76	52	47
	대(18~21)	124	113	106	103	105	98	65
대구	초(6~11)	124	121	115	108	78	84	87
	중(12~14)	63	63	64	65	54	38	43
	고(15~17)	62	63	63	63	61	43	39
	대(18~21)	100	91	86	84	82	76	52
인천	초(6~11)	156	150	142	134	104	118	123
	중(12~14)	79	79	80	81	65	51	60
	고(15~17)	76	79	80	80	77	55	54
	대(18~21)	117	108	104	103	106	96	69

구분		'22	'23	'24	'25	'30	'35	'40
광주	초(6~11)	85	81	77	73	54	59	61
	중(12~14)	44	43	44	44	36	26	30
	고(15~17)	43	44	44	43	41	29	27
	대(18~21)	69	63	59	58	56	50	35
대전	초(6~11)	78	74	70	66	51	58	60
	중(12~14)	41	40	40	40	31	24	29
	고(15~17)	40	41	41	40	37	26	26
	대(18~21)	66	61	58	56	54	48	34
울산	초(6~11)	67	65	62	58	42	44	44
	중(12~14)	33	33	34	34	28	20	22
	고(15~17)	31	32	33	33	32	23	21
	대(18~21)	45	41	39	39	41	38	26
세종	초(6~11)	34	35	35	35	31	35	38
	중(12~14)	16	17	18	19	19	16	19
	고(15~17)	13	14	15	16	20	17	17
	대(18~21)	15	15	16	17	23	26	21
강원	초(6~11)	71	68	65	61	48	53	55
	중(12~14)	38	37	38	38	30	23	27
	고(15~17)	38	39	39	38	36	26	25
	대(18~21)	62	57	54	53	52	46	34
경기	초(6~11)	785	763	731	694	549	621	657
	중(12~14)	388	388	396	404	340	263	314
	고(15~17)	366	381	388	386	384	286	278
	대(18~21)	551	515	498	494	513	478	348
충북	초(6~11)	84	81	78	74	60	66	68
	중(12~14)	43	43	44	44	36	29	34
	고(15~17)	42	43	43	43	41	32	30
	대(18~21)	66	61	59	58	58	53	40
충남	초(6~11)	120	116	112	107	89	98	101
	중(12~14)	61	61	62	63	53	43	50
	고(15~17)	57	60	61	61	59	46	45
	대(18~21)	87	81	78	78	81	75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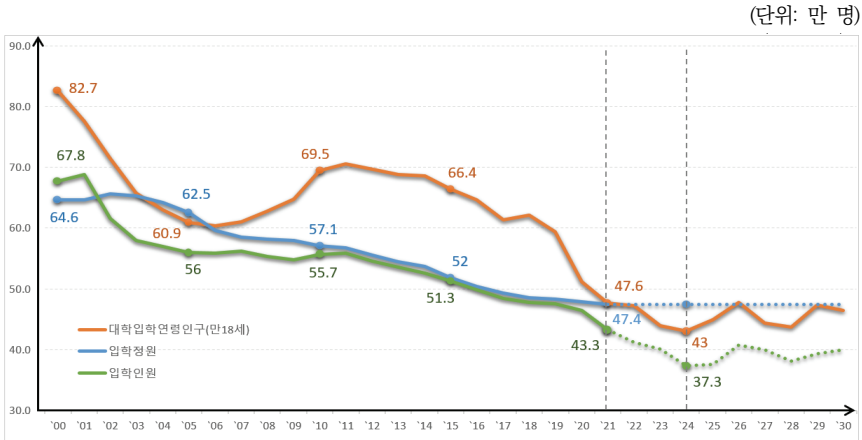
20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구분		'22	'23	'24	'25	'30	'35	'40
전북	초(6~11)	91	86	81	76	58	63	65
	중(12~14)	47	47	48	49	37	29	33
	고(15~17)	47	48	48	47	45	32	30
	대(18~21)	76	69	65	63	63	55	39
전남	초(6~11)	89	85	80	75	57	59	60
	중(12~14)	45	46	47	47	37	27	31
	고(15~17)	45	46	46	46	44	31	29
	대(18~21)	69	63	60	58	59	52	37
경북	초(6~11)	128	123	117	110	82	87	88
	중(12~14)	64	64	65	66	53	39	44
	고(15~17)	63	65	65	64	63	45	41
	대(18~21)	100	91	87	86	86	78	55
경남	초(6~11)	189	182	172	162	120	125	127
	중(12~14)	96	96	97	98	79	58	64
	고(15~17)	90	93	95	95	92	65	59
	대(18~21)	131	122	117	115	120	109	76
제주	초(6~11)	43	42	41	39	32	36	38
	중(12~14)	21	21	22	23	20	16	19
	고(15~17)	20	21	21	21	22	17	17
	대(18~21)	29	27	26	26	28	27	20

자료: 통계청(2022c). 2022년 장래인구추계/생산가능인구. <https://url.kr/bptlgr>. 검색일: 2022.4.14.

대학 입학연령 인구에 대해서는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30년까지는 유사한 규모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부, 2021d: 1).

[그림 2-2] 대학 입학정원 및 입학인원(추계)



주: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자료: 교육부(2021d).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보도자료 별첨 p.1.

2. 노동시장 인력수요 추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력공급 측면에서의 노동력 전망으로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바탕으로 인력공급 전망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망할 수 있다.

가. 인력공급 전망

인력공급 전망은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2030년까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증가하지만, 증가 폭에 있어서는 크게 둔화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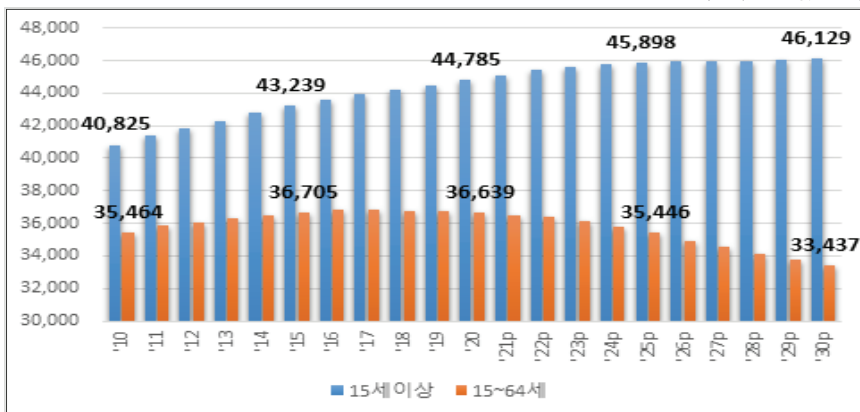
22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4,785천 명에서 2025년에는 45,898천 명, 2030년에는 46,129명으로 10년간 1,344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2: 2).

그리고 ‘15세~64세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연도별로 감소하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 36,639천 명에서 2025년 35,446천 명으로, 2030년에는 33,437천 명으로 10년간 3,202천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고용노동부, 2022: 2).

[그림 2-3]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천 명, 년도)



자료: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노동부(2022).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보도자료 별첨 p.2. 재인용.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향후 청년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경우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로 -5.2%이고, ‘50세 이상’의 경우 2020년에는 45.8%에서 2030년에는 55.0%로 +9.2% 인 것으로 전망되었다(고용노동부, 2022: 2).

학력별 생산가능인구는 <표 2-4>에서와 같이 ‘중졸 이하’에서 감소하고, ‘대학교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감소세로 나타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희 외, 2022).

〈표 2-4〉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생산가능인구			증감 (연평균 증가율)			비중		
	2020	2025	2030	20~25	25~30	20~30	2020	2025	2030
중졸 이하	10,478	9,830	9,110	-648 (-1.3)	-720 (-1.5)	-1,368 (-1.4)	23.4	21.4	19.7
고졸	16,925	17,125	17,120	201 (0.2)	-6 (0.0)	195 (0.1)	37.8	37.3	37.1
전문대졸	4,856	4,797	4,413	-59 (-0.2)	-386 (-1.7)	-443 (-1.0)	10.8	10.5	9.6
대학교 이상	12,527	14,146	15,487	1,619 (2.5)	1,342 (1.8)	2,961 (2.1)	28.0	30.8	33.6

자료: 박진희 외(2022).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20~2030 주요 통계표.

경제활동인구는 <표 2-5>에서와 같이 ‘15세 이상’에서 증가하다가,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에는 28,012천 명에서 2025년에는 29,117천 명으로, 2030년에는 28,758천 명으로 전망되었다(고용노동부, 2022: 2).

‘15세~64세’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감소 이후 증가로 전환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심화로 202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고용노동부, 2022: 2).

24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표 2-5〉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2020	2025P	2030P	증감		
				'20~'25	'25~'30	'20~'30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8,012 (62.5)	29,117 (63.4)	28,758 (62.3)	1,105 (0.9)	-359 (-1.1)	746 (-0.2)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25,134 (68.6)	25,195 (71.1)	23,883 (71.4)	61 (2.5)	-1,312 (0.3)	-1,251 (2.8)

자료: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노동부(2022).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보도자료 별첨 p.2. 재인용

학력별 경제활동인구는 ‘중졸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졸’ 및 ‘전문대졸’은 2025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대학교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희 외, 2022).

〈표 2-6〉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증감 (연평균 증가율)			비중		
	2020	2025	2030	20~25	25~30	20~30	2020	2025	2030
중졸 이하	4,042	3,499	2,922	-542 (-2.8)	-577 (-3.5)	-1,120 (-3.2)	9.0	7.6	6.3
고졸	10,591	10,579	9,986	-12 (0.0)	-593 (-1.1)	-605 (-0.6)	23.6	23.0	21.6
전문대졸	3,783	3,828	3,544	44 (0.2)	-284 (-1.5)	-239 (-0.7)	8.4	8.3	7.7
대학교 이상	9,597	11,212	12,307	1,615 (3.2)	1,095 (1.9)	2,720 (2.5)	21.4	24.4	26.7

자료: 박진희 외(2022).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20~2030. 주요 통계표 II-2.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65세로 편입되는 2024년을 정점으로 참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 가능한 인구가 감소되면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은 둔화되었다가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5세~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고학력화와 여성 참여 확대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2: 3).

경제활동참가율은 60세 이상에서 증가(+1.2%)하며, 청년층도 인력수요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0.8%)질 것으로 전망되었다(고용노동부, 2022: 4).

학력별 인구의 비중은 장기간 진행된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고졸 이하 저학력 인구는 감소(2020년 61.2%에서 2030년 56.9%)하고,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인구는 큰 폭의 증가세(2020년 38.8%에서 2030년 43.1%)가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박진희 외, 2022).

〈표 2-7〉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p)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연평균 증가율)		
	2020	2025	2030	20~25	25~30	20~30
중졸 이하	38.6	35.6	32.1	-3.0	-3.5	-6.5
고졸	62.6	61.8	58.3	-0.8	-3.4	-4.2
전문대졸	77.9	79.8	80.3	1.9	0.5	2.4
대학교 이상	76.6	79.3	79.5	2.6	0.2	2.9

자료: 박진희 외(2022).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20~2030. 주요 통계표 II-3.

나. 인력수요 전망

인력수요 전망은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전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6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2020년을 기준으로 15세 이상의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4만 명 증가하나,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1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30년까지 0.4% 상승하나, 고령층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

〈표 2-8〉 15세 이상의 고용률 전망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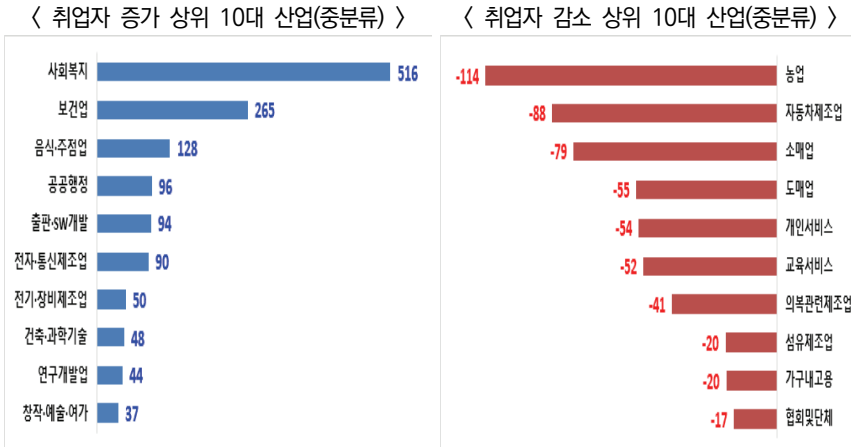
취업자	2020	2025 ^p	2030 ^p	증감		
				'20~'25	'25~'30	'20~'30
15세 이상	26,904	27,995	27,888	1,091	-107	984
(고용률)	(60.1)	(61.0)	(60.5)	(0.9)	(-0.5)	(0.4)

자료: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취업자 전망을 보면 대분류 수준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2020년 대비 2030년에 113.1만 명)가 지속되며,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2천 명)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건복지업(+78.1만 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기술 혁신 및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정보통신업(+13.5만 명), 전문과학기술(+11.5만 명) 분야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자동화 및 온라인화에 따른 전통 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 명)과 제조업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용노동부, 2022).

중분류 수준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보건, 음식,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하며,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용노동부, 2022).

[그림 2-4] 산업(중분류)별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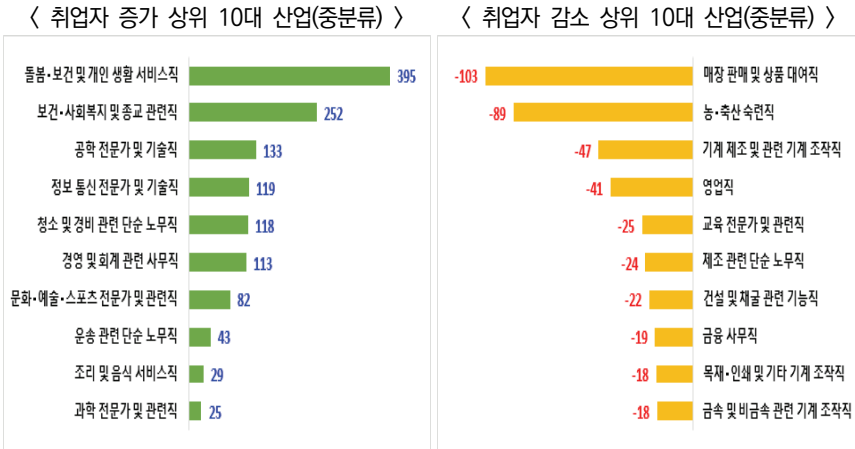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2022).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보도자료. p.6.

직업별 취업자 전망에서는 대분류 수준에서 보며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가장 크게 증가(+60.9만 명)하며, 서비스직(+46만 명), 단순노무직(+13.4만 명), 사무직(+10.5만 명) 등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판매직 및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종사자는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고용노동부, 2022).

중분류 수준에서의 직업별 취업자 전망에서는 보건·복지·돌봄 관련 종사자, 공학기술직, 정보통신기술직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전망되었고, 매장 판매직, 기계조작직, 영업직 등에서 감소가 전망되었다(고용노동부, 2022).

28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그림 2-5] 직업(중분류)별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업종



자료: 고용노동부(2022).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보도자료. p.7.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에서 학력별·산업별 부족률과 관련해서는 학사 2.3%, 고졸 2.2%, 전문학사 1.9%로 나타났으며, 전자, 기계, 화학,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 부족이 많은 것(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표 2-9〉 학력별·산업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단위: 명, %)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12 대 산 업	제 조 부 문	기계	2,402	2.6	678	2.5	797	2.6
		디스플레이	103	0.3	55	0.8	76	0.8
		반도체	894	1.6	316	1.8	362	1.8
		바이오·헬스	540	3.2	225	4.0	329	3.2
		섬유	699	3.1	157	2.5	77	1.3
		자동차	1,725	2.2	268	1.5	234	1.3

제2장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 29

(단위: 명, %)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전자	2,388	2.1	906	2.5	1,813	3.7	
	조선	390	0.9	107	1.5	45	0.6	
	철강	905	2.2	95	0.7	92	1.0	
	화학	2,892	3.6	624	3.3	538	2.3	
	서비스	소프트웨어	11	0.4	566	2.2	4,430	4.1
		IT 비즈니스	0	0.0	60	0.9	317	2.2
	소계		12,949	2.2	4,057	2.1	9,110	3.0
	기타 제조업	10 식품·음료 제조업	688	10.4	130	2.9	111	3.8
		11 음료 제조업	69	7.5	57	6.1	12	1.5
		15 가죽, 가방·신발	0	0.0	57	5.3	146	17.5
16 목재·나무제품		185	6.0	29	1.8	15	2.3	
17 펄프, 종이제품		369	3.0	222	5.2	72	4.5	
18 인쇄·기록매체 복제		186	4.1	265	10.1	174	14.1	
23 비금속광물		256	1.9	16	0.4	1	0.0	
25 금속가공제품		598	0.9	95	0.5	155	1.3	
32 가구제조		348	4.5	112	5.1	46	2.1	
33 기타 제품 제조		91	1.1	10	0.2	4	0.1	
소계		2,790	2.2	993	2.2	736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0 연구개발	72	0.9	157	1.3	600	0.9	
	71 전문서비스	80	0.9	96	1.2	195	1.1	
	72 건축기술 등	72	0.7	144	0.6	784	1.0	
	소계	222	0.8	397	0.9	1,579	1.0	
영상제작, 통신 서비스	59 영상·오디오	0	0.0	35	3.4	53	2.7	
	61 우편 및 통신	68	2.1	12	0.2	21	0.4	
	소계	68	2.0	47	0.7	74	1.0	
기타 서비스	74 사업시설관리	115	3.4	30	0.5	40	0.6	
	75 사업지원	25	2.4	9	0.8	20	1.4	
	86 보건업	8	0.4	27	0.7	52	0.8	
	소계	148	2.2	66	0.5	112	1.2	
전체		16,177	2.2	5,560	1.9	11,611	2.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2021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 p.99.

30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학력별·지역별 부족률과 관련해서는 충북 지역이 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대구(3.7%)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족인원으로는 경기 지역이 고졸(4,976명), 전문학사(2,262명), 학사(3,914명) 등으로 모든 학력에서 부족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학사 부족률에서는 대구, 충북, 대전, 세종 순(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으로 나타났다(〈표 2-10〉 참조).

〈표 2-10〉 학력별·지역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단위: 명, %)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서울	352	2.0	559	1.3	3,833	2.3
부산	144	0.8	126	1.2	245	1.5
대구	1,269	3.9	494	5.2	296	2.7
인천	984	2.3	198	1.1	184	1.0
광주	122	0.8	116	1.9	583	9.7
대전	35	0.5	234	3.7	355	2.1
울산	492	0.9	75	0.8	279	2.4
세종	223	4.2	43	3.5	89	2.7
강원	195	3.9	37	1.2	18	0.4
경기	4,976	2.5	2,262	2.1	3,914	2.6
충북	1,448	4.0	374	3.9	630	4.2
충남	1,352	1.8	254	1.5	449	1.7
전북	446	2.2	85	1.1	91	1.2
전남	416	1.9	65	0.7	65	0.8
경북	1,586	1.7	390	2.2	238	1.2
경남	2,150	2.2	241	1.1	462	1.3
제주	0	0.0	10	2.4	31	1.7
전체	16,190	2.2	5,563	1.9	11,762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2021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 보고서. p.101.

학력별·규모별 부족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학력에서 10~29인의 소규모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학사의 경우 10~29인, 30~99인의 중소기업의 사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으로 나타났다(〈표 2-11〉 참조).

〈표 2-11〉 학력별·규모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단위: 명, %)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중소·중견 규모	15,597	2.9	5,212	2.2	11,084	2.9	
중소규모	10~29인	8,084	5.1	2,254	2.5	4,378	3.9
	30~99인	5,359	2.6	1,995	2.4	4,772	3.7
	100~299인	1,880	1.4	806	1.7	1,619	1.7
중견규모	300~499인	274	0.7	157	1.1	315	0.8
대규모	500인 이상	593	0.3	350	0.5	706	0.5
전체	16,190	2.2	5,562	1.9	11,790	2.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2021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 p.102.

제2절 전문대학 입학생 및 학과 현황

1. 전문대학 입학생(신입생) 총원율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는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노력을 해 왔으며, 2001년 대비 2011년에는 입학정원이 24.4% 감소하였고, 2011년 대비 2021년에는 29.4% 감소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의 입학자 수도 2001년 대비 2011년에는 43.1% 감소하였고, 2011년 대비 2021년에는 38.2% 감소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22a).

전문대학 신입생 총원율은 2001년 110.5%, 2011년 96.4%, 2021년 84.4%로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신입생 총원율은 전년 대비 9.3%p 하락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22a).

〈표 2-12〉 전문대학 신입생 총원율(2000~2021년)

구분	입학정원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내 입학자 수	신입생 총원율(%)
2000년	294,175	318,135	108.1
2001년	292,035	322,687	110.5
2002년	293,174	311,304	106.2
2003년	285,922	275,318	96.3
2004년	277,223	259,182	93.5
2005년	266,090	218,783	82.2
2006년	247,604	219,354	88.6
2007년	238,069	219,464	92.2
2008년	233,729	214,690	91.9
2009년	231,707	209,482	90.4
2010년	218,482	211,565	96.8

구분	입학정원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내 입학자 수	신입생 충원율(%)
2011년	220,653	212,748	96.4
2012년	209,313	201,978	96.5
2013년	199,918	195,046	97.6
2014년	192,049	188,087	97.9
2015년	183,025	181,253	99.0
2016년	177,877	175,053	98.4
2017년	172,601	166,910	96.7
2018년	168,467	162,828	96.7
2019년	166,229	161,687	97.3
2020년	162,335	152,072	93.7
2021년	155,746	131,523	84.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2a).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2.4.22.

2021년 전문대학 충원율은 133개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 결과(2021.3. 등록률 기준)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입학 인원은 정원내 입학생 기준으로 정원의 입학생은 제외하였다.

2021년도 전문대학의 전체 충원율은 84.4%로 총 24,190명(15.6%)이 미충원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문대학의 충원율이 86.6%로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충원율 82.7%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d).

〈표 2-13〉 2021년 전문대학 수도권/비수도권 총원율

(단위: 명, %)

구분	모집인원	입학인원 (총원율)	미총원 (미총원율)
전국	155,176	130,986 (84.4)	24,190 (15.6)
수도권	68,001	58,902 (86.6)	9,099 (13.4)
비수도권	87,175	72,084 (82.7)	15,091 (17.3)

자료: 교육부(2021d).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p.3.

2021년 전문대학 소재지별 총원율 현황은 대도시(85.2%), 군 지역(83.8%), 중소도시(82.5%) 순으로 나타나 중소도시보다 군 지역 전문대학의 총원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 총원율에서 대도시는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고, 중소도시는 경기도 외 도 지역의 자치시이며, 그 외는 군 지역으로 구분하였다(교육부, 2021d).

〈표 2-14〉 2021년 전문대학 소재지별 총원율

(단위: 대학 수, %)

구분	대학 수	총원율
대도시	70	85.2
중소도시	47	82.5
군 지역	16	83.8
계	133	84.4

자료: 교육부(2021d).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p.4.

전문대학의 계열별 총원율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자연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총원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에서 충원율이 낮게 나타났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충원율 차이(8.4%p)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교육부, 2021d).

〈표 2-15〉 2021년 전문대학 계열별 충원율

(단위: %)

구분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공학	80.9	83.2	78.6
예·체능	89.9	93.6	85.2
인문·사회	79.9	82.1	77.6
자연과학	89.4	94.2	87.7
계	84.4	86.6	82.7

자료: 교육부(2021d).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p.4.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의 체제를 개선하고 전문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대학들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한 고등직업교육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별 충원율 점검을 통하여 미충족 대학의 경우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의 정원에 대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전문대학 학과 현황

가. 전문대학의 학과 분류 및 현황

전문대학의 학과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계열별 구분(제2조 제9항 별표

1)의 5대 대분류(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의
학계열) 중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의 4대 대
분류로 분류된다(대학알리미, 2022d).

인문·사회계열에는 언어·문학, 인문과학, 경영·경제, 법률, 사회과학, 교
육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의 관련 학과가 해당하며, 자연과학계열에는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간호, 치료·보
건 관련 학과가 포함된다(〈표 2-16〉 참조). 또한 예·체능계열에는 디자인,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 관련 학과가 속하며, 공
학계열에는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
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공 등의 관련 학과가 해당한다(이기준
외, 2021).

〈표 2-16〉 전문대학 학과 분류

대분류*	중분류(31개)	소분류(76개)
인문·사회 계열	언어·문학	일본어, 중국어, 영어, 유럽·기타어, 문예창작, 교양어
	인문과학	문헌정보, 문화, 인문일반
	경영·경제	경영·경제, 관광, 금융·회계·세무, 무역·유통
	법률	법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 비서, 언론·방송, 행정
	교육일반	사회·자연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자연과학 계열	농림·수산	농수산, 원예
	생물·화학·환경	생물, 자원, 환경
	생활과학	가정관리, 식품·조리, 의류·의상
	수학·물리·천문·지리	지적
	간호	간호
	치료·보건	보건, 재활, 의료장비, 의무행정

대분류*	중분류(31개)	소분류(76개)
예·체능 계열	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응용예술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뷰티아트
	무용·체육	무용, 체육
	미술·조형	미술, 조형
	연극·영화	연극·영화
	음악	음악, 음향
공학 계열	건축	건축·설비, 건축, 조경
	토목·도시	건설, 토목
	교통·운송	지상교통, 항공, 해양
	기계·금속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전기, 전자, 제어계측
	정밀·에너지	광학·에너지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 섬유, 신소재, 재료
	컴퓨터·통신	전산·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산업	산업공학
	화공	화학공학
	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주: *7대 대분류(인문, 사회, 교육, 자연, 의약, 공학, 예·체능)로 제시된 학과 분류체계를 4대 대분류(인문·사회(교육 포함), 자연과학(의약 포함), 공학, 예·체능)로 재구성함.

자료: 대학알리미(2022c).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40/intro.do>. 검색일: 2022.4.24.
이기준 외(2021). 2021년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pp. 83-84. 재구성.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전문대학의 대학 수는 2022년 기준 133개로, 국립 1개교, 공립 7개교, 사립 125개교이다(대학알리미, 2022c). 133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학과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대학공시정보 ‘4-다. 신입생 충원 현황’과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활용하였다. 신입생 충원 관련 공시 자료는 자료 수집일(2022.3.10.) 기준 2021년도 현황까지 제시되어 있어 기준 연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개년도 자료를 분석하였고, 졸업생 취업 관련 공시 자료는 자료 수집일 기준 2020년도 현황까지 제시되어 있어 기준 연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개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입생 총원 관련 분석 대상 전체 학과는 2019년 3,803개, 2020년 3,867개, 2021년 3,870개로 연평균증감률은 0.88%로 전체 학과 수는 증가 추세이다(〈표 2-17〉 참조).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연평균증감률은 -1.17%로 감소 추세이고, 자연과학계열은 1.62%, 예·체능계열은 3.68%, 공학계열은 1.07%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대학알리미, 2022a).

〈표 2-17〉 신입생 총원 관련 계열별 분석 대상 전문대학 및 학과 현황

(단위: 학과 수,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인문·사회계열	대학	120	120	117	-1.26
	학과*	1,208	1,219	1,180	-1.17
자연과학계열	대학	117	117	117	0.00
	학과*	947	955	978	1.62
예·체능계열	대학	94	95	96	1.06
	학과*	534	551	574	3.68
공학계열	대학	103	101	102	-0.49
	학과*	1,114	1,142	1,138	1.07
전체	대학	133	133	133	0.00
	학과*	3,803	3,867	3,870	0.88

주: *주간, 야간을 개별 학과로 처리함.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2021년 기준 전문대학 학과 중 입학정원(정원내)이 없는 학과는 1,225개(31.7%)이며, 입학정원이 있는 학과 중 신설 학과는 131개(3.4%), 기존 학과는 2,514개(65.0%)였다(대학알리미(2022a), 〈표 2-18〉 참조).

〈표 2-18〉 2021년 기준 계열별 전문대학 학과 현황

(단위: 학과 수, %)

구분		학과 수	비율
인문·사회계열	기존	753	63.8
	신설	33	2.8
	입학정원 없음*	394	33.4
	소계	1,180	100.0
자연과학계열	기존	695	71.1
	신설	25	2.6
	입학정원 없음*	258	26.4
	소계	978	100.0
예·체능계열	기존	399	69.5
	신설	36	6.3
	입학정원 없음*	139	24.2
	소계	574	100.0
공학계열	기존	667	58.6
	신설	37	3.3
	입학정원 없음*	434	38.1
	소계	1,138	100.0
전체	기존	2,514	65.0
	신설	131	3.4
	입학정원 없음*	1,225	31.7
	소계	3,870	100.0

주: *정원내 모집인원이 0명인 학과 수입.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전체 학과 중 입학정원(정원내) 신설 학과는 33개(2.8%), 기존 학과는 753개(63.8%)이다. 2021년 신설 학과로는 융합콘텐츠크리에이터과, 글로벌융합복지과 등이 있었다(〈표 2-19〉 참조). 입학정원(정원내)이 없는 학과는 394개(33.4%)이며, 이들 학과는 대부

40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분 야간이었다. 그 외 주간이면서 정원의 모집인원만 두고 있는 학과로는 경영학과, 경찰행정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스마트세무회계과, 아동미술지도학과, 유아교육학과, 의료복지학과, 장애상담심리학과, 항공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호텔관광과, 호텔관광외식학과, 호텔관광학과 등이 있었다(대학알리미, 2022a).

〈표 2-19〉 2021년 인문·사회계열 신설 학과

구분	학과
서울	문헌정보과,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휴먼사회복지학과
부산	장례행정복지과
대구	글로벌한국문화과
인천	스마트유통물류과
울산	사회복지학과
경기	융합콘텐츠크리에이터과, 글로벌융합복지과, 경찰법무행정학과, 공공행정학과, 글로벌호텔관광과, 금융정보과, 빅데이터경영과, 경찰법률서비스과, 고객서비스과, 물류무역과, 행정실무서비스과
충북	사회복지과, 평생직업교육학부
충남	호텔관광서비스과
전북	글로벌융합계열, 사회복지과, 아동심리상담과
전남	평생교육복지학과
경북	글로벌한국어과, 관광레저과, 보육복지계열, 미래산업융합과, 교육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사회복지과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자연과학계열 전체 학과 중 신설 학과는 25개(2.6%), 기존 학과는 695개(71.1%)이다. 2021년 신설 학과로는 말산업과, 반려동물과, 바이오의약과, 한복문화콘텐츠과, 호텔외식조리과, 환경원예과 등이 있었다(〈표 2-20〉 참

조). 입학정원(정원내)이 없는 학과는 258개(26.4%)였으며, 정원의 모집인원만 두고 있는 학과(주간)로는 글로벌한식조리학과, 뷰티코스메틱학과, 식품조리학과, 외식산업학과, 치위생학과, 호텔조리학과, 간호학과, 동물사육복지학과,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언어치료학과, 스마트원예학과, 작업치료학과 등이 있었다(대학알리미, 2022a).

〈표 2-20〉 2021년 자연과학계열 신설 학과

지역	학과
서울	한복문화콘텐츠과
부산	바리스타과, 반려동물보건과, 외식&디지털창업과, 치기공과
대구	보건의료행정과, 펫토타케어학부
인천	바이오코스메틱과
대전	바이오의약과
경기	반려동물과, 보건의료행정학과, 유한생명바이오학과, 의료뷰티학과
충남	외식창업조리과
전북	패션스타일리스트과, 호텔외식조리과
전남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경북	말산업과, 반려동물과, 창농융합전공
경남	보건의료관리과, 치위생과, 호텔조리제빵학부
제주	환경원예과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예·체능계열 전체 학과 중 신설 학과는 36개(6.3%), 기존 학과는 399개(69.5%)이다. 2021년 신설 학과로는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방송크리에이터과, 스포츠지도과, 영상디자인과, 분장예술과, 레저스포츠산업과, 웹툰스토리과 등이 있었다(〈표 2-21〉 참조). 입학정원(정원내)이 없는 학과는 139개(24.2%)였으며, 해당 학과(주간)에는 골프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42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경찰무도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만화애니게임학과, 방송기술학과, 생활체육학과, 영상연출학과, 실용음악과 등이 있었다(대학알리미, 2022a).

〈표 2-21〉 2021년 예·체능계열 신설 학과

지역	학과
서울	방송뷰티학과(스타일리스트전공), 방송연예과(K-POP전공), 방송연예과(뮤지컬전공),
부산	1인미디어학과, 디지털문화콘텐츠과, 생활문화예술과, 실용음악학부 국악전공, 피부·메이크업·네일미용과
대구	웹툰스토리과
인천	뷰티아트과
광주	레저스포츠산업과
대전	레저산업학과
울산	스포츠지도학과(3년제)
경기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방송크리에이터과, 스포츠지도과, 영상디자인과, 유튜브융합과, 융합콘텐츠창작전공, 토이캐릭터디자인과
강원	실용음악과
충남	뷰티코디네이션과
충북	시각프린팅디자인과, 실용음악과(3년제)
전북	뷰티디자인과, 운동재활과, 음악과
전남	웹툰콘텐츠과, 유튜브크리에이터학과
경북	분장예술과
경남	디자인콘텐츠학부, 헤어디자인과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공학계열 전체 학과 중 신설 학과는 37개(3.3%), 기존 학과는 667개(58.6%)이다. 2021년 신설 학과로는 AI소프트웨어융합과, 인공지능융합과, 정보통신드론과, 스마트기계융합학부, 스마트무인항공과, 지능형모빌리티과, 헬스케어의료기기과, 스마트건설계열, 글로벌산업기술과 등이 있었다

(〈표 2-22〉 참조). 입학정원(정원내)이 없는 학과는 434개(38.1%)이며, 해당 학과(주간)에는 3D프린팅금형공학과, 소방안전전공, 스마트제어소프트웨어과, 스마트팩토리기계생산관리과, 신재생에너지전기전공,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융합자동차기계과, 인터넷보안공학과, 전자기기융합과, 조선해양과, 친환경건축학과, 항공전자정비공학과, 헬기정비공학과 등이 있었다(대학알리미, 2022a).

〈표 2-22〉 2021년 공학계열 신설 학과

지역	학과
부산	소방안전관리과, 재난안전시스템과, 지능형모빌리티과, 헬스케어의료기기과
대구	ABC과
인천	인공지능융복합과, 인공지능전자과, 인공지능정보통신과
대전	스마트팩토리기술과, 스마트팩토리시스템운영과
울산	건축디자인학부, 화학공학과
경기	AI과, AI소프트웨어융합과, 건축과, 게임콘텐츠과, 모바일·IoT과, 스마트전자과, 실내디자인학부, 인공지능융합과, 정보통신드론과, 토목방재과, 항공기계과, 항공정비과
충남	드론IT융합과
전북	글로벌산업기술과, 인공지능융합계열
전남	스마트건설계열
경북	건설정보과, 기계자동차과, 스마트전기에너지과
경남	메카트로닉스과, 스마트기계융합학부, 스마트무인항공과, 헬기드론정비과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층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44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나. 지역별·계열별 입학정원 현황

전문대학에서 입학정원이 있는 학과의 전체 입학정원은 2019년 163,517명, 2020년 161,386명, 2021년 155,420명이며, 연평균증감률은 -2.51%로 감소 추세이다(대학알리미(2022a), <표 2-23> 참조).

<표 2-23> 지역별 입학정원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서울	15,182	9.3	15,045	9.3	14,523	9.3	-2.19
부산	10,977	6.7	10,787	6.7	10,130	6.5	-3.94
대구	13,024	8.0	12,910	8.0	12,735	8.2	-1.12
인천	5,936	3.6	5,936	3.7	5,895	3.8	-0.35
광주	5,948	3.6	5,871	3.6	5,521	3.6	-3.66
대전	7,829	4.8	7,738	4.8	7,228	4.7	-3.91
울산	2,413	1.5	2,413	1.5	2,303	1.5	-2.31
세종	1,204	0.7	1,169	0.7	1,127	0.7	-3.25
강원	4,100	2.5	4,032	2.5	3,572	2.3	-6.66
경기	49,951	30.5	49,362	30.6	47,583	30.6	-2.4
충북	5,876	3.6	5,857	3.6	5,685	3.7	-1.64
충남	6,397	3.9	6,345	3.9	6,104	3.9	-2.32
전북	5,634	3.4	5,569	3.5	5,505	3.5	-1.15
전남	7,817	4.8	7,717	4.8	7,313	4.7	-3.28
경북	11,033	6.7	10,745	6.7	10,679	6.9	-1.62
경남	7,641	4.7	7,345	4.6	6,967	4.5	-4.51
제주	2,555	1.6	2,545	1.6	2,550	1.6	-0.1
전체	163,517	100.0	161,386	100.0	155,420	100.0	-2.51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190개 대학교의 입학정원은 감소 추세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종, 인천, 울산 지역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수도권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대학알리미(2022e), <부록 1-1> 참조).

전문대학의 지역별 입학정원은 2021년 기준 경기 47,583명(30.6%), 서울 14,523명(9.3%), 대구 12,735명(8.2%), 경북 10,679명(6.9%) 순이었다. 연평균증감률은 모든 지역이 감소 추세이며, 강원 -6.66%, 경남 -4.51%, 부산 -3.94%, 대전 -3.91%, 광주 -3.66% 순으로, 강원 지역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대학알리미(2022a), <표 2-23> 참조).

계열별 입학정원은 2019년에는 공학계열 48,114명(29.4%), 인문·사회계열 47,992명(29.3%), 자연과학계열 45,692명(27.9%), 예·체능계열 21,719명(13.3%) 순으로 공학계열의 입학정원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21년에는 자연과학계열 46,339명(29.8%), 공학계열 43,193명(27.8%), 인문·사회계열 43,005명(27.7%), 예·체능계열 22,883명(14.7%) 순으로 자연과학계열의 입학정원이 가장 많았다(대학알리미, 2022a).

이러한 계열별 입학정원은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은 감소 추세이고, 자연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연평균증감률은 인문·사회계열 -5.34%, 공학계열 -5.25%, 자연과학계열 0.71%, 예·체능계열 2.64%로, 인문·사회계열의 감소 추세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예·체능계열은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가 높게 나타났다(대학알리미(2022a), <표 2-24> 참조).

〈표 2-24〉 계열별 입학정원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인문·사회계열	47,992	29.3	46,240	28.7	43,005	27.7	-5.34
자연과학계열	45,692	27.9	46,252	28.7	46,339	29.8	0.71
예·체능계열	21,719	13.3	21,973	13.6	22,883	14.7	2.64
공학계열	48,114	29.4	46,921	29.1	43,193	27.8	-5.25
전체	163,517	100.0	161,386	100.0	155,420	100.0	-2.51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지역별 공학계열 입학정원 감소 추세 상위 학과를 살펴보면 〈부록 2-2-4〉50 같다. 2019년부터 2021년 학과별 입학정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감소 추세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학과는 경기의 스마트IT과(-0.39%)이고, 지역별로 주로 자동차과, 기계과가 감소 추세가 높은 학과로 꼽혔다(대학알리미, 2022a).

다. 지역별·계열별 신입생 총원율

전문대학에서 입학정원이 있는 학과의 전체 신입생 총원율은 2019년 97.0%, 2020년 93.0%, 2021년 82.7%이며, 연평균증감률은 -7.66%로 감소 추세이다(대학알리미(2022a), 〈표 2-25〉 참조).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190개 대학교의 전체 신입생 총원율은 2019년 93.6%, 2020년 93.9%, 2021년 87.4%이며, 연평균증감률은 -3.0%로 감소 추세이지만, 전문대학에 비해 감소 폭이 적게 나타났다(대학알리미(2022e), 〈부록 1-2〉 참조).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기준 서울 98.1%, 전북 92.1%, 울산 91.9%, 인천 91.4%, 광주 90.1%, 대구 87.9%, 경북 84.3%, 경남 81.6%, 경기 81.5% 순이었다(〈표 2-25〉 참조). 2019년에는 서울, 인천, 울산, 세종에서 신입생을 100% 충원했던 데 반해 2020년에는 서울과 인천뿐이었고, 2021년에는 전 지역에서 100% 신입생 충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증감률은 모든 지역이 감소 추세로, 충북 -13.96%, 제주 -12.2%, 세종 -11.63%, 충남 -11.35%, 부산 -10.41%, 경기 -9.68% 순으로, 수도권인 경기 지역의 충원율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알리미, 2022a).

〈표 2-25〉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평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00.0	100.0	98.1	-0.95
부산	94.2	85.6	75.6	-10.41
대구	97.7	92.5	87.9	-5.15
인천	100.0	100.0	91.4	-4.4
광주	99.8	97.1	90.1	-4.98
대전	99.3	89.7	68.6	-16.88
울산	100.0	96.8	91.9	-4.14
세종	100.0	95.8	78.1	-11.63
강원	94.1	90.5	80.3	-7.62
경기	99.9	97.2	81.5	-9.68
충북	97.0	86.7	71.8	-13.96
충남	96.7	86.4	76.0	-11.35
전북	99.0	96.9	92.1	-3.55
전남	88.5	88.3	79.5	-5.22
경북	90.6	89.9	84.3	-3.54
경남	93.6	87.6	81.6	-6.63
제주	99.5	93.1	76.7	-12.2
전체	97.0	93.2	82.7	-7.66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2021년 전문대학의 전체 학과 중 입학정원이 있는 학과의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예·체능계열 89.4%, 자연과학계열 85.5%, 인문·사회계열 80.0%, 공학계열 78.6% 순이었다(〈표 2-26〉 참조). 2019년에는 예·체능계열 98.2%, 공학계열 97.3%, 자연과학계열 96.8%, 인문·사회계열 96.3% 순이었던데 반해 공학계열의 평균 신입생 충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입생 충원율의 연평균증감률을 살펴보면 4개 계열 모두 신입생 충원율은 감소 추세이며, 공학계열 -10.12%, 인문·사회계열 -8.86%, 자연과학계열 -6.02%, 예·체능계열 -4.59% 순으로 공학계열의 감소 추세가 가장 높았다(대학알리미, 2022a).

〈표 2-26〉 계열별 신입생 충원율(평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인문·사회계열	96.3	93.0	80.0	-8.86
자연과학계열	96.8	93.6	85.5	-6.02
예·체능계열	98.2	97.1	89.4	-4.59
공학계열	97.3	90.7	78.6	-10.12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라. 지역별·계열별 경쟁률

전문대학 133개 전체 경쟁률은 2019년 8.8대 1, 2020년 8.0대 1, 2021년 6.1대 1이며, 연평균증감률은 -16.74%로 감소 추세이다(대학알리미(2022a), 〈표 2-27〉 참조).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190개 대학교의 전체 경쟁률은 2019년

7.2대 1, 2020년 6.8대 1, 2021년 6.1대 1이며, 연평균증감률은 -8.0%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대학알리미(2022a), <부록 1-3> 참조).

지역별 경쟁률은 2021년 기준 서울 9.3, 경기 8.4, 부산 8.0, 울산 7.8, 인천 7.5, 대구 6.0, 충남 5.0, 광주 4.7, 대전 4.6 순으로, 수도권은 7대 1 이상이었으며 제주의 경우 1.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표 2-27> 참조). 2019년에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에서 경쟁률이 10대 1을 웃돈 반면, 2020년에는 서울, 부산, 경기 지역뿐이었고, 2021년에는 10대 1 이상의 지역이 없었다. 연평균증감률은 울산이 10.4%로 유일하게 증가 추세였고, 그 외 지역은 감소 추세로, 대전 -23.21%, 충북 -21.68%, 충남 -20.44% 순이고 서울도 -17.61%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알리미, 2022a).

〈표 2-27〉 지역별 경쟁률(평균)

(단위: 대 1,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3.7	11.4	9.3	-17.61
부산	11.7	11.0	8.0	-17.31
대구	7.2	7.2	6.0	-8.71
인천	11.7	10.3	7.5	-19.94
광주	5.4	5.5	4.7	-6.71
대전	7.8	6.9	4.6	-23.21
울산	6.4	7.8	7.8	10.4
세종	5.7	5.8	4.0	-16.23
강원	5.2	5.0	3.4	-19.14
경기	12.4	11.0	8.4	-17.69
충북	7.5	7.0	4.6	-21.68
충남	7.9	7.2	5.0	-20.44
전북	5.1	4.6	3.5	-17.16

50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전남	3.3	2.9	2.2	-18.35
경북	4.9	4.9	3.5	-15.48
경남	6.7	5.7	4.7	-16.24
제주	2.8	2.3	1.8	-19.82
전체	8.8	8.0	6.1	-16.74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2021년 전체 133개 전문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자연과학계열 7.4, 예·체능계열 7.3, 인문·사회계열 5.3, 공학계열 4.8 순이었다. 2019년에는 예·체능계열 10.6, 자연과학계열 9.9, 인문·사회계열 8.2, 공학계열 7.4 순으로, 전 계열에 걸쳐 경쟁률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28〉 참조).

평균 경쟁률의 연평균증감률을 살펴보면 4개 계열 모두 감소 추세이며, 인문·사회계열 -19.60%로 감소 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공학계열 -19.46%, 예·체능계열 -17.01%, 자연과학계열 -13.54% 순으로 나타났다(대학알리미, 2022a).

〈표 2-28〉 계열별 경쟁률(평균)

(단위: 대 1,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인문·사회계열	8.2	7.4	5.3	-19.60
자연과학계열	9.9	9.5	7.4	-13.54
예·체능계열	10.6	9.6	7.3	-17.01
공학계열	7.4	6.4	4.8	-19.46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마. 지역별·계열별 취업률 현황

졸업생 취업 관련 분석 대상 전체 학과는 2019년 4,153개, 2020년 4,151개, 2021년 4,134개로 연평균증감률은 -0.23%로 전체 학과 수는 감소 추세이다(〈표 2-29〉 참조).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연평균증감률은 -1.97%로 감소 추세이고, 자연과학계열은 0.66%으로 증가 추세이며, 예·체능계열은 -1.51%로 감소 추세, 공학계열은 1.76%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대학알리미, 2022b).

〈표 2-29〉 졸업생 취업 관련 계열별 분석 대상 학과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인문·사회계열	1,385	1,372	1,331	-1.97
자연과학계열	982	994	995	0.66
예·체능계열	634	614	615	-1.51
공학계열	1,152	1,171	1,193	1.76
전체	4,153	4,151	4,134	-0.23

주: 분석 대상 전문대학은 전체 133개교이며, 주간, 야간을 개별 학과로 처리, 공시 연도 기준임.
 자료: 대학알리미(2022b). 졸업생의 취업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전체 133개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2019년 70.4%, 2020년 69.9%, 2021년 68.0%이며, 연평균증감률은 -1.72%로 감소 추세이다(〈표 2-30〉 참조).

지역별 평균 취업률은 2021년 기준 울산 73.6%, 전북 72.7%, 광주 71.8%, 충북 71.3%, 충남 71.2%, 제주 70.9%, 강원 70.5%, 경북 69.6%, 세종 69.1% 순이었으며, 서울이 63.4%로 가장 낮았다. 연평균증감률은 서

52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을 -4.56%, 인천 -3.38%, 제주 -3.16%, 울산 -2.99%, 대구 -2.8%, 경남 -2.56% 순으로, 서울 지역의 취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알리미, 2022b).

〈표 2-30〉 지역별 취업률(평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69.6	66.5	63.4	-4.56
부산	66.5	67.4	65.2	-0.98
대구	70.7	69.7	66.8	-2.80
인천	70.8	69.9	66.1	-3.38
광주	74.1	73.2	71.8	-1.56
대전	69.4	70.3	66.2	-2.33
울산	78.2	78.1	73.6	-2.99
세종	69.7	67.8	69.1	-0.43
강원	67.7	70.3	70.5	2.05
경기	71.2	70.5	68.5	-1.91
충북	70.3	73.3	71.3	0.71
충남	72.3	73.1	71.2	-0.76
전북	69.1	69.8	72.7	2.57
전남	68.3	69.1	66.5	-1.33
경북	70.4	69.6	69.6	-0.57
경남	69.3	67.2	65.8	-2.56
제주	75.6	74.2	70.9	-3.16
전체	70.4	69.9	68.0	-1.72

자료: 대학알리미(2022b). 졸업생의 취업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2021년 전공계열별 평균 취업률은 자연과학계열 72.7%, 공학계열 68.7%, 인문사회계열 66.2%, 예·체능계열 63.2% 순이며, 연평균증감률은 공학계

열 -2.11%, 인문·사회계열 -1.98%, 예·체능계열 -1.92%, 자연과학계열 -0.95% 순으로 모든 계열의 취업률이 감소 추세이며 그중 공학계열의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대학알리미(2022b), <표 2-31> 참조).

2021년 공시 기준, 취업률이 낮은 학과로 인문·사회계열은 호텔경영과, 사회복지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등이 있으며, 자연과학계열은 안경광학과, 헤어과, 애완동물의료과, 호텔조리과 등이 있었고, 예·체능계열에서는 스포츠레저과, 미용과, 실용음악과, 연기과 등이 있으며, 공학계열에서는 조선기술과, 항공기술과 등이었다(대학알리미, 2022b).

<표 2-31> 계열별 취업률(평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인문·사회계열	68.9	67.6	66.2	-1.98
자연과학계열	74.1	74.6	72.7	-0.95
예·체능계열	65.7	65.9	63.2	-1.92
공학계열	71.7	70.8	68.7	-2.11

자료: 대학알리미(2022b). 졸업생의 취업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제3절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에 대한 시사점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전체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보건, 음식,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하며,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에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취업자 전망에서는 보건·복지·돌봄 관련 종사자, 공학기술직, 정보통신기술직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전망되었고, 매장 판매직, 기계조작직, 영업직 등에서 감소가 전망되었다.

전문대학의 계열별 입학정원은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은 감소 추세이고, 자연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계열별 학과는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에서 학과 수가 증가하였고, 취업률은 모든 계열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문대학과 관련한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및 학과의 구조조정을 통해 입학정원 감축에 노력해 왔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자원 확보에 대한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는 4년제 대학교와 구조조정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수도권 대학 등과 일정 부분 협의를 통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크게 보면 입학할 대상의 요구와 졸업 후 취업할 산업사회의

요구 등이 대표적일 것이며, 대학 입장에서는 인프라(교수, 시설, 설비 등)의 구축 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의 일부는 산업사회의 요구와 불일치하는 학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신설 학과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요구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교육과정의 변경 없이 학과의 명칭 변경만으로 학과의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 자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신설에 있어서는 산업사회의 요구³⁾와 지역산업과의 연계⁴⁾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산업체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에서는 이미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주문식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학과 신설에서 적용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넷째,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관련 분야의 취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교육수요 및 사회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급하게 구조조정한다면 추후 취업과의 연계성이 불분명하여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수요 및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되, 향후 취업과 연계되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과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하나의 예로 관계부처 합동·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가 발표한 '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에서는 11개 분야의 22개 과제를 제시함.

4)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자체별 지역발전 계획 등

제3장

전문대학 구조개혁의 정책 및 제도 분석

제1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분석

제2절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제3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

제3장 | 전문대학 구조개혁의 정책 및 제도 분석

제1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분석

1. 노무현 정부(2003.2.~2008.2.)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2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했다. 국립대학은 의무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했고, 사립대학은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연계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7-19 내용 재구성).

우선 국립대학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2009년까지 입학정원 15%를 감축하되, 2007년까지 10% 감축 계획을 우선 제출하도록 했다. 통·폐합 정책도 추진했는데, 대학과 대학 통합 시 입학정원 20% 이상, 대학과 전문대학 통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 60% 이상, 대학과 산업대학 통합 시 입학정원 25% 이상을 감축하도록 했다. 국립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폐합 대학 1교당 200억 원가량 재정 지원을 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7-19 내용 재구성).

사립대학은 대학 교육의 최소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전임교원 확

보 준수 목표를 설정하고, 2009년 이후 기준 미달 대학은 정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04년 대비 2006년 학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대학은 ‘구조개혁 선도대학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부터 교원(겸임·초빙 포함)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7-19 내용 재구성).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정부 시기(2003~2008년) 대학 수는 13교 줄고, 입학정원은 7만 1천 명 감소(-10.9%)했다. 이 시기 특징은 전문대학, 국·공립대학, 지방대학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4년제 대학은 3개교가 줄고, 입학정원이 2만 명(-5.5%) 줄어든 반면 전문대학은 10개교가 줄고, 입학정원이 5만 1천 명(-17.9%) 줄었다. 전문대학이 주로 4년제 대학에 통·폐합되면서 학교 수와 입학정원 감소 폭이 컸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설립별로는 국·공립은 학교 수가 11교 줄고, 입학정원이 1만 3천 명 감소해 감축률이 13.1%였다. 사립은 2교 줄고, 입학정원이 5만 8천 명 줄어 감축률이 10.5%였다. 상대적으로 정책 집행이 수월한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정원 의무감축과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개교, 입학정원 1만 명(-4.8%) 감소한 반면, 지방은 10개교가 줄고, 입학정원 6만 명(-14.0%)이 감소했다. 비광역시 정원 감축률이 14.8%(4만 1천 명)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12.5%(1만 9천 명), 서울 7.2%(7천 명), 경기·인천 2.9%(4천 명) 순이었다. 비광역시 소재 대학이 주로 통·폐합 대상이 되거나,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지역 또한 ‘구조개혁 선도대학지원사업’에 참여한 대규모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진행한 결과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표 3-1〉 2003~2008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단위: 학교 수, 명, %)

구분	2003년		2008년		증감(2003-2008)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 수		입학정원			
					학교수	증감률	인원	증감률		
전체	357	653,170	344	582,036	-13	-3.6	-71,134	-10.9		
유형	대학	200	368,386	197	348,307	-3	-1.5	-20,079	-5.5	
	전문	157	284,784	147	233,729	-10	-6.4	-51,055	-17.9	
설립	국공립	61	98,460	50	85,604	-11	-18.0	-12,856	-13.1	
	사립	296	554,710	294	496,432	-2	-0.7	-58,278	-10.5	
지역	수도권	서울	52	94,622	49	87,810	-3	-5.8	-6,812	-7.2
		경기/인천	71	125,785	71	122,108	0	0.0	-3,677	-2.9
		소계	123	220,407	120	209,918	-3	-2.4	-10,489	-4.8
	지방	광역시	67	155,106	67	135,649	0	0.0	-19,457	-12.5
		비광역시	167	277,657	157	236,469	-10	-6.0	-41,188	-14.8
		소계	234	432,763	224	372,118	-10	-4.3	-60,645	-14.0
		수도권	123	220,407	120	209,918	-3	-2.4	-10,489	-4.8
권역	충청권	55	107,974	53	97,723	-2	-3.6	-10,251	-9.5	
	전라권	60	95,302	57	77,301	-3	-5.0	-18,001	-18.9	
	부울경권	46	96,066	45	84,837	-1	-2.2	-11,229	-11.7	
	대경권	47	93,754	46	77,779	-1	-2.1	-15,975	-17.0	
	강원권	20	31,030	18	27,098	-2	-10.0	-3,932	-12.7	
	제주권	6	8,637	5	7,380	-1	-16.7	-1,257	-14.6	

주: 1) 대상: 국·공·사립 일반·산업·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2) 지역 및 권역: 학교 수는 본교 기준이며, 입학정원은 본교, 분교, 캠퍼스 각 소재지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2b).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2.10.21.

한편, 노무현 정부 시기 통·폐합되거나 폐교된 대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립산업대 4교, 교대 1교, 전문대 5교와 공립전문대 1교가 통·폐합되었으며, 사립은 전문대학 6교가 통·폐합되고, 아시아대 1교가 폐교됐다(대학알리미, 2022f).

〈표 3-2〉 2003~2008년 대학 통·폐합 및 폐교 현황

연번	통·폐합 이전						통·폐합 이후			
	대학1			대학2			연도	설립	유형	대학명
	설립	유형	대학명	설립	유형	대학명				
1	공립	전문	담양대	공립	전문	남도대	2004	공립	전문	전남도립대
2	국립	일반	공주대	국립	전문	천안공대	2005	국립	일반	공주대
3	국립	산업	충주대	국립	전문	청주과학대	2006	국립	산업	충주대
4	국립	일반	강원대	국립	산업	삼척대	2006	국립	일반	강원대
5	국립	일반	부산대	국립	산업	밀양대	2006	국립	일반	부산대
6	국립	일반	전남대	국립	산업	여수대	2006	국립	일반	전남대
7	국립	일반	강릉대	국립	전문	원주대	2007	국립	일반	강릉원주대
8	국립	일반	경북대	국립	산업	상주대	2008	국립	일반	경북대
9	국립	일반	제주대	국립	교육	제주교대	2008	국립	일반	제주대
10	국립	일반	전북대	국립	전문	익산대	2008	국립	일반	전북대
11	사립	일반	가천의과대	사립	전문	가천길대	2006	사립	일반	가천의과대
12	사립	일반	고려대	사립	전문	고대병설보건대	2006	사립	일반	고려대
13	사립	산업	동명정보대	사립	전문	동명대	2006	사립	일반	동명대
14	사립	일반	삼육대	사립	전문	삼육의명대	2006	사립	일반	삼육대
15	사립	일반	경원대	사립	전문	경원전문대	2007	사립	일반	경원대
16	사립	일반	을지대	사립	전문	서울보건대	2007	사립	일반	을지대
17	사립	일반	성신여대	국립	전문	국립의료간호대	2007	사립	일반	성신여대

자료: 대학알리미(2022f).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검색일: 2022.10.21.

2. 이명박 정부(2008.2.~2013.2.)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이명박 정부는 2009년 2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소재의 사립대학들의 충원율이 떨어지면서 많은 부실대학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대학이 자발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 5월에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2009년부터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2010년부터는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1년 7월에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경영부실 사립대에 대한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부실대학’ 평가 기준 마련, 2단계로 부실대학 판정 및 단기적 행·재정 조치, 3단계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시행, 4단계로 부실 지속 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4-8 내용 재구성).

2011년부터는 평가 결과 하위 15%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최하위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학교 선택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부실대학 명단 공개, 자발적 해산 촉진, 여건이 미흡한 법인의 강제 해산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미약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4-8 내용 재구성).

그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4개 대학 및 전문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6개 대학 및 전문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26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6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이 폐교됐다(대학교육연구소, 2014).

국립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0)에 따라, 총장 직선제 개선과 총장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평가 순위 하위권 대학을 ‘특별관리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2011년 9월 평가 순위 하위 15%이면서 총장 직선제 폐지 등을 거부한 5개교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한 대학은 지정에서 유예시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장국영, 2012).

한편, 이명박 정부는 2012년 3월 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학이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면 교육부장관이 총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8년에서 2013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일반대학은 1개 증가, 전문대학은 8개 감소로 총 대학 수는 7개교 감소하고, 입학정원은 3만 6천 명 감소(-6.2%)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이 시기는 평가를 통한 하위 대학 퇴출 시스템을 마련했고, 이로 인해 전문대학, 사립대학, 지방대학 중심으로 정원이 감축됐다. 4년제 대학은 1개교가 늘어, 입학정원도 2천 명(-0.6%) 감소에 그쳤다. 전문대학은 8개교, 입학정원 3만 4천 명(-14.6%) 줄어 정원 감축의 전문대학 쏠림이 극심하게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설립별로 국·공립은 1개교, 입학정원이 4천 명(-4.3%) 줄었다. 사립은 6개교, 입학정원이 3만 3천 명(-6.6%) 줄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지역별로 보면,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2만 8천 명 줄어 -7.6%의 감축률을 보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2011~2014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폐교된 대학은 모두 지방 소규모 대학이었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의 77%,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의 87%, ‘경영부실대학’의 85%가 지방대학일 정도로 지방대학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대학교육연구소, 2014). 반면, 서울지역은 1교가 감소했음에도 3천 명의 입학정원이 증가했다. 이는 서울지역 대다수 대학이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외대와 경희대가 경기 지역 분교를 서울 본교와 통합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정원 감축률이 1.9%로 가장 낮았는데, 충청 지역은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 수가 많아 감축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2009년 중원대가 설립됐기 때문이다. 전라권(-13.1%), 대경권(-10.9%), 제주권(-18.0%)은 감축률이 10%를 웃돌았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표 3-3〉 2008~2013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단위: 학교 수, 명, %)

구분	2008년		2013년		증감(2008-2013)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 수		입학정원			
					학교수	증감률	인원	증감률		
전체	344	582,036	337	545,822	-7	-2.0	-36,214	-6.2		
유형	대학	197	348,307	198	346,243	1	0.5	-2,064	-0.6	
	전문	147	233,729	139	199,579	-8	-5.4	-34,150	-14.6	
설립	국공립	50	85,604	49	81,965	-1	-2.0	-3,639	-4.3	
	사립	294	496,432	288	463,857	-6	-2.0	-32,575	-6.6	
지역	수도권	서울	49	87,810	48	90,771	-1	-2.0	2,961	3.4
		경기인천	71	122,108	68	111,386	-3	-4.2	-10,722	-8.8
		소계	120	209,918	116	202,157	-4	-3.3	-7,761	-3.7
	지방	광역시	67	135,649	69	134,081	2	3.0	-1,568	-1.2
		비광역시	157	236,469	152	209,584	-5	-3.2	-26,885	-11.4
		소계	224	372,118	221	343,665	-3	-1.3	-28,453	-7.6
권역	수도권	120	209,918	116	202,157	-4	-3.3	-7,761	-3.7	
	충청권	53	97,723	52	95,819	-1	-1.9	-1,904	-1.9	
	전라권	57	77,301	55	67,140	-2	-3.5	-10,161	-13.1	
	부울경권	45	84,837	47	80,346	2	4.4	-4,491	-5.3	
	대경권	46	77,779	45	69,310	-1	-2.2	-8,469	-10.9	
	강원권	18	27,098	18	24,997	0	0.0	-2,101	-7.8	
제주권	5	7,380	4	6,053	-1	-20.0	-1,327	-18.0		

주: 1) 대상: 국·공·사립 일반·산업·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2) 지역 및 권역: 학교 수는 본교 기준이며, 입학정원은 본교, 분교, 캠퍼스 각 소재지 기준

3) 광역시에 세종시 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2b).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2.10.21.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었으며, 국·공립대 통·폐합도 지속했다. 국·공립대학은 인천대(인천대+인천전문대), 한국교통대(충주대+한국철도대)가 통합 대학으로 출범했다. 사립대학은 한국정보통신대가 한국과학기술

술원(특별법법인)에 통합되고, 우송대(우송대+우송공업대), 가천대(가천의과대+경원대), 제주국제대(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 중앙대(중앙대+적십자간호대), 경동대(경동대+동우대)가 통합했다. 이 외에 4개 사립대학이 승격하고, 4개 사립대학이 폐교했다(대학알리미, 2022f).

〈표 3-4〉 2009~2013년 대학 통·폐합 및 폐교 현황

연 번	통·폐합 이전					통·폐합 이후					
	대학 1			대학 2			연도	설립	유형	대학명	
	설립	유형	대학명	설립	유형	대학명					
1	공립	일반	인천대	공립	전문	인천전문대	2010	공립	일반	인천대	
2	국립	일반	충주대	국립	전문	한국철도대	2012	국립	일반	한국교통대	
3	사립	일반	한국정보통신대				2009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통합			
4	사립	산업	우송대	사립	전문	우송공업대	2009	사립	일반	우송대	
5	사립	일반	가천의과대	사립	일반	경원대	2012	사립	일반	가천대	
6	사립	일반	탐라대	사립	전문	제주산업정보대	2012	사립	일반	제주국제대	
7	사립	일반	중앙대	사립	전문	적십자간호대	2012	사립	일반	중앙대	
8	사립	일반	경동대	사립	전문	동우대	2013	사립	일반	경동대	
9	사립	각종	대전신학교	승격			2009	사립	일반	대전신학대	
10	사립	전문	김천대	승격			2009	사립	일반	김천대	
11	사립	전문	송원대	승격			2012	사립	일반	송원대	
12	사립	전문	창신대	승격			2013	사립	일반	창신대	
13	사립	일반	명신대				2012	폐교			
14	사립	전문	성화대				2012	폐교			
15	사립	일반	건동대				2013	폐교			
16	사립	일반	선교청대				2013	폐교			

주: 1) 대상 : 국·공·사립 일반·산업·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2) 통·폐합 이후 연도는 통합 대학 첫해를 뜻함

자료: 대학알리미(2022f).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검색일: 2022.10.21.

3. 박근혜 정부(2013.2.~2017.3.)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정책은 크게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 감축 계획(실적) 반영,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실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구조개혁 기간(2014~2022년)을 3주기로 나눴다.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차등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정원 감축 목표는 1주기(2014~2016년) 4만 명, 2주기(2017~2019년) 5만 명, 3주기(2020~2022년) 7만 명이다(교육부, 2014).

2015년 1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하고, 5개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등 <표 3-5>와 같은 구조개혁 조치를 했다(교육부, 2015).

〈표 3-5〉 박근혜 정부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등급	정원 감축 권고 비율		구조개혁 조치
최우수(A)	자율 감축		•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우수(B)	일부 감축	일반 4% 전문 3%	•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보통(C)	평균 수준 감축	일반 7% 전문 5%	•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미흡(D)	평균 이상 감축	일반 10% 전문 7%	•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매우미흡(E)	대폭 감축	일반 15% 전문 10%	•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I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평가 제외	일반 7% / 전문 5%		•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자료: 1) 교육부(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2) 교육부(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이와 함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에 정원 감축 규모 및 조기 감축 여부 등을 반영해 가산점을 차등 부여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2014년 4월, 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구조개혁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구조개혁 법률안은 많은 논란 속에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표 3-6〉 2013~2018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단위: 교, 명, %)

구분	2013년		2018년		증감(2013-2018)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 수		입학정원			
					학교수	증감률	인원	증감률		
전체	337	545,822	329	484,787	-8	-2.4	-61,035	-11.2		
유형	대학	198	346,243	193	317,323	-5	-2.5	-28,920	-8.4	
	전문	139	199,579	136	167,464	-3	-2.2	-32,115	-16.1	
설립	국공립	49	81,965	48	75,005	-1	-2.0	-6,960	-8.5	
	사립	288	463,857	281	409,782	-7	-2.4	-54,075	-11.7	
지역	수도권	서울	48	90,771	48	87,584	0	0.0	-3,187	-3.5
		경기인천	68	111,386	67	100,368	-1	-1.5	-11,018	-9.9
		소계	116	202,157	115	187,952	-1	-0.9	-14,205	-7.0
	지방	광역시	69	134,081	67	119,176	-2	-2.9	-14,905	-11.1
		비광역시	152	209,584	147	177,659	-5	-3.3	-31,925	-15.2
		소계	221	343,665	214	296,835	-7	-3.2	-46,830	-13.6
권역	수도권	116	202,157	115	187,952	-1	-0.9	-14,205	-7.0	
	충청권	52	95,819	52	84,695	0	0.0	-11,124	-11.6	
	전라권	55	67,140	53	57,475	-2	-3.6	-9,665	-14.4	
	부울경권	47	80,346	46	69,246	-1	-2.1	-11,100	-13.8	
	대경권	45	69,310	42	59,214	-3	-6.7	-10,096	-14.6	
	강원권	18	24,997	17	20,851	-1	-5.6	-4,146	-16.6	
제주권	4	6,053	4	5,354	0	0.0	-699	-11.5		

주: 1) 대상: 국·공·사립 일반·산업·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2) 지역 및 권역: 학교 수는 본교 기준이며, 입학정원은 본교, 분교, 캠퍼스 각 소재지 기준

3) 광역시에 세종시 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2b).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2.10.21.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13~2018년 대학 수는 8개 줄고, 입학정원은 6만 1천 명(-11.2%) 감축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역시 전문대학, 사립대학, 지방대학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진행됐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만 9천 명 줄어 감축률 8.4%를 보인 반면, 전문대학은 3만 2천 명 줄어 감축률이 16.1%였다. 국·공립대(-8.5%)보다는 사립대학(-11.7%) 감축률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7.0%)보다 지방(-13.6%) 감축률이 높았다. 특히 지방 비광역시 감축률이 15.2%로, 서울 3.5%의 4배를 상회했다. 경기·인천 지역 감축률도 9.9%로 서울의 3배였는데,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등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기·인천 지역 대학이 많이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권역별로도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의 입학정원 감축률은 모두 10%를 넘었으며, 강원권 16.6%(4천 명), 대경권 14.6%(1만 명), 전라권 14.4%(1만 명)로 특히 높았다. 박근혜 정부 시기 한북대와 신흥전문대가 신한대로 통합했고(2014년), 경북외국어대, 벽성대(2014년),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 대구미래대(2018년) 등 6개교가 폐교했다(대학알리미, 2022f).

4. 문재인 정부(2017.5.~2022.5.)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계획(시안)’을 발표하고, 1주기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전국 단위 세세한 등급화로 서열화하고, 지역대학 고려가 부족했으며, 재정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 여건 개선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교육부, 2017).

2018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상위 64%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교육부, 2018).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

지고, 2019~2021년 3년간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위 36%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II)’으로 구분했는데,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에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했다.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지방대학을 배려하기 위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미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했다.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결과, 2018~2021년 정원 감축 규모는 1만 2천 명에 그쳤다. 이 영향으로 2021년 대학 입시에서 지방대학 정원 미달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지방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각각 92.3%, 82.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학 미충원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2021년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이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대학도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은 3단계 조치로 관리하며, 수도권과 지방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등이 동반성장하도록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한계 사학’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에서 ‘전체 대학 체계적 관리’로 전환한 것이다(교육부, 2021d).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2018~2021년) 특징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겨 감축 인원이 역대 정부 중 가장 적다는 점이다. 특히 4년제 대학은 247명 감축에 그쳐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전문대학은 1만 2천 명 감축(-7.2%)했다. 설립별로 국·공립 입학정원은 0.8% 늘고, 사립이 3.1%(1만 3천 명) 감소했다. 이 기간 입학정원 감축은 사립전문대학 몫이었음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감축률이 0.3%로 변동이 없었으며, 경기·인천 2.4%(2천 명), 지방 광역시 3.0%(4천 명), 비광역시 3.4%(6천 명) 순

이었다. 권역별로도 수도권(-1.4%)과 충청권(-1.8%)은 감축률이 미미했던 반면, 제주(-6.6%), 강원(-6.5%), 부울경(-4.9%)은 상대적으로 높았다(한국교육개발원, 2022b).

〈표 3-7〉 2018~2021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단위: 교, 명, %)

구분		2018년		2021년		증감(2018-2021)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 수		입학정원		
						학교수	증감률	인원	증감률	
전체		329	484,787	325	472,496	-4	-1.2	-12,291	-2.5	
유형	대학	193	317,323	192	317,076	-1	-0.5	-247	-0.1	
	전문	136	167,464	133	155,420	-3	-2.2	-12,044	-7.2	
설립	국공립	48	75,005	47	75,595	-1	-2.1	590	0.8	
	사립	281	409,782	278	396,901	-3	-1.1	-12,881	-3.1	
지역	수도권	서울	48	87,584	48	87,345	0	0.0	-239	-0.3
		경기인천	67	100,368	67	97,961	0	0.0	-2,407	-2.4
		소계	115	187,952	115	185,306	0	0.0	-2,646	-1.4
	지방	광역시	67	119,176	66	115,612	-1	-1.5	-3,564	-3.0
		비광역시	147	177,659	144	171,578	-3	-2.0	-6,081	-3.4
		소계	214	296,835	210	287,190	-4	-1.9	-9,645	-3.2
권역	수도권	115	187,952	115	185,306	0	0.0	-2,646	-1.4	
	충청권	52	84,695	52	83,144	0	0.0	-1,551	-1.8	
	전라권	53	57,475	52	55,663	-1	-1.9	-1,812	-3.2	
	부울경권	46	69,246	44	65,855	-2	-4.3	-3,391	-4.9	
	대경권	42	59,214	42	58,027	0	0.0	-1,187	-2.0	
	강원권	17	20,851	16	19,501	-1	-5.9	-1,350	-6.5	
제주권	4	5,354	4	5,000	0	0.0	-354	-6.6		

주: 1) 대상: 국·공·사립 일반·산업·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2) 지역 및 권역: 학교 수는 본교 기준이며, 입학정원은 본교, 분교, 캠퍼스 각 소재지 기준

3) 광역시에 세종시 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2b).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2.10.21.

이 기간에 상지대(상지대+상지전문대, 2020년), 경상국립대(경상대+경남과학기술대, 2021년)가 통합했고, 사립전문대학인 동부산대(2020년)와 서해대(2021년)가 폐교했다(대학알리미, 2022f).

제2절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1. 노무현 정부(2003.2.~2008.2.)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노무현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교육혁신위원회, 2005)’을 통해 ‘일·학습·삶’이 하나가 되는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 ‘직능 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중 전문대학 관련 정책은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혁신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업계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 제도’ 도입, 전문대학의 ‘지역사회계속교육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문대학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춘 직업교육 방안이 추진되어 전문대학의 제도와 역량은 발전되지 못했다.

가. 재정지원사업 단순화

1998년 12개까지 추진되었던 재정지원사업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며 대부분 특성화사업으로 통합되고 주문식교육사업과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만 남게 되었다. 일반 재정 지원의 축소로 이들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나. 대학 산학협력 조직 강화

전문대학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중시하여

일찍이 본부 조직에 산학협력처를 설치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4년 대학 및 전문대학에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전문대학은 이미 산학협력처가 설치되어 주문식교육과 같은 산학협력 기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대학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외 연구나 개발 사업이 거의 없는 전문대학으로서는 굳이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국고가 산학협력단으로 교부됨으로써 거의 모든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였다. 산학협력단은 독립법인으로 교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사업의 성격상 국고 지원비는 사업목적을 위해 집행해야 하고 간접비도 없다.⁵⁾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이 산학협력단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아 학교 조직에 산학협력처를 유지하면서 산학협력처의 처장이나 직원이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거의 유사한 성격의 부서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과 애매한 업무 경계, 예산 운영 과정에서 비의도적인 위법 사항 발생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전문대학의 산학협력을 위한 지원은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사업’이 유일하였고, ‘주문식교육사업’과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에서 부분적 세부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2005년 12월에 교육부 직제 중 전문대학을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전문대학정책과가 신설되어 전문대학은 비로소 전문대학 관련 정책을 주무할 수 있는 부서를 갖게 되었다.⁶⁾

5) 국고지원사업에 간접비가 허용된 것은 2014년에 시작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부터임.

6) 2021년 4월 현재는 고등교육정책실 산하 직업교육정책관 전문대학정책과와 전문대학지원과 2개과가 전문대학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이명박 정부(2008.2.~2013.2.)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가. 고등 단계 직업교육 정책 부재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일반대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고등 단계 직업교육 및 전문대학 육성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일 연계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이라는 추진 과제에서도 마이스터고교나 특성화고교 등 중등 단계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및 투자는 이루어졌으나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위상이 위축되었다.

나. 재정지원사업 축소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문대학에 대한 새로운 재정 지원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주문식교육사업’이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산학협력중점전문대학 사업(LINC)’에 포함되어 각 대학의 사업단에 진행하는 하나의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특성화사업은 종료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하여 진행되었고,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산학협력중점전문대학 사업(LINC)’으로 사업명을 바꾸어 진행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보완하여 재정지원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을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산학협력중점전문대학 사업(LINC)’ 외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없고, 재정 지원 규모도 적어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정체된 시기라 할 수 있다.

3. 박근혜 정부(2013.2.~2017.3.)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가. 대학 구조개혁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문민정부부터 꾸준히 추진된 정책으로 그 핵심은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과 미래 유망 산업으로의 학과 개편에 있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 시행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수와 입학정원이 큰 폭으로 감축되었다. 1주기 구조개혁 정책 실행을 통해 대학 입학정원은 총 40,733명이 감축되었는데 입학정원 감축 비율이 일반대학은 6.4%, 전문대학은 10.4%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비율이 4% 높게 나타났다(이정표 외, 2021⁷⁾).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고, 학과 개편을 통해 강점이 있는 계열에 집중하였다.

나.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전문대학 육성

대학 교육 혁신의 한 방안으로 능력 중심의 직업교육이 강조되면서 ‘고등 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전문대학 육성 방안’이 마련되고 5대 핵심 과제 즉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산업명장 기술대학원 육성,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등 이전 정부에 비해 전문대학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7) 전문대학은 1999년 161개교를 정점으로 24개 대학이 줄어 2019년에는 137개교로 감소하였음. 반면 일반대학은 동 기간 158개교에서 191개교로 33개교가 증가했음.

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 과제는 이전 재정지원사업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전문대학에 가장 큰 규모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포함)이라는 재정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핵심은 강점이 있는 계열 특성화로 1개 계열 특성화에 집중하는 단일 산업 분야(I유형)와 2개 계열에 집중하는 복합 산업 분야(II유형), 특성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프로그램 특성화(III유형), 그리고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평생직업교육대학 모델을 구축·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IV유형)으로 특성화를 추진하였다. 5년간 총 1조 3,7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4년 78개 대학을 선정한 이후 추가 선정 및 탈락을 거쳐 2018년 82개 전문대학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였다(이정표 외, 2021).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조기 퇴진과 더불어 다섯 가지 과제 중 세개로 프로젝트는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과 참여대학으로 사업이 확산되지 못하고 2018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후 전문대학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사업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⁸⁾,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와 산업 기술명장대학원 육성은 끝내 추진되지 못했다.

8) WCC 사업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2018년까지 지속되고 이 역시 종료됨.

4. 문재인 정부(2017.5.~2022.5.)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가. 전문대학 혁신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라는 국정과제 52-4를 발표하였고, 「대학 혁신 지원 방안」(2019.8)에서는 전문대학 혁신을 위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 직종과 연관된 현장성 높은 실무교육 및 교수-학습 방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 정립을 위해 ‘전문대학 혁신 방안’을 수립하였다.

2019년 12월 발표된 「전문대학 혁신 방안」에서는 추진 과제 및 세부 과제로 ①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미래 신직업 수요 대비 교육과정 혁신과 중등-고등 단계 직업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②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⁹⁾과 새로운 고등 직업교육 모델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하고, ③ 미래 사회 대응 직업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효율적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9).

2020년 9월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대학 혁신의 대전환 계기로 만들기 위해 ① 대학 간 협업과 공유를 통한 혁신 지원, ②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인재양성, ③ 미래 역량을 기르는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④ ‘뉴노멀’ 원격교육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0).

9) 규제 개선에는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상한 기준 완화,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조건 개선, 외부 시설을 활용한 단기 직업교육 허용, 성인학습자 단기 직업교육과정 학점 인정 추진 등이 담겨 있음(pp. 7-12).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된 대학 혁신 방안 중 전문대학 혁신 방안에서 제시한 추진 과제가 구체화되어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사업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① 전문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를 수여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이를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2021~2022), ②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의 신산업 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신산업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2021~2022년)이 추진되고 있어 전문대학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 고도화의 기회가 주어졌다.¹⁰⁾

나.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12월 17일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19~’23) 수정(안)」과 동시에 발표된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 방안」(’20.12.17.)에 기반하여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연계되어 실행 단계에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관계부처 합동, 2020).

- LINC, LINC+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을 추진하며(’22~), 여기에 공동현장실습 플랫폼 구축을 포함.
- 신규 사업으로 대학 간 협업과 공유를 통한 혁신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21.2.24.)은 4~7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

10)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21.3월에 총 120억 원(교당 10억 원)의 예산으로 12개 대학을 3년간 지원하는 기본계획이 공지되었고,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사업은 ’21.2월에 총 100억 원(교당 20억 원)의 예산으로 5개 대학을 2년간 지원하는 기본계획이 공지됨.

- 전문대학 혁신에 포함된 ‘신산업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21~’22)과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사업’(‘21~’22)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 영역으로 포함할 경우 이전에 비해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지역산업발전전략을 연계한 인력양성을 강조한 이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과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고등교육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전문대학은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제한되어 소극적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전문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대학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RIS)(2014~2018년),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간 연계·협력형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19~’23)은 지방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대학은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20~’21)은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다각적 협업의 장으로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문대학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재정지원사업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 전문대학이 참여할 기회는 거의 없었으며 최근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전문대학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라.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평생교육은 문민정부 이래 교육개혁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왔는데, 평균수명 증가, 직업수명 단축, 신기술 기반 산업 발전 등으로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평생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 함께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이 발표(2018.7.)되고,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 방안」(2020)이 발표되는 등 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 단계에서 평생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III유형 후진학 선도형 사업,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은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방향성이 '평생직업교육'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을 비추어 볼 때 전문대학을 활용한 고등직업교육 수준의 평생교육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대표적인 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014~2018년)의 IV유형(평생직업교육대학유형)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10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학위·비학위 통합 학사운영체제 개편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선행학습인정제, 학점당등록제, 학습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평생직업교육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끝난 후 그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사업의 성과가 확대되지 못했다. 또한 참여대학은 평균 입학정원 34% 감축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일시적 재정 지원을 받고 대체할 수 없는 경영적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이정표 외, 2021).

후속적으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후진학 선도형 사업(Ⅲ유형)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제3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

2003~2022년까지 4개 정부에서 진행된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가올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대학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학들이 참여하여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각 정부에서 진행된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를 전문대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2003~2022년 4개 정부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주요 내용과 성과

정부	구조개혁 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노무현 정부 (2003.2.~ 2008.2.)	<p>[구조개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정부의 소득 2만 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대통령 보고 시 구조조정 논의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고등교육 정책과 동반하여 대학 구조개혁 추진 <p>[구조개혁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전문대학을 국립일반대학과 통합 • 사립전문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 '04년 대비 '06년도 입학정원의 10% 감축 대학에 한해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국·공립대학, 지방대학 중심으로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 3개교, 입학정원 2만 명(-5.5%) 감소 - 전문대 10개교, 입학정원 7만 1천 명(-17.9%) 감소 • 국립전문대학의 급격한 소멸 • 근본적 해결보다는 국립대학 중심의 순위를 구조조정
이명박 정부 (2008.2.~ 2013.2.)	<p>[구조개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학 미충원율 급증과 다수 부실대학 출현 예상 • 대학이 자율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구조조정 기반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사립대학, 지방대학 중심 정원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학은 1개교가 늘어, 입학정원도 2천 명(-0.6%) 감소에 그침

정부	구조개혁 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p>[구조개혁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대학 평가기준 마련 • 대학 평가를 통한 부실대학 판정 • 평가 결과 하위 15%를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 이 중에서 최하위를 '학자 급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공개 •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은 8개교, 입학 정원 3만 4천 명(-14.6%) 감소 • 전문대학 축소로의 쓸림이 극심하게 진행
<p>박근혜 정부 (2013.2.~ 2017.3.)</p>	<p>[구조개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입학자원이 급감, 대학들의 미충원 확산 가시화 •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요구 증가 •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우려.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부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p>[구조개혁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기에 걸친 입학정원 감축 추진 • 1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하고, 5개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실시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대학 구조개혁, 자발적 퇴출 대학의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정부 시기 역시 전문대학, 사립대학, 지방대학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진행 - 일반대학 입학정원은 2만 9천 명 감소(-8.4%) - 전문대학은 3만 2천 명 감소(-16.1%)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폐기로 한계 대학의 자발적 퇴출 유도(잔여재산 처분 특례) 근거 마련 실패
<p>문재인 정부 (2017.5.~ 2022.5.)</p>	<p>[구조개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기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전국 단위 세세한 등급화로 서열화하고, 지역대학 고려가 부족했으며, 재정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 여건 개선이 미흡했다고 평가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심화,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고등교육 신뢰 회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자율에 맡겨 감축 인원이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음 • 전문대학 중심의 감축은 여전히 추세 - 일반대학은 247명 감축에 그쳐 거의 변동 없음 - 전문대학은 1만 2천 명 감소(-7.2%)

84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정부	구조개혁 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구조개혁 주요 내용] •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상위 64%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로 진행 • 하위 36%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 지원제한대학(유형 I·II)'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정원 감축 권고	

자료: 3장 1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각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의 구조개혁과 함께 대학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였다.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왔다. 각 정부에서 진행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2003~2022년 4개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과 성과

정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노무현 정부 (2003.2.~ 2008.2.)	[특성화사업] • 기존에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통합 [주문식교육사업] • 주문식교육은 특성화사업과는 별도로 추진 •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애로기술 개발 지원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 기존에 진행되어 온 '산학협력촉진사업'을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12개까지 추진되었던 재정지원사업을 3개의 사업으로 통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4년 대학 및 전문대학에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기 시작 • 2005년에 교육부 직제 중 전문대학을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전문대학정책과 신설

정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p>이명박 정부 (2008.2.~ 201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사업과 주문식교육사업 종료 <p>[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2009.3) • 2009~2011년간 13개 대학에 연간 80억 지원(대학별 5~7억 지원) • 산학협력 체제 구축,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중소기업 애로기술 개발 및 지도 등 • 2단계 사업 종료 후 2012년부터 LINC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지속 <p>[교육역량강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에 500억 규모로 시작하여, 2009년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과 'NURI사업(전문대)'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통합되면서 예산이 2,310억으로 확대 • 창의적 우수 인재 양성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퓰러 펀딩 방식의 재정 지원 • 자율적 재정 집행 보장, 분야별 특성화 추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함 • '교육역량 우수대학지원사업'과 '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지원'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정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대학 지원 정책은 일반대학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면서, 이 시기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위축됨 •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대학의 교육 여건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로 구성된 공식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포퓰러 펀딩' 방식과 지원된 예산은 용처의 지정 없이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되어, 대학의 장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블록 펀딩' 방식 도입
<p>박근혜 정부 (2013.2.~ 2017.3.)</p>	<p>[전문대학 육성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전문대학 육성 방안'이 마련 • 5대 핵심 과제 추진 :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산업명장기술대학원 육성,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p>[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계열을 특성화하는 I 유형, 2개 계열에 집중하는 II 유형, 특성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III 유형,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대학 모델을 구축하는 IV 유형으로 구분 • 5년간 총 1조 3,729억 원의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14년 78개 대학을 선정한 이후 추가 선정 및 탈락을 거쳐 2018년 82개 전문대학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참여 •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산업명장기술대학원 육성은 추진되지 못함 • LINC사업은 기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산학협력을 보다 고도화하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지역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원

정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시행된 본 사업은 기존의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기반 추진 • 산학협력 선도형 10개(교당 5~6억 원), 현장실습 집중형 20개(교당 1~3억 원)를 선정하여 추진(연간 120억 원) 	
문재인 정부 (2017.5.~202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자율개선대학 87개교는 자율협약형으로 2,610억 원 지원, 역량강화대학은 신청 대학 중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130억 지원 • 일부 자율개선대학은 평가를 통해 15개교를 '후진학 선도형'으로 추가 지원(150억)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2021년 5년간 매년 약 888억 지원 • 산학협력 고도화형 10개교,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20개교 선정 *사회맞춤형 학과: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채용연계를 위한 채용약정이 이루어진 학과·전공·트랙 등의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기본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이 시대적 요구와 산업 및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혁신하도록 지원 • LINC+사업은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역 산업체와 대학 간 협력을 보다 긴밀해지도록 지원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에서도 석사 수준(전문기술석사학위 취득)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사업(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에 석사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5개 대학에 100억 지원 	

자료: 3장 2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이상의 정부 주도의 전문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구조조정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균형적인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문대

학의 구조조정에 치우쳐 진행되었다. 4개 정부별 축소 규모를 비교하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고등교육기관의 수와 입학정원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대학의 대학 수와 입학정원 축소 비율 모두 전문대학에 비해 작은 규모로 이뤄졌다.

〈표 3-10〉 2003~2021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조조정 규모 비교

(단위: 교, 명, %)

구분	노무현 정부 (2003-2008)		이명박 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 (2013-2018)		문재인 정부 (2018-2021)	
	학교 수 (증감률)	입학정원 (증감률)	학교 수 (증감률)	입학정원 (증감률)	학교 수 (증감률)	입학정원 (증감률)	학교 수 (증감률)	입학정원 (증감률)
일반대학	-3 (-1.5)	-20,079 (-5.5)	1 (0.5)	-2,064 (-0.6)	-5 (-2.5)	-28,920 (-8.4)	-1 (-0.5)	-247 (-0.1)
전문대학	-10 (-6.4)	-51,055 (-17.9)	-8 (-5.4)	-34,150 (-14.6)	-3 (-2.2)	-32,115 (-16.1)	-3 (-2.2)	-12,044 (-7.2)

자료: 대학알리미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각 정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으로 대학의 질과 상관없이 전문대학, 지방대학, 사립대학부터 타격을 예상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조개혁 방안과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예상된 문제를 방지하는 데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문대학이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혁신과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였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육기관이라는 국민적 인식은 정부 정책과 지원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평판을 받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초기에 해당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17건의 통·폐합 중 14

건이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에 통합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16건의 통·폐합 중 6건은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통합되고, 3개의 전문대학은 정원을 줄이고 일반대학으로 승격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조정은 전문대학보다는 일반대학을 선호하는 국민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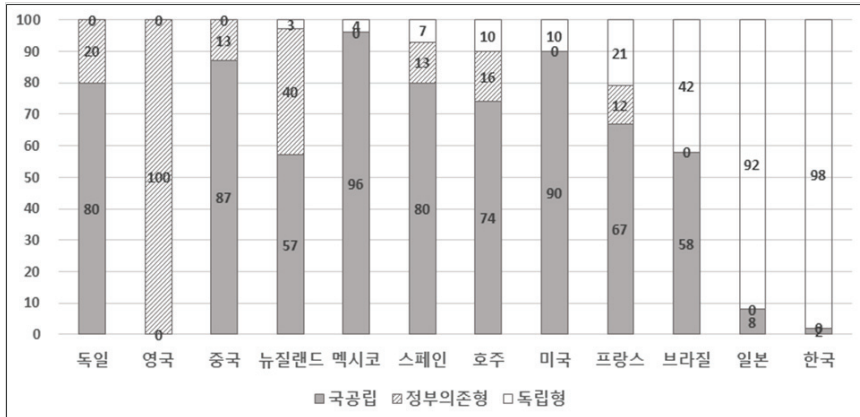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사학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산업명장기술대학원 육성이 포함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지속적 요구와 설득을 통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전문대학에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사업이 추진되었다. 늦었지만 일반대학과 유사한 수준의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전문대학들이 자력으로 일반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시설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셋째, 전문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전문대학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은 6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였으나, 열악한 정부 재정 여건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필요한 교육기관을 민간 주도로 설립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사립 비율이 높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국공립전문대학이 일반 국공립대학으로 통합되거나 폐교되어, 현재는 사립전문

대학의 비중이 98%에 달한다. 이처럼 높은 사립 비중은 전문대학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고등직업교육은 정부에서 주관하거나 민간이 운영되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고급인력이 필요했던 시기, 민간에서 대학을 설립하여 전문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전문대학을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던 공영형 전문대학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1] OECD 주요 국가의 전문대학 설립유형별 비율 비교



주: 1) 단기 고등교육과정(Short-cycle tertiary)에 해당하는 수치를 활용하였음.

2) 정부 의존형은 인건비 등을 포함 대학 운영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는 대학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OECD 교육지표 2015. p.355. 재구성.

넷째, 학령인구 외의 수요 발굴과 대학으로의 성인학습자 유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은 감소하는 학령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찾고 있는 전문대학의 요구와 4차 산업에 따른 재직자의 향상교육과 재교육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요구의 교집합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과 재정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통한 평생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비학위과정을 통한 평생직업교육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부분적인 요소로 추진되었다.

교육시장에서 학위 관련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4차 산업 혁명으로 촉발된 기술 진보와 생산 프로세스 혁신으로 인해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수요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은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외 수익 창출을 위해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을 지원받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민간 학원 및 공공 훈련시설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학령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학위 교육과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직무전환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우수한 전문대학들을 활용하여 국가적으로 직면한 신산업 분야,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대학의 구조조정과 대학 혁신 과정에서 지역 내 산업체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구조조정의 원인인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며, 지역산업¹¹⁾, 지역 공공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

11)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기획되고 이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갖춰 추진할 필요가 있다(김선배 외, 2019; 김송년, 2022: 34 재인용)

부재정지원사업에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재정지원사업단을 운영하는 대학의 부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도시의 경우 대학이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등직업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지역산업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지원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역시 일반대학, 그중에서도 국공립대학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사립전문대학과의 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여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산업들이 연계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22).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¹²⁾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지방 소멸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위기를 가져오고 지역 경제의 위축 및 지역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이탈하여 지역의 소멸을 심화하고 이에 따라 대학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됨(김현호 외, 2021; 김현호, 2022: 7 재인용)

제4장

전문대학 구조개혁 실태 조사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제2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실태 조사 분석
결과

제3절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 전문대학 구조개혁 실태 조사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133개 전체 전문대학 기획처장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과 구조개혁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1)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2) 정부의 정책 지원 현황, 3)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 4)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표 4-1〉 참조).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기획처장 3명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 구성이 적절하고 조사 대상이 응답하기에 수월하게 문항이 제시되었는지 의견을 조사하였다.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에 적합하게 응답 방식을 수정하였으며, 응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문항의 제시 순서를 조정하여 최종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 4-1〉 실태 조사 설문 구성

구분	내용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 입학정원 확보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요 학과 • 최근 3년간 입학정원 내 성인학습자 입학 현황 • 최근 3년간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학과 • 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 수 • 최근 3년간 입학정원 내 외국인 유학생 입학 현황 • 최근 3년간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학과 • 최근 3년간 취업률이 높은 학과 • 21년 2월 기준 졸업생의 취업처(대학 소재 지역 내외) • 23학년도 신입생 충원을 예측 • 최근 3년간 연도별 학과 개편 현황 • 정원 조정의 주요 원인 • 향후 구조조정 계획
정부의 정책 지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정책별 기여도 • 전문대학 정책별 지속 필요도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필요 정책별 요구도 •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우선순위 • 전문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 과제 •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과제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별 필요도 • 신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 재직자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 중등직업교육과의 연계를 위한 지원 방안 •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 유학생 대상 과정 확대를 위한 과제 • 지역기업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 방안 • 마이스터대학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응답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 • 대학의 입학정원 규모(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2,000명 이상) • 응답자 직위

설문조사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 협조를 얻어 각 대학에 공문으로 설문을 요청하여 응답을 기입 후 이메일로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하여 102부(133개 전문대학의 76.7%)를 회수하였다.

제2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실태 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전문대학 구조조정 관련 설문조사는 133개 전문대학 전체(교육부, 2021c)¹³⁾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33개 대학 중 102개 대학이 응답(76.7%)하였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32개 대학(31.4%)이, 비수도권에서는 70개 대학(68.6%)이 응답하였다.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입학정원이 1,000명 미만인 대학은 52개 대학(51.0%),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인 대학은 36개 대학(35.3%), 2,000명 이상인 대학은 14개 대학(13.7%)이다.

대학 소재지별과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입학정원이 1,000명 미만인 대학은 6개 대학(18.8%),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인 대학은 17개 대학(53.1%), 2,000명 이상인 대학은 9개 대학(28.1%)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입학정원이 1,000명 미만인 대학은 46개 대학(88.5%),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인 대학은 19개 대학(52.8%), 2,000명 이상인 대학은 5개 대학(35.7%)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응답한 응답자의 직위는 기획처장이 56개 대학(54.9%), 교무처장이 5개 대학(4.9%), 학생처장이 2개 대학(2.0%), 입학처장이 3개 대학(2.9%), 기획처 담당자가 36개 대학(35.3%)이었다.

13) 현재 전문대학은 전체 133개 대학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대학 수는 수도권이 43개 대학(32.3%), 비수도권이 90개 대학(67.7%)이며, 규모별로는 1,000명 미만이 65개교(수도권 9개교, 비수도권 56개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 48개교(수도권 21개교, 비수도권 27개교), 2,000명 이상이 20개교(수도권 13개교, 비수도권 7개교)으로 대학알리미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대학 소재지	수도권	32	31.4
	비수도권	70	68.6
입학정원 규모	1,000명 미만	52	51.0
	1,000명 이상	36	35.3
	2,000명 이상	14	13.7
직위	기획처장	56	54.9
	교무처장	5	4.9
	학생처장	2	2.0
	입학처장	3	2.9
	기획처 담당자	36	35.3
전체		102	100.0

2.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가. 향후 3년간(2023~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보가 안정적인 주요 학과

향후 3년간 입학정원 확보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요 학과에 대해서는 자연과학계열(59.9%), 인문·사회계열(16.0%), 예·체능계열(12.8%), 공학계열(11.3%)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계열이 타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과학계열에 간호 및 보건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향후 3년간(2023~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보가 안정적인 계열 및 학과

(단위: 개, %)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계	
	학과	%	학과	%	학과	%	학과	%	학과	%
수도권	12	13.3	43	47.8	13	14.4	22	24.4	90	100
비수도권	32	17.4	121	65.8	18	9.8	13	7.0	184	100
계	44	16.0	164	59.9	31	11.3	35	12.8	274	100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자연과학계열(47.8%), 예·체능계열(24.4%), 공학계열(14.4%), 인문·사회계열(13.3%) 순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자연과학계열(65.8%), 인문·사회계열(17.4%), 공학계열(9.8%), 예·체능계열(7.0%)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에서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낮게 나타났다.

향후 3년간 입학자원 확보가 안정적인 학과를 보면 수도권 지역은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유아교육과, 항공서비스과, 협동조합디지털경영과, 휴먼사회복지학과 등을, 자연과학계열에서는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보건 의료행정과, 치위생과 등을, 공학계열에서는 미래자동차학부, 시각정보디자인과, 스마트IT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영상디자인학과, 컴퓨터SW학과 등을, 예·체능계열에서는 게임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실용음악과, 실내건축학과,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영상제작과, 애니메이션전공 등으로 파악되었다.

비수도권에서 향후 3년간 입학자원 확보가 안정적인 학과를 보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사회복지과, 경찰행정과, 유아교육과, 보건복지경영과 등을, 자연과학계열에서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학과, 제과제빵과, 작업치료과, 축산과, 치위생과, 호텔조리제빵학부 등을, 공학계열에서는 건축인테리어과/학부, 드론토목학부, 원예조경과, 항공

정비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승강기공학부, 자동차과, 조선설계기술과 등을, 예·체능계열에서는 디지털문화콘텐츠과, 웹툰그래픽과, 영상편집제작과, 레저스포츠계열 등으로 파악되었다.

나.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입학정원 내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입학 현황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입학정원 내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의 입학 현황을 보면 입학정원은 연도별로 감소하지만, 성인학습자는 2020학년도에는 평균 96.4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127.4명, 2022학년도에는 161.1명으로 매년 증가함을 나타냈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외의 경우 입학정원은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지만, 성인학습자는 2020학년도에는 평균 34.4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54.8명, 2022학년도에는 75.6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함을 나타냈다. 비수도권에서도 입학정원은 매년 감소하지만, 성인학습자는 2020학년도에는 평균 123.0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158.6명, 2022학년도에는 199.0명으로 매년 증가함을 나타냈다.

〈표 4-4〉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가 입학한 학생 수

(단위: 명, %)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입학정원	성인학습자 수	입학정원	성인학습자 수	입학정원	성인학습자 수
수도권	1,630.0	34.4	1,590.9	54.8	1,543.2	75.6
비수도권	979.1	123.0	945.8	158.6	894.8	199.0
평균	1,183.3	96.4	1,148.2	127.4	1,098.2	161.1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미만의 경우 입학정원은 매년 감소하지만, 성인학습자는 매년 소폭으로 증가함을 나타냈다.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경우 입학정원은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지만, 성인학습자는 2020학년도에는 평균 103.9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165.3명, 2022학년도에는 211.9명으로 2021학년도에는 증가 폭이 높았다. 2,000명 이상에서는 입학정원은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지만, 성인학습자는 2020학년도에는 평균 26.0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55.8명, 2022학년도에는 109.2명으로, 2022학년도에 증가 폭이 높았다.

〈표 4-5〉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가 입학한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입학정원	성인학습자 수	입학정원	성인학습자 수	입학정원	성인학습자 수
1,000명 미만	628.9	109.0	602.0	119.8	564.5	138.9
1,000명 이상	1,561.3	103.9	1,511.9	165.3	1,436.0	211.9
2,000명 이상	2,270.6	26.0	2,241.3	55.8	2,212.1	109.2
평균	1,183.3	96.4	1,148.2	127.4	1,098.2	161.1

다.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계열 및 학과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입학정원 내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모집한 계열 및 학과가 있는 대학은 응답한 102개 대학 중 수도권은 6개 대학(18.8%), 비수도권은 43개 대학(61.4)으로 비수도권이 많았다.

〈표 4-6〉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대학

(단위: 교, %)

구분	모집함		모집하지 않음	
	대학	%	대학	%
수도권	6	18.8	26	81.3
비수도권	43	61.4	27	38.6
계	49	48.0	53	52.0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미만인 대학은 32개 대학(61.5%),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대학은 14개 대학(38.9%), 2,000명 이상인 대학은 3개 대학(21.4%)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7〉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대학

(단위: 교, %)

구분	모집함		모집하지 않음	
	대학	%	대학	%
1,000명 미만	32	61.5	20	38.5
1,000명 이상	14	38.9	22	61.1
2,000명 이상	3	21.4	11	78.6
계	49	48.0	53	52.0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입학정원 내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모집한 계열 및 학과를 보면 2020학년도에는 84개 학과(수도권 7개 학과, 비수도권 77개 학과)에서, 2021학년도에는 95개 학과(수도권 5

개 학과, 비수도권 90개 학과)에서, 2022학년도에는 118개 학과(수도권 14개 학과, 비수도권 104개 학과) 등으로 매년 증가함을 나타냈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열(60.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자연과학계열(20.9%), 공학계열(15.8%), 예·체능계열(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학계열인 경우 2022학년도에는 다른 계열보다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모집한 학과가 많았다.

지역별, 계열별로 모집한 학과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2020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개 학과로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 등이었으며, 비수도권에서 인문·사회계열로는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항공호텔관광학부, 스마트평생교육학부, 사회복지경영학부, 창업경영과 등, 자연과학계열로는 안경광학과, 치기공과, 피부건강관리과, 호텔조리과, 스마트팜도시농업과 등, 공학계열로 전기과, 기계자동차과, 건축토목조경학부, 철도건설과, 원예조경과 등, 예·체능계열로 미술치료과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4-8〉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모집한 계열 및 학과

(단위: 개, %)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계	
	학과	%	학과	%	학과	%	학과	%
인문·사회계열	56	31.3	58	32.4	65	36.3	179	100
자연과학계열	17	27.4	20	32.3	25	40.3	62	100
공학계열	9	19.1	13	27.7	25	53.2	47	100
예·체능계열	2	22.2	4	44.5	3	33.3	9	100
계	84	28.3	95	32.0	118	39.7	297	100

라. 20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20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의 비율 및 학생 수를 보면 정원내 일반전형에서는 성인학습자 비율은 23.9%로 나타났고, 정원내 특별전형에서는 16.8%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원의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특별정원은 평균 13.7명, 정원의 계약학과는 평균 4.9명, 전공심화과정은 2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비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정원내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의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특별정원, 정원의 계약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생 수 등에서 비율이 높고,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대학 소재지별 20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비율 및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정원내) 일반전형 (%)	(정원내) 특별전형 (%)	(정원외)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특별전형(명)	(정원외) 계약학과 (명)	전공심화과정 (명)
수도권	8.0	6.2	0.5	0.1	21.3
비수도권	31.1	21.5	19.7	7.1	31.7
평균	23.9	16.8	13.7	4.9	28.4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정원내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의 계약학과 등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정원의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특별정원, 전공심화과정에서의 전형 학생 수가 많게 나타났으며, 2,000명 이상에서는 정원의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특별전형, 전공심화과정 등에서 전형 학생 수가 많으나, 정원내 일반전형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표 4-10〉 입학정원 규모별 20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비율 및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정원내) 일반전형 (%)	(정원내) 특별전형 (%)	(정원외)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특별전형 (명)	(정원외) 계약학과 (명)	전공심화과정 (명)
1,000명 미만	31.1	19.7	10.8	7.5	17.3
1,000명 이상	18.0	14.9	15.8	2.8	42.6
2,000명 이상	11.6	10.9	19.6	0.2	32.9
평균	23.9	16.8	13.7	4.9	28.4

마.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수를 보면 2020학년도에는 평균 9.6명, 2021학년도에는 평균 19.4명, 2022학년도에는 18.1명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입학정원	외국인 유학생 수	입학정원	외국인 유학생 수	입학정원	외국인 유학생 수
수도권	1,630.0	12.8	1,590.9	22.7	1,543.2	25.1
비수도권	979.1	8.2	945.8	17.9	894.8	14.9
평균	1,183.3	9.6	1,148.2	19.4	1,098.2	18.1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외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 수도권외의 경우 증가하다가 2021학년도 17.9명에서 2022학년도 14.9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다가 2022학년도에는 감소하였고,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명 이상에서는 2022학년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한 대학 수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이 20개 대학(62.5%), 비수도권이 34개 대학(48.6%)이었고, 입학정원 규모별로는 1,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21개 대학(40.4%),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20개 대학(55.6%), 2,000명 이상에서는 13개 대학(92.9%)이었다.

〈표 4-12〉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입학정원	외국인 유학생 수	입학정원	외국인 유학생 수	입학정원	외국인 유학생 수
1,000명 미만	628.9	8.5	602.0	13.8	564.5	9.8
1,000명 이상	1,561.3	5.6	1,511.9	20.9	1,436.0	24.7
2,000명 이상	2,270.6	24.4	2,241.3	36.6	2,212.1	34.5
평균	1,183.3	9.6	1,148.2	19.4	1,098.2	18.1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열(36.9), 자연과학계열(32.2%), 공학계열(25.0%), 예·체능계열(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 최근 3년간 (정원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요 계열 및 학과

(단위: 개, %)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계	
	학과	%	학과	%	학과	%	학과	%
인문·사회계열	14	25.0	25	44.6	17	30.4	56	100
자연과학계열	16	32.7	16	32.7	17	34.6	49	100
공학계열	11	28.9	12	31.6	15	39.5	38	100
예·체능계열	2	16.7	2	16.7	5	66.6	9	100
계	43	28.3	55	36.2	54	35.5	152	100

대학 소재지별, 계열별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주요 학과를 보면, 수도권 권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국제무역과, 글로벌관광서비스과, 호텔관광경영과, 관광컨벤션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등에서, 자연과학계열에서는 호텔외식조리과 등에서, 공학계열에서는 기계공학과, 스마트자동차과 등에서, 예·체능계열에서는 뷰티스킨케어과 등으로 조사되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실용한국어과, 유아교육과, 글로벌호텔관광과 등에서, 자연과학계열은 글로벌푸드매니지먼트과, 안경광학과, 치기공과, 호텔외식조리과,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전산과 등에서, 공학계열에서는 기계과, 조선CAD응용학과, 자동차과, 전기전자과 등으로 조사되었다.

바.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 및 취업률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문대학에서 취업률¹⁴⁾이 높은 계열 및 학과의 수를 보면 자연과학계열(45.6%), 인문·사회계열(27.5%), 공학계열(17.2), 예·체능계열(9.7%) 순으로 자연과학계열의 학과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문·사회계열(38.3%), 자연과학계열(26.9%)의 학과 수가 많고, 비수도권의 경우 자연과학계열(54.7%), 인문·사회계열(22.2%)의 학과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총 115개 학과 중에서 인문·사회계열 44개 학과, 자연과학계열 31개 학과, 공학계열 20개 학과, 예·체능계열 20개 학과 등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건축과 등의 취업률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총 234개 학과 중에서 인문·사회계열 52개 학과, 자연과학계열 128개 학과, 공학계열 40개 학과, 예·체능계열 14개 학과 등으로 간호학과, 작업치료과, 방사선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등의 취업률이 높았다.

〈표 4-14〉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계열 및 학과

(단위: 개, %)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계	
	학과	%	학과	%	학과	%	학과	%	학과	%
수도권	44	38.3	31	27.0	20	17.4	20	17.4	115	100
비수도권	52	22.2	128	54.7	40	17.1	14	6.0	234	100
계	96	27.5	159	45.6	60	17.2	34	9.7	349	100

14) 제2장 2절 〈표 2-30〉 하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2019년 70.4%, 2020년 69.9%, 2021년 68.0%이며, 〈표 2-32〉 계열별 취업률에서는 자연과학계열이 제일 높고, 그다음이 공학계열이었음.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의 학과 수가 평균보다 많았고,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등의 학과 수가 많게 나타났으며, 2,000명 이상에서는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등에서 평균보다 학과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계열 및 학과

(단위: 개, %)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계	
	학과	%	학과	%	학과	%	학과	%	사례 수	%
1,000명 미만	42	25.5	83	50.3	31	18.8	9	5.4	165	100
1,000명 이상	39	30.2	56	43.4	16	12.4	18	14.0	129	100
2,000명 이상	15	27.3	20	36.4	13	23.6	7	12.7	55	100
계	96	27.5	115	45.6	60	17.2	34	9.7	349	100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문대학에서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평균 취업률(82.8%)을 보면, 수도권은 평균 취업률이 81.1%로 자연과학계열(85.9%) 및 공학계열(81.7%)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평균 취업률이 83.6%로 인문·사회계열(85.9%) 및 자연과학계열(85.0%)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대학알리미, 2022b)¹⁵⁾.

15) 대학알리미(2022b). 졸업생의 취업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2020년(공시 연도 기준)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률에서 수도권은 69.5%, 비수도권은 70.2%임.

〈표 4-16〉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평균 취업률

(단위: 개, %)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계	
	학과	취업률	학과	취업률	학과	취업률	학과	취업률	학과	취업률
수도권	44	78.2	31	85.9	20	81.7	20	79.5	115	81.1
비수도권	52	85.9	128	85.0	40	80.4	14	81.1	234	83.6
계	96	82.4	159	85.2	60	80.8	34	79.9	349	82.8

입학정원 규모별로 1,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자연과학계열(83.9%) 취업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자연과학계열(86.0%), 예·체능계열(85.7%)과 공학계열(83.2%)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0명 이상에서는 자연과학계열(88.4%)과 인문·사회계열(84.6%)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평균 취업률

(단위: 개, %)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계	
	학과	취업률	학과	취업률	학과	취업률	학과	취업률	학과	취업률
1,000명 미만	42	79.5	83	83.9	31	80.5	9	69.0	165	81.2
1,000명 이상	39	81.9	56	86.0	16	83.2	18	85.7	129	84.4
2,000명 이상	15	84.6	20	88.4	13	78.8	7	80.0	55	84.0
계	96	82.4	159	85.2	60	80.8	34	79.9	349	82.8

사.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

2021년 2월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47.0%, 비수도권으로 취업한 경우는 53.0%이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경우 수도권으로 취업한 경우는 88.1%이고, 비수도권으로 취업한 경우는 11.9%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28.8%이고, 비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71.2%이다.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보다 약 16.9% 높았다. 그러나 조사가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처로 대학별 졸업자 수의 차이에 따라 해당 비율이 차이가 있다.

〈표 4-18〉 대학 소재지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88.1	11.9
비수도권	28.8	71.2
계	47.0	53.0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이 약간 많고, 2,000명 이상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 68.4%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9〉 입학정원 규모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1,000명 미만	33.3	66.7
1,000명 이상	56.4	43.6
2,000명 이상	68.4	31.6
계	47.0	53.0

2021년 2월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처(해당 지역/타 지역)를 보면, 대학 소재지별로 해당 지역과 타 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약 50%이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으로 취업한 경우는 45.9%이고, 타 지역으로 취업한 경우는 54.1%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해당 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50.4%이고, 타 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49.6%이다.

〈표 4-20〉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해당 지역/타 지역)

(단위: 명, %)

구분	해당 지역	타 지역
수도권	45.9	54.1
비수도권	50.4	49.6
계	49.0	51.0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미만의 경우와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취업이 약간 많고, 2,000명 이상에서는 해당 지역과 타 지역으로의 취업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21〉 입학정원 규모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해당 지역/타 지역)

(단위: %)

구분	해당 지역	타 지역
1,000명 미만	49.0	51.0
1,000명 이상	48.2	51.8
2,000명 이상	50.4	49.6
계	49.0	51.0

아. 2023년도 입학정원(신입생 총원율) 확보 예상

2023학년도 전문대학에서 입학정원(신입생 총원율) 확보 예상 비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입학정원의 90.5%를 충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도권 대학(92.4%)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대학(89.7%)보다 신입생 총원 비율을 조금 높게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대학 소재지별 2023학년도 입학정원(신입생 총원율) 확보 예상 비율

(단위: 교, %)

구분	대학	예상 비율
수도권	32	92.4
비수도권	70	89.7
평균	102	90.5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2,000명 이상의 대학(95.0%)에서 가장 높고,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대학(90.9%), 1,000명 미만(8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입학정원 규모별 2023학년도 입학정원(신입생 총원율) 확보 예상 비율

(단위: 교, %)

구분	대학	예상 비율
1,000명 미만	52	89.0
1,000명 이상	36	90.9
2,000명 이상	14	95.0
평균	102	90.5

자.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 개편 유무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문대학에서 학과 개편을 실시한 대학은 83개 대학(81.4%)으로 나타났고, 학과 개편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은 19개 대학(18.6%)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외의 경우 87.5%가 학과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78.6%가 학과 개편을 추진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1.4%가 학과 개편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 개편 유무

(단위: 교, %)

구분	학과 개편함		학과 개편하지 않음		계	
	대학	%	대학	%	대학	%
수도권	28	87.5	4	12.5	32	100
비수도권	55	78.6	15	21.4	70	100
계	83	81.4	19	18.6	102	100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대학(97.2%)과 2,000명 이상의 대학(92.9%)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과 개편을 추진하였고, 1,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67.3%가 학과 개편을 추진하였고, 32.7%의 대학에서는 학과 개편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 개편 유무

(단위: 교, %)

구분	학과 개편함		학과 개편하지 않음		계	
	대학	%	대학	%	대학	%
1,000명 미만	35	67.3	17	32.7	52	100
1,000명 이상	35	97.2	1	2.8	36	100
2,000명 이상	13	92.9	1	7.1	14	100
계	83	81.4	19	18.6	102	100

자.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신설/폐과한 계열 및 학과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문대학에서 신설한 학과 수는 총 282개 학과이며, 응답한 102개 대학 중 학과 개편을 실시한 83개 대학에서 평균 3.4개 학과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3년간 32개 대학 중 학과 개편을 실시한 28개 대학에서 115개 학과(평균 4.1개 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연도별로 학과 신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70개 대학 중 학과 개편을 실시한 55개 대학에서 167개 학과(평균 3.0개 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연도별로 학과 신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신설한 계열 및 학과

(단위: 개, 명)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학과	평균 정원	학과	평균 정원	학과	평균 정원
수도권	16	53.7	30	55.9	69	50.6
비수도권	39	42.3	53	44.4	75	35.9
평균	55	45.6	83	48.6	144	43.0

대학 소재지별로 신설한 학과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인문·사회계열(융합 콘텐츠크리에이터과, 휴먼사회복지학과, 빅데이터경영과, 언어치료아동보육과, 의료융합관광과), 자연과학계열(보건의료행정과, 펫토타케어과, 호텔외식F&B과, 치기공과), 공학계열(스마트웹콘텐츠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VR게임콘텐츠과, 컴퓨터융합학부, 반도체과), 예·체능계열(미디어영상스피치과, 방송연예과) 등이며, 비수도권에서는 인문·사회계열(사회복지과, 경찰경호보안과,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스마트평생융합학부, 글로벌한국어과), 자연과학계열(글로벌뷰티케어과, 반려동물과, 안경광학과, 헬스케어약제과, 바이오의약과, 스마트팜과), 공학계열(스마트팩토리과, 산업안전관리과, 항공정비과, 스마트헬스과, 지능형모빌리티과, 스마트자동차과, 스마트IT융합과), 예·체능계열(실용음악과, 웹툰콘텐츠과, 실감영상콘텐츠과) 등이다.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52개 대학 중 학과 개편을 실시한 35개 대학에서 79개 학과(평균 2.3개 학과)를 신설하였으며,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36개 대학 중 학과 개편을 실시한 35개 대학에서 148개 학과(평균 4.2개 학과)를 신설하였고, 2,000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14개 대학 중 학과 개편을 실시한 13개 대학에서 55

개 학과(평균 4.2개 학과)를 신설하였다.

입학정원 규모가 클수록 학과 개편이 많아, 학과 신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신설한 계열 및 학과

(단위: 개, 명)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학과	평균 정원	학과	평균 정원	학과	평균 정원
1,000명 미만	18	48.5	30	34.8	31	36.5
1,000명 이상	32	43.2	38	61.2	78	49.7
2,000명 이상	5	51.0	15	44.3	35	33.8
평균	55	45.6	83	48.6	144	43.0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문대학에서 학과를 폐과한 대학 및 학과 수는 응답한 전체 102개 대학 중 83개 대학(81.4%)에서 220개 학과로 대학별로 평균 2.7개 학과를 폐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응답한 32개 대학 중 28개 대학에서 3년간 61개 학과(평균 2.2개 학과)를 폐과하였으며, 연도별로 학과를 폐과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응답한 70개 대학 중 55개 대학에서 159개 학과(평균 2.9개 학과)를 폐과하였으며, 연도별로 학과를 폐과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폐과하는 학과 수는 평균 0.7개 학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폐과한 계열 및 학과

(단위: 개, 명)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학과 수	평균 정원	학과 수	평균 정원	학과 수	평균 정원
수도권	9	31.7	22	58.9	30	65.0
비수도권	29	38.1	51	38.8	79	36.2
평균	38	36.6	73	44.9	109	44.1

대학 소재지별로 폐과 학과를 보면, 수도권은 인문·사회계열(사회복지과(야간),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아동미술과, 외식서비스경영전공, 세무회계과(야간), 중국어과), 자연과학계열(멀티미디어디자인과, 식품영양과(야간), 섬유영상코디과), 공학계열(스마트IT과, 디지털정보통신과, 스마트웹콘텐츠과, 융합소프트웨어과, 건설안전공학과, 토목과(야간), 기계시스템과), 예·체능계열(실용음악과, e-패션학과) 등이며, 비수도권에서는 인문·사회계열(경영유통과,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아동미술과, 관광중국어전공, 부사관과, 호텔경영과, 카지노과), 자연과학계열(호텔조리과(야간), 보건의료공학과), 공학계열(메카트로닉스학과, 인공지능로보틱스전공, 전자과, 컴퓨터 AI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정비과), 예·체능계열(실용무용학과, 한국음악과, 사회체육과) 등이다.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응답한 52개 대학 중 35개 대학에서 3년간 91개 학과(평균 2.6개 학과)를 폐과하였으며,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응답한 36개 대학 중 35개 대학에서 3년간 111개 학과(평균 3.2개 학과)를 폐과하였으며, 2,000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응답한 14개 대학 중 13개 대학에서 3년간 14개 학과(평균 1.1개 학과)를 폐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폐과하는 경우가 높고, 입학정원의 규모가 클수록 기존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여 학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폐과한 계열 및 학과 수

(단위: 개, 명)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학과 수	평균 정원	학과 수	평균 정원	학과 수	평균 정원
1,000명 미만	15	28.3	30	33.8	46	40.8
1,000명 이상	19	42.9	31	50.3	61	46.8
2,000명 이상	4	37.5	12	58.5	2	37.5
평균	38	36.6	73	44.9	109	44.1

차.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이유

전문대학에서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서(58.4%)’, ‘미래 사회의 변화 대응(24.8%)’,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재정 지원을 위해(8.9%)’, 대학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7.9%) 순으로 나타났다.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인 경우에는 ‘미래 사회의 변화 대응(43.8%)’으로 전체 응답자와 차이가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서(66.7%)’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조정 이유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0〉 대학 소재지별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이유

(단위: 교, %)

구분	신입생 총원이 어려워서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재정 지원		대학 자체 필요성		미래 사회의 변화 대응		계	
	대학	%	대학	%	대학	%	대학	%	N	%
수도권	13	40.6	2	6.3	3	9.4	14	43.8	32	100
비수도권	46	66.7	7	10.1	5	7.3	11	15.9	69	100
계	59	58.4	9	8.9	8	7.9	25	24.8	101	100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1,000명 미만의 대학과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신입생 총원이 어려워서(각각 62.8%, 63.9%)’로 응답하였고, 2,000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 대응(71.4%)’으로 전체 응답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와 같이 입학정원 규모별로도 정원 조정 이유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1〉 입학정원 규모별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이유

(단위: 교, %)

구분	신입생 총원이 어려워서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재정 지원		대학 자체 필요성		미래 사회의 변화 대응		계	
	대학	%	대학	%	대학	%	대학	%	N	%
1,000명 미만	32	62.8	5	9.8	5	9.8	9	17.6	51	100
1,000명 이상	23	63.9	4	11.1	3	8.3	6	16.7	36	100
2,000명 이상	4	28.6	0	0.0	0	0.0	10	71.4	14	100
계	59	58.4	9	8.9	8	7.9	25	24.8	101	100

가. 향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전문대학에서 향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항 및 향후 추진을 고려 중인 사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열 및 학과 개편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첨단 학과로의 개편 및 성인전담 학과의 신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을 고려 중인 사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로의 개편 및 성인전담 학과 신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는 증원을 요청하겠다는 대학이 3개 대학, 현행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대학이 8개 대학, 정원 감축을 통한 계열 및 학과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대학이 19개 대학으로, 모집정원에 대한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현황 및 요구

가. 정부의 정책 지원 현황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서 전문대학 발전 및 혁신에 대한 기여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발전 및 혁신에 기여 정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22~)’(4.54),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2)’(4.48),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2022~)’(4.18),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014~2018)’(4.1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2017~2022)’(4.07),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2022~)’(4.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2〉 전문대학 주요 정책별 기여 정도

(단위: 명, %)

추진 정책		(기대되는) 기여 정도(수준)					평균
		1 전혀 없음	2 없음	3 보통	4 있음	5 매우 있음	
윤석열 정부 (2022~ 현재)	1)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22~)	0 (0.0)	1 (1.0)	10 (9.8)	24 (23.5)	67 (65.7)	4.54
	2)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2022~)	0 (0.0)	2 (2.0)	18 (17.6)	42 (41.2)	40 (39.2)	4.18
	3)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2022~)	1 (1.0)	5 (4.9)	19 (18.6)	40 (39.2)	37 (36.3)	4.05
문재인 정부 (2017~ 2022)	4)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2017~)	0 (0.0)	7 (6.9)	24 (23.5)	45 (44.1)	26 (25.5)	3.88
	5)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 대학 육성 (LINC+)사업(2017~2022)	0 (0.0)	2 (2.0)	24 (23.5)	41 (40.2)	35 (34.3)	4.07
	6)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2)	0 (0.0)	1 (1.0)	12 (11.8)	26 (22.5)	63 (61.8)	4.48
	7)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사업(2021~)	1 (1.0)	15 (14.7)	42 (41.2)	27 (26.5)	17 (16.7)	3.43
	8)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2021~)	1 (1.0)	9 (8.8)	40 (39.2)	34 (33.3)	18 (17.6)	3.58
박근혜 정부 (2013~ 2017)	9)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2014~2018)	1 (1.0)	5 (4.9)	16 (15.7)	38 (37.3)	42 (41.2)	4.13
	10)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사업(2014~2018)	0 (0.0)	9 (8.8)	36 (35.3)	38 (37.3)	19 (18.6)	3.66
	11) 세계로 프로젝트(2014~2018)	2 (2.0)	21 (20.6)	51 (50.0)	25 (24.5)	3 (2.9)	3.06
이명박 정부 (2008~ 2013)	1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2008~2013)	2 (2.0)	2 (2.0)	33 (32.4)	30 (29.4)	35 (34.3)	3.92
	13) 국제화거점중심대학 사업(2010~2012)	2 (2.0)	20 (19.6)	55 (53.9)	23 (22.5)	2 (2.0)	3.03
	14)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 사업 (2011~2019)	3 (2.9)	19 (18.6)	42 (41.2)	28 (27.5)	10 (9.8)	3.23
	15)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사업 (2012~2016)	2 (2.0)	3 (2.9)	33 (22.4)	38 (37.3)	26 (25.5)	3.81

전문대학 발전 및 혁신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2022~)’(4.57),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2)’(4.49),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2022~)’(4.2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2017~ 2022)’(4.14),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2022~)’(4.13),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014~2018)’(4.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3〉 전문대학 주요 정책별 지속 필요 정도

(단위: 명, %)

추진 정책	지속 필요 정도					평균	
	1 전혀 없음	2 없음	3 보통	4 있음	5 매우 있음		
윤석열 정부 (2022~ 현재)	1)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22~)	1 (1.0)	2 (2.0)	7 (6.9)	20 (19.6)	72 (70.6)	4.57
	2)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2022~)	0 (0.0)	3 (2.9)	18 (17.6)	35 (34.3)	46 (45.1)	4.22
	3)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2022~)	0 (0.0)	8 (7.8)	14 (13.7)	37 (36.3)	43 (42.2)	4.13
문재인 정부 (2017~ 2022)	4)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2017~)	0 (0.0)	9 (8.8)	24 (23.5)	38 (37.3)	31 (30.4)	3.89
	5)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사업(2017~2022)	0 (0.0)	3 (2.9)	23 (22.5)	33 (32.4)	43 (42.2)	4.14
	6)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2)	0 (0.0)	2 (2.0)	11 (10.8)	24 (23.5)	65 (63.7)	4.49
	7)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사업(2021~)	3 (2.9)	16 (15.7)	41 (40.2)	23 (22.5)	19 (18.6)	3.38
박근혜 정부 (2013~ 2017)	8)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21~)	1 (1.0)	10 (9.8)	38 (37.3)	31 (30.4)	22 (21.6)	3.62
	9)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2014~2018)	0 (0.0)	9 (8.8)	18 (17.6)	35 (34.3)	40 (39.2)	4.04
	10)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사업(2014~2018)	0 (0.0)	10 (9.8)	35 (34.3)	38 (34.3)	19 (18.6)	3.65
이명박 정부 (2008~ 2013)	11) 세계로 프로젝트(2014~2018)	4 (3.9)	21 (20.6)	51 (50.0)	22 (21.6)	4 (3.9)	3.01
	12)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2008~2013)	3 (2.9)	3 (2.9)	32 (31.4)	32 (31.4)	32 (31.4)	3.85
	13) 국제화거점중심대학 사업(2010~2012)	4 (3.9)	21 (20.6)	47 (46.1)	24 (23.5)	6 (5.9)	3.07
	14)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 사업 (2011~2019)	6 (5.9)	21 (20.6)	38 (37.3)	24 (23.5)	13 (12.7)	3.17
	15)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사업 (2012~2016)	1 (1.0)	7 (6.9)	31 (30.4)	35 (34.3)	28 (27.5)	3.80

이상과 같이 전문대학 발전 및 혁신에 기여하며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014~2018)’ 등을 제시하였다.

나. 정부의 정책 요구 사항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였으면 하는 정책 요구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추진하기를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전문대학 재정 지원 확대’(4.81),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4.54), ‘고등직업교육 교부금 도입’(4.54), ‘중장기적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4.37), ‘한계 대학 퇴로 방안 마련’(4.31),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률 제정’(4.30), ‘정부 차원의 사회적 산학협력시스템 구축(대학-지역-산업체)(4.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 재정 지원 확대’,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 등을 높게 요구하였고, 타 과제보다는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률 제정’이 우선순위에서 높지 않았다.

〈표 4-34〉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

(단위: 명, %)

추진 정책	요구 수준					평균
	1 전혀 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 필요	
1) 중장기적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	0 (0.0)	2 (2.0)	13 (12.7)	32 (31.4)	55 (53.9)	4.37
2)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률 제정	0 (0.0)	4 (3.9)	14 (13.7)	31 (30.4)	53 (52.0)	4.30
3) 전문대학 재정 지원 확대	1 (1.0)	0 (0.0)	2 (2.0)	11 (10.8)	88 (86.3)	4.81
4)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	0 (0.0)	1 (1.0)	11 (10.8)	22 (21.6)	68 (66.7)	4.54
5) 정부 차원의 사회적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대학-지역-산업체)	1 (1.0)	0 (0.0)	18 (17.6)	42 (41.2)	41 (40.2)	4.20
6) 새로운 유형의 구조조정 방안	0 (0.0)	6 (5.9)	27 (26.5)	39 (38.2)	30 (29.4)	3.91
7) 공영형 전문대학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1 (1.0)	14 (13.7)	39 (38.2)	28 (27.5)	20 (19.6)	3.51
8) 고등직업교육 교부금 도입	0 (0.0)	1 (1.0)	13 (12.7)	18 (17.6)	70 (68.6)	4.54
9) 한계 대학 퇴로 방안 마련	0 (0.0)	2 (2.0)	14 (13.7)	36 (35.3)	50 (49.0)	4.31
10) 대학(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 일반대학 등) 협력체계 구축	2 (2.0)	7 (6.9)	31 (30.4)	42 (41.2)	20 (19.6)	3.70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령 제정에서 우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 마련’(4.64),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4.52), ‘사학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4.44), ‘타 고등교육기관과 구분되는 전문대학 역할 명확화’(4.40), ‘퇴출되는 대학의 교직원 임금/퇴직금 보전 방안’(4.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5〉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령 제정 시 우선 사항

(단위: 명, %)

추진 정책	중요도					평균
	1 전혀 중요 하지 않음	2 중요 하지 않음	3 보통	4 중요	5 매우 중요	
1)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	0 (0.0)	0 (0.0)	10 (9.8)	29 (28.4)	63 (61.8)	4.52
2) 사학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	0 (0.0)	1 (1.0)	13 (12.7)	28 (27.5)	60 (58.8)	4.44
3)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 마련	0 (0.0)	0 (0.0)	8 (7.8)	21 (20.6)	78 (71.6)	4.64
4) 재단으로부터 대학 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교수평의회 권한 강화	3 (2.9)	3 (2.9)	46 (45.1)	40 (39.2)	10 (9.8)	3.50
5) 퇴출되는 대학의 교직원 임금/퇴직금 보전 방안	0 (0.0)	0 (0.0)	16 (15.7)	47 (46.1)	39 (38.2)	4.23
6) 타 고등교육기관과 구분되는 전문대학 역할 명확화	0 (0.0)	1 (1.0)	13 (12.7)	32 (31.4)	56 (54.9)	4.40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에서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로는 전문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역수요 기반 인재양성 분야 및 학과 설립 관련 지역사회 수요 공유 협의체 운영, 직무별 수업연한 다양화 및 일반대학으로의 호환성 확보, 전문대학 인원을 총 학생 수 범위 내에서 자율모집,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칭) 직업교육법 마련, 직업교육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성인학습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영역에 해당되는 학과를 일반대학에 설치함으로써 경쟁 및 차별화 발생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전문대학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의 입장 차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

되었다. 수도권 입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비율로 정원을 조정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모집정원 축소 및 폐지, 전문대학의 지역중심(지역특화) 대학으로의 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 차원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는 현재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대학 자율에 맡겨 운영해 오면서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중복해서 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정부의 역할로 제시하였다.

4.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현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 강화’(4.5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4.26),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4.25), 지역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탁사업 확대’(4.15),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확보’(4.00) 등의 순으로 요구하고 있다.

〈표 4-36〉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별 필요 정도

(단위: 명, %)

추진 정책	필요 수준					평균
	1 전혀 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 필요	
1)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1 (1.0)	0 (0.0)	14 (13.7)	45 (44.1)	42 (41.2)	4.25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1 (1.0)	0 (0.0)	11 (10.8)	49 (48.0)	41 (40.2)	4.26
3)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확보	0 (0.0)	1 (1.0)	24 (23.5)	51 (50.0)	26 (25.5)	4.00
4)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 유학생 대상 학위 및 비학위과정 운영 확대	2 (2.0)	4 (3.9)	26 (25.5)	47 (46.1)	23 (22.5)	3.83
5)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 강화	0 (0.0)	0 (0.0)	6 (5.9)	37 (36.3)	59 (57.8)	4.52
6) 지역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탁사업 확대	0 (0.0)	0 (0.0)	17 (16.7)	53 (52.0)	32 (31.3)	4.15
7) 마이스터대학 전면 도입 및 확대	3 (2.9)	7 (6.9)	35 (34.3)	41 (40.2)	16 (15.7)	3.59
8) 해외 캠퍼스 설립 활성화	8 (7.8)	16 (15.7)	41 (40.2)	26 (25.5)	11 (10.8)	3.16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과제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 강화’를 제일 높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전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전문대학의 정체성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전문대학에서 입학정원 확보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요 학과에 대해서는 자연과학계열(59.9%), 인문·사회계열(16.0%), 예·체능계열(12.8%), 공학계열(11.3%) 순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에서는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에서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낮게 나타났다.

입학정원 내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의 최근 입학 현황을 보면, 입학정원은 연도별로 감소하지만 성인학습자는 매년 증가함을 나타냈고,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모집한 계열 및 학과가 있는 대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대학이 많았다.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를 보면,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보다 약 16.9% 높았다. 이를 통해 졸업 후 취업처가 수도권에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 최근 학과 개편을 한 대학은 83개 대학(81.4%)으로 나타났고, 학과 개편을 하지 않은 대학은 19개 대학(18.6%)으로 나타났다. 신설 학과 수는 평균 3.4개 학과이고, 폐과는 220개 학과, 평균 2.7개 학과로 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에서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서(58.4%)', '미래 사회의 변화 대응(24.8%)',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재정 지원을 위해(8.9%)', 대학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

원 조정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외의 경우에는 ‘미래 사회의 변화 대응(43.8%)’으로 전체 응답자와 차이가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66.7%)’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2.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서 전문대학 발전 및 혁신에 대한 기여 정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22~)’(1순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2)’(2순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2022~)’(3순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014~2018)’(4순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2017~ 2022)’(5순위), ‘고등 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2022~)’(6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대학 발전 및 혁신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22~)’(1순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2)’(2순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2022~)’(3순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2017~ 2022)’(5순위), ‘고등 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2022~)’(5순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014~2018)’(6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전문대학 발전 및 혁신에 기여하며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고등 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014~2018)’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고,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를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전문대학 재정 지원 확대’(1순위),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2순위), ‘고등직업교육 교부금 도입’(3순위), ‘증장기적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4순위), ‘한계 대학 퇴로 방안 마련’(5순위),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률 제정’(6순위), ‘정부 차원의 사회적 산학협력시스템 구축(대학-지역-산업체)(7순위)’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대학 재정 지원 확대’,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 등을 높게 요구하였고, 타 과제보다는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률 제정’이 우선순위에서는 높지 않았다.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령 제정에서 우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 마련’(1순위),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증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2순위), ‘사학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3순위), ‘타 고등교육기관과 구분되는 전문대학 역할 명확화’(4순위), ‘퇴출되는 대학의 교직원 임금/퇴직금 보전 방안’(5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에서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로는 전문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역수요 기반 인재양성 분야 및 학과 설립 관련 지역사회 수요 공유 협의체 운영, 직무별 수업연한 다양화 및 일반대학으로의 호환성 확보, 증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칭) 직업교육법 마련, 직업교육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성인학습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영역에 해당되는 학과를 일반대학에 설치함으로써 경쟁 및 차별화 발생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전문대학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비율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의 모집정원 축소 및 폐지, 전문대학의 지역중심(지역특화) 대학으로의 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 차원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는 현재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대학 자원에 맡겨 운영해 오면서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중복해서 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정부의 역할로 제시하였다.

3.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현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 강화’(1순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2순위),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3순위), 지역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탁사업 확대(4순위),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확보(5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과제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 강화’를 제일 높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전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 기관

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전문대학의 정체성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제1절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

제2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방안

제5장 |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제1절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전문대학 정책에 대해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정책이 전문대학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구조조정의 결과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은 것도 사실이다.

전문대학이 위기에 빠진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예견된 것처럼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였지만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고 육성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원 축소를 기본으로 한 전문대학 구조조정에 너무 매몰된 정책을 추진하였고, 모든 전문대학 관련 정책도 정원 조정 및 구조조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전문대학도 재정 지원 및 입학정원 조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실적 쌓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고,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은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과당 경쟁을 부추기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생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형식적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실적을 쌓기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에 학교 전체가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형식적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진하도록 유도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육성 방안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 입학자원 감소와 이로 인한 전문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을 구조조정에 두고 있는데, 이에 반해 전문대학 발전 전략이 부재하다. 학령인구 대비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문대학이 어떤 위치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문대학 육성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전문대학 육성법 별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재정 지원 규모 및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3장의 정책 및 제도 분석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원 축소에 대한 피해를 전문대학이 더 입었기 때문에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전문대학 관련 지원 법률 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정부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육성 모델을 기반으로 계획, 집행, 성과 평가 등이 이루지는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전문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성인학습자들의 비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나, 실제로 학위과정에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장에서 학위 관련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4차 산업 혁명으로 촉발된 기술 진보와 생산 프로세스 혁신으로 인해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은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직무전환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우수한 전문대학들을 활용하여 국가적으로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전문대학 역할과 기능보다는 국내 상황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을 지역대학(communitry college)으로 통칭하고 지

역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들도 다수 있어 왔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대학을 지역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교통이 발달해 있으며,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학생 취업도 수도권에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사학이 대부분이며, 설립자들이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 내에서 구성원과 설립자 집단 간의 갈등 구조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단 비리는 항상 있어 왔고, 학교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대학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립 학교 체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공영형 전문대학 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대학의 미래 지향적 인력양성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효용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으며, 이를 실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 지방 정부는 인력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심이 없고, 실제 작동도 되지 않고 있어 폐기된 법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전문대학은 중앙정부 정책 이외에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대상이 없으며, 이는 전문대학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전문대학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력양성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령 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은 산업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장하여 왔고, 향후에도 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대학들이 산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방안

전문대학이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교육체계 내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에 기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문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해외 유학생 유치, 재직자로 입학자원 확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 전문대학 지원 관련 법령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급격한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전문대학 구조조정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병행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문대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 실행되었지만, 단기적인 처방에 머문 경향이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전문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육성 모델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 일관성, 비전 부족, 투자 효율성,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는 전문대학 육성 모델 설정이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정책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시장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신규 인력양성 요구 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들의 직무전환 교육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전문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및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가 사회경제적인 중요한 인프라이며,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를 외면하면 미래에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대체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한 전문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를 추진 방향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장기적인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

방안 1의 ‘중장기적인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에서의 추진 과제는 5개를 제시하였다.

방안 1. 중장기적인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
추진 과제 1-1.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모델 및 시스템 개발
추진 과제 1-2.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법령 제정
추진 과제 1-3.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방 교부금 지원
추진 과제 1-4.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추진 과제 1-5. 중등 단계에서 성인학습자에 이르는 연계성 있는 정책 수립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모델 및 시스템 개발’ 과제는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하였다면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육성 모델과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명확한 성과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직업교육 측면보다는 미래 사회를 반영하여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 직업교육 관련 법령의 미비이다. 따라서 두 번째 과제로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직업교육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체계 내에서는 일반교육의 하위교육 내지 대안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직업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나 재정 확보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직업교육이 체계적인 지원과 재정 확보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법령 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인다.

또한, 재정 마련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지방 교부금 지원’을 세 번째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직업교육 법령 제정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교육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초중등 단계에만 교부금을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등교육에도 법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

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주요 요인이기도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도 경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고등교육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교부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에 따른 재정 지원이 아닌 표준화된 모델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 확보에 실패하였는데,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정부-산업체-전문대학이 목적, 추진체계, 재정 투입, 성과 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로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등 단계에서 성인학습자에 이르는 연계성 있는 정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의 모델 설정에 있어서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강조한 이유와 맥을 같이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혁신적인 변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령자, 경력단절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 요구 증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대학 정책을 개발할 경우, 중등 단계 직업교육에서 성인학습자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학령인구 중심의 전문대학의 역할에서 신산업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의 연계, 재직근로자 직무 전환 교육, 경력단절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등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만 전문대학의 발전적인 구조개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높다. 아래 제시한 것과 같이 방안 2의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5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방안 2.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
추진 과제 2-1. 대학의 등록금 인상 자율성 허용
추진 과제 2-2.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특성화 방안 마련 지원
추진 과제 2-3. 고용보험기금 사용을 위한 절차 간소화
추진 과제 2-4.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추진 과제 2-5. 국가 지원 재정의 경상비 활용 비중 확대

첫 번째 추진 과제는 ‘등록금 인상 자율성 허용’을 제시하였다. 10년 이상 등록금 인상이 억제됨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 교직원들의 임금이 그 기간 만큼 동결되었으며, 대학 운영비도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학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은 대부분 목적성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경상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재정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축소 탓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 자율을 허용하거나 그 차이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특성화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별 발전 모델을 설정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성과 관리 미비로 인해 형식에 그친 부작용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사회·경제적 환경, 역량 등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표준화된 모델에 의한 재정 지원은 적자생존을 국가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별 발전 모델은 처한 상황에 맞게 설정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세부 과제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특성화 방안 마련 지원’을 제시하였다. 대학이 자율성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대학 발전을 위해 표준 모델 설정을 통해 전체 대학 발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억제하면서 대학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고용보험기금 사용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제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도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전문대학은 일반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훈련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전문대학이 국가 정규교육체제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고용노동부 사업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전문대학에 대한 행정절차 및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사업에 따라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을 국가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용부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과 직무역량 개발 등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산업 관련 실무인력 양성은 전문대학이 적합하기 때문에 고용노동

부 차원에서 전문대학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추진 과제는 재정과 관련되어 있다.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과 ‘국가 지원 재정의 경상비 활용 비중 확대’ 등이다. 전문대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현장실습인데도 불구하고, 학습 중심 현장실습 추진과 법제화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장실습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소임금을 지원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기피하고 있다.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을 도입하였다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나 기업들이 임금으로 인해 기피한다면 정책 실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만이라도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등록금 자율 인상과도 맥을 같이하는데, 대학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상비 부족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재정이 목적성 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경상비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목적성 사업을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상비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소멸 위기로 인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방안 3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이다.

방안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추진 과제 3-1.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한 정원 조정
추진 과제 3-2. 비수도권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추진 과제 3-3. 졸업생들의 일반대학 연계 편입 확대
추진 과제 3-4. 수도권과 비수도권 육성 모델 차별화 방안 모색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4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한 정원 조정’이다. 경쟁 관계를 용인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자생존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조조정은 합리적인 선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수도권 대학이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관점과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기라고 보인다.

또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두 번째 과제이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는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타당성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 소멸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을 지정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소멸을 늦추고 외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차별적인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소멸 위기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전문대학의 소멸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대학을 진흥시킬 수 있는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

‘졸업생들의 일반대학 연계 편입 확대’를 세 번째 과제로 제시하였다. 현재 제도 일반대학에 대한 편입은 존재하나 일반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편입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문대학의 역할 중 하나인 편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문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중에 일반대학 연계 편입을 확대한다면 전문대학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의 일반대학 연계 편입 확대를 위해서는 공개경쟁이 아닌 전문대학 편입 인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하고 확대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은 국가 교육체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육성 모델 차별화 방안 모색’이다.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적인 모델에 근거한 재정 지원을 통해 동일한 육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경쟁력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은 소멸하고 수도권대학은 별다른 노력 없이 생존하고, 이로 인해 전문대학 교육 경쟁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경쟁은 동일한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차이에 따른 육성 모델을 산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균형 발전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질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 방안

새로운 관점에서의 발전인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추진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5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방안 4. 질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 방안
추진 과제 4-1. 분야에 특화된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 과제 4-2. 성인학습자에 대한 취업지원 역량 강화 지원
추진 과제 4-3. 특성화고와 교육과정 연계 체제 구축(3+2)
추진 과제 4-4. 학교법인 자발적 퇴출 유도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과제 4-5. 공영형 전문대학 도입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추진 과제는 ‘분야에 특화된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란 특정 분야 인력양성에 전문화된 대학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공계열 중심 대학, 보건계열 중심 대학, 사회계열 중심 대학 등 특화된 대학이 많았으나, 경쟁이 심화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 등이 진행되면서 많은 대학이 종합대학이 되어버렸다. 이는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야에 특화된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화된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고, 타 대학도 자발적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분야별 인

력수요에 기초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된 대학으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규제를 풀어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에 대한 취업지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학령인구 중심의 재정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직무구조 변화로 인해 직무전환과 이를 위한 재정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인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경력단절 근로자들과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전문대학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중요한 과제로 보이며,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 제시한 과제는 '특성화고와 교육과정 연계 체제 구축'이다. 과거 연계 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지만 법제화된 운영 형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인 운영 형태였기 때문에 지원 한계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러나 신산업 분야는 전문대학 2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3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실무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형태로 각각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에 접근하면 수업연한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서로가 신산업 분야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두 교육기관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연계 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도 정책 수립 시 각각 접근하기 보다는 인재양성의 수월성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자발적 퇴출을 위한 사학법 개정’과 ‘공영형 전문대학 도입’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학교법인 자발적 퇴출을 위한 법령 부분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고, 공영형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이다. 경쟁력이 없는 전문대학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공영형 전문대학도 사학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시된 공영형 전문대학은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수준별로 국가 개입을 설정하여 공영형 전문대학 유형을 다원화하고, 심화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문대학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필요한 노동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방안 5.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추진 과제 5-1. 신산업 분야 인재육성 정책 및 지원 계획 수립
추진 과제 5-2. 재직자 직무전환 거점 대학 지정 및 컨소시엄 구축
추진 과제 5-3. 전문대학 교수 산업체 장기 연수 지원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기능 강화는 전문대학이 미래 지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수업연한의 한계로 인해 전문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시각은 다르다. 필요한 인력수요는 있으며, 양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산업 분야가 새롭게 창출되는 영역이 연구개발 분야이기는 해도 분야별 제조 및 유지·보수 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분야가 전문대학에 대한 '신산업 분야 인재육성 정책 및 지원 계획 수립'이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 개발이 미진한 수준이다.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한다는 선언적인 정책과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동반된 정책이어야 한다. 선언적인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 현장에 제공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을 설계할 때, 해당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재직자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재정 지원이 학령인구 중심으로 지원되었다면 미래에는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지원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인구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노동정책도 고용 유지 및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직 근로자들의 등록금 국가 지원 등도 고려되는 정책이다. 다만 모든 전문대학이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을 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점 대학을 지정하고 4~5개의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활성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직무전환을 위한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교육,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을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교수의 산업체 장기 연수 지원’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전문대학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체 연수는 필수적이다. 현재는 산업체 장기 연수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과의 괴리가 깊어지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체 장기 연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체 연수는 노동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기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요인이기도 하다. 필요하다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문대학 교수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산업체 장기 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에 교수들의 산업체 장기 연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채용하는 강사 인건비와 연수 교수에 대한 연수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SUMMARY

**A Study on the Structural Reform of Junior College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Kyeong Jong Kang, Jong-Woo Kim, Jong Ook Kim, Sun-Tae kim,
Hong Seok Joo, Eunseon Hong

1. Over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problems based on the decrease in the enrollment of junior colleg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demand of the labor market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ociety, and to seek the direction of structural reform at the government level.

2.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review, data analysis,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expert council were conducted to achieve this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 focused on 1) demand in the labor market, 2) structural reform policies of junior colleg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3) financial support projects for junior colleg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e data analysis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trend of changes according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departments at junior college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four areas: 1)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junior colleges, 2)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3) the demand for the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junior colleges, and 4) the identity of junior colleges and tasks for future development.

FGI was conducted twice to 12 experts related to junior colleges.

3. Main Results

The direction of structural reform of junior colleges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as follows.

- 1)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o secure the identity of junior colleges.
- 2) It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reforming regulations related to junior colleges.
- 3) Structural reform measure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should be prepared.
- 4) Structural reform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raising the quality level of junior colleges.

5) It should be promoted from the perspective of future-oriented human resource training at junior colleges.

22 policy implementation tasks were presented in the five directions as a way to reform the developmental structure of junior colleges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2). 증장기인력수급전망.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 관계부처 합동(2019).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성장동력 업그레이드,
삶의 질 제고.
- _____ (2020).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
수정.
- _____ (2020).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 방안.
- _____ (20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 교육인적자원부(2004). 대학 구조개혁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방안.
- _____ (2010).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 _____ (2011).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 교육부(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 _____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OECD 교육지표 2015.
- 교육부(2017).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 _____ (2018).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안내.
- _____ (2018).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 _____ (2019). 전문대학 혁신 방안.
- _____ (2020).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

_____ (2020).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 방안.

_____ (2021a).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2021 업무계획.

_____ (2021b). 2021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_____ (2021c).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_____ (2021d).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_____ (2021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선정 결과 발표.

_____ (2022).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교육혁신위원회(2005).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김선배·이상호·김윤수·송우경·허문구·하정석·김송년·서정현·조성민·오정현
(2019). 포용적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 주동형 지역산업정책의 추
진전략과 과제, 산업연구원.

김송년(2022). 지역산업구조와 일자리. 미발간물.

김현호·이제연·김도형(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
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2022). 지역소멸과 (전문)대학의 위기. 미발간물.

나무위키(2022). [On-line] <https://namu.wiki/w/구조조정>. 검색일:
2022.10.24.

네이버(2022). [On-line] <https://search.naver.com/구조개혁>. 검색
일: 2022.10.2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019).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_____ (2020).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TF.

- 대학교육연구소(2014).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진단과 대안. 국정
감사 정책자료집.
- _____ (2015). 대학 구조개혁 현황과 전망, 대교연 보고서 2015년
통권4호.
-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On-line]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 _____ (2022b). 졸업생의 취업 현황. [On-line]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 _____ (2022c). 공시대상대학. [On-line]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40/intro.do>. 검색일: 2022.4.24
- _____ (2022d). 표준분류 정보. [On-line] <https://www.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60/doInit.do>. 검색일: 2022.4.24.
- _____ (2022e). 일반대학교 및 산업대학교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22.8.26.
- _____ (2022f). [On-line]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검색일: 2022.10.21.
- 박진희·이시균·정재현·김수현·홍현균·김새봄·정순기·방글·공정승·이혜연·김영달·김종숙·권혁진·이학기·윤문희(2021). 2020~2030 중장기인력
수급전망 주요 통계표. 한국고용정보원.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12). 2021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보고서.
- 윤여송(2021). 전문대학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고등교육 위기극복
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국회 교육위원회·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

- 이기준·오지연·이정환·김은미·구경아·설가인·이윤정·오연서·어경록·조미영·박미현·손영호·김연천·이상민·유미래(2021). 2021년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이정표·이길순·박상운·최종운·김대곤·송경영(2021).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장국영(2012.5.15). 총장직선제 유지하는 대학은 국물도 없어. 서울시립대신문. [On-line] <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8066>
- 주희정·양정승(2021). 학령인구 감소시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 _____(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 _____(2021). 2020년 출생 통계.
- _____(2022a).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 _____(2022b). 장래인구추계. [On-line] <https://url.kr/l8e9yp>. 검색일: 2022.4.14.
- _____(2022c). 2022년 장래인구추계/생산가능인구. [On-line] <https://url.kr/bptlgr>. 검색일: 2022.4.14.
- 한국교육개발원(2022a). 교육통계서비스. [On-line] <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2.4.22.

_____ (2022b). 교육통계서비스. [On-line] <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2.10.21.

_____ (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_____ (각 연도). 취업통계연보.

허영준·김기홍·박동열·전승환(2014).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체제 개편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허영준·정지운·강서울·주홍석(2020).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한 전문대학 교
육혁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 록

1.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지역별 입학정원, 총원율, 경쟁률
2. 전문대학의 지역별·계열별 학과 현황
3. 설문지
4. FGI 조사지

부록 1.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입학정원, 총원율, 경쟁률

1-1.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입학정원

〈부록 1-1〉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입학정원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서울	71,900	22.8	71,753	22.8	72,467	23.0	0.4
부산	30,115	9.5	30,080	9.6	30,049	9.5	-0.1
대구	9,439	3.0	9,439	3.0	9,439	3.0	0.0
인천	6,191	2.0	6,191	2.0	6,406	2.0	1.7
광주	13,571	4.3	13,499	4.3	13,648	4.3	0.3
대전	18,323	5.8	18,224	5.8	18,202	5.8	-0.3
울산	3,092	1.0	3,092	1.0	3,182	1.0	1.5
세종	2,657	0.8	2,657	0.8	2,773	0.9	2.2
강원	15,254	4.8	15,795	5.0	15,608	4.9	1.2
경기	37,534	11.9	37,475	11.9	37,479	11.9	-0.1
충북	15,859	5.0	15,764	5.0	15,631	5.0	-0.7
충남	26,643	8.4	26,522	8.4	26,864	8.5	0.4
전북	15,003	4.8	14,973	4.8	15,032	4.8	0.1
전남	8,342	2.6	8,186	2.6	8,233	2.6	-0.6
경북	25,323	8.0	25,146	8.0	25,011	7.9	-0.6
경남	13,499	4.3	13,231	4.2	12,949	4.1	-2.1
제주	2,740	0.9	2,450	0.8	2,450	0.8	-5.3
전체	315,485	100.0	314,477	100.0	315,423	100.0	-0.0

자료: 대학알리미(2022e). 일반대학교 및 산업대학교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22.8.26.

170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1-2.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

〈부록 1-2〉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평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99.7	99.7	98.2	-0.7
부산	99.9	98.5	90.4	-4.8
대구	96.4	100.0	95.9	-0.2
인천	98.7	98.9	89.2	-4.8
광주	99.6	99.7	97.6	-1.0
대전	90.4	92.0	85.6	-2.6
울산	100.0	99.5	92.5	-3.8
세종	77.2	78.7	72.6	-2.9
강원	99.8	99.7	88.8	-5.5
경기	95.3	94.7	91.5	-2.0
충북	99.8	99.6	91.8	-4.0
충남	99.9	98.6	91.5	-4.3
전북	99.3	99.6	89.0	-5.1
전남	82.3	81.9	77.1	-3.2
경북	93.5	92.6	85.9	-4.1
경남	89.0	90.8	82.6	-3.5
제주	71.0	72.2	64.9	-4.2
전체	93.6	93.9	87.4	-7.66

자료: 대학알리미(2022e). 일반대학교 및 산업대학교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22.8.26.

1-3.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경쟁률

〈부록 1-3〉 일반대학교(산업대학교 포함) 지역별 경쟁률(평균)

(단위: 대 1,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2.6	12.3	11.2	-5.7
부산	6.9	6.6	5.7	-9.5
대구	10.8	11.0	9.9	-4.0
인천	8.7	7.0	6.1	-15.9
광주	6.0	5.9	5.8	-1.7
대전	6.7	6.8	7.0	2.3
울산	8.1	7.6	6.8	-8.7
세종	6.9	6.4	5.0	-14.6
강원	5.9	6.0	5.2	-5.6
경기	9.5	8.5	7.7	-10.2
충북	7.1	6.7	5.9	-8.7
충남	8.0	7.5	6.2	-12.3
전북	6.3	6.1	5.2	-8.8
전남	4.5	4.0	3.6	-10.7
경북	5.2	4.8	4.4	-8.4
경남	5.1	4.8	4.4	-7.2
제주	3.7	3.5	3.4	-4.2
전체	7.2	6.8	6.1	-8.0

자료: 대학알리미(2022e). 일반대학교 및 산업대학교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22.8.26.

부록 2. 전문대학의 지역별·계열별 학과 현황

2-1. 지역별·계열별 입학정원

〈부록 2-1-1〉 지역별 인문사회계열 입학정원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서울	5,565	11.6	5,489	11.9	5,107	11.9	-4.20
부산	3,598	7.5	3,459	7.5	2,980	6.9	-8.99
대구	3,549	7.4	3,472	7.5	3,036	7.1	-7.51
인천	2,314	4.8	2,229	4.8	2,193	5.1	-2.65
광주	1,202	2.5	1,068	2.3	948	2.2	-11.19
대전	1,570	3.3	1,521	3.3	1,419	3.3	-4.93
울산	367	0.8	367	0.8	320	0.7	-6.62
세종	235	0.5	210	0.5	150	0.3	-20.11
강원	1,491	3.1	1,382	3.0	1,064	2.5	-15.52
경기	16,146	33.6	15,565	33.7	14,659	34.1	-4.72
충북	1,407	2.9	1,361	2.9	1,508	3.5	3.53
충남	1,389	2.9	1,289	2.8	1,242	2.9	-5.44
전북	1,350	2.8	1,320	2.9	1,233	2.9	-4.43
전남	2,356	4.9	2,256	4.9	2,154	5.0	-4.38
경북	3,093	6.4	2,963	6.4	2,872	6.7	-3.64
경남	1,263	2.6	1,212	2.6	1,053	2.4	-8.69
제주	1,097	2.3	1,077	2.3	1,067	2.5	-1.38
전체	47,992	100.0	46,240	100.0	43,005	100.0	-5.34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정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1-2〉 지역별 자연과학계열 입학정원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서울	1,469	3.2	1,435	3.1	1,469	3.2	0.00
부산	2,891	6.3	3,020	6.5	3,302	7.1	6.87
대구	4,135	9.0	4,182	9.0	4,439	9.6	3.61
인천	676	1.5	750	1.6	795	1.7	8.45
광주	2,433	5.3	2,538	5.5	2,483	5.4	1.02
대전	3,406	7.5	3,329	7.2	3,205	6.9	-3.00
울산	938	2.1	955	2.1	968	2.1	1.59
강원	1,561	3.4	1,573	3.4	1,510	3.3	-1.65
경기	9,300	20.4	9,429	20.4	9,596	20.7	1.58
충북	2,155	4.7	2,046	4.4	1,896	4.1	-6.20
충남	2,825	6.2	2,788	6.0	2,634	5.7	-3.44
전북	2,419	5.3	2,441	5.3	2,463	5.3	0.91
전남	2,885	6.3	2,873	6.2	2,610	5.6	-4.89
경북	4,491	9.8	4,780	10.3	4,834	10.4	3.75
경남	3,041	6.7	3,036	6.6	3,048	6.6	0.12
제주	1,067	2.3	1,077	2.3	1,087	2.3	0.93
전체	45,692	100.0	46,252	100.0	46,339	100.0	0.71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174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부록 2-1-3〉 지역별 예체능계열 입학정원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서울	3,287	15.1	3,233	14.7	3,148	13.8	-2.14
부산	1,406	6.5	1,492	6.8	1,611	7.0	7.04
대구	1,182	5.4	1,183	5.4	1,244	5.4	2.59
인천	495	2.3	489	2.2	489	2.1	-0.61
광주	237	1.1	235	1.1	278	1.2	8.30
대전	558	2.6	718	3.3	712	3.1	12.96
울산	70	0.3	70	0.3	60	0.3	-7.42
세종	969	4.5	959	4.4	977	4.3	0.41
강원	492	2.3	555	2.5	498	2.2	0.61
경기	8,653	39.8	8,731	39.7	9,293	40.6	3.63
충북	630	2.9	720	3.3	785	3.4	11.63
충남	572	2.6	662	3.0	722	3.2	12.35
전북	889	4.1	877	4.0	921	4.0	1.78
전남	521	2.4	513	2.3	606	2.6	7.85
경북	1,217	5.6	1,005	4.6	988	4.3	-9.90
경남	421	1.9	411	1.9	431	1.9	1.18
제주	120	0.6	120	0.5	120	0.5	0.00
전체	21,719	100.0	21,973	100.0	22,883	100.0	2.64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정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1-4〉 지역별 공학계열 입학정원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서울	4,861	10.1	4,888	10.4	4,799	11.1	-0.64
부산	3,082	6.4	2,816	6.0	2,237	5.2	-14.80
대구	4,158	8.6	4,073	8.7	4,016	9.3	-1.72
인천	2,451	5.1	2,468	5.3	2,418	5.6	-0.68
광주	2,076	4.3	2,030	4.3	1,812	4.2	-6.57
대전	2,295	4.8	2,170	4.6	1,892	4.4	-9.20
울산	1,038	2.2	1,021	2.2	955	2.2	-4.08
강원	556	1.2	522	1.1	500	1.2	-5.17
경기	15,852	32.9	15,637	33.3	14,035	32.5	-5.91
충북	1,684	3.5	1,730	3.7	1,496	3.5	-5.75
충남	1,611	3.3	1,606	3.4	1,506	3.5	-3.31
전북	976	2.0	931	2.0	888	2.1	-4.61
전남	2,055	4.3	2,075	4.4	1,943	4.5	-2.76
경북	2,232	4.6	1,997	4.3	1,985	4.6	-5.70
경남	2,916	6.1	2,686	5.7	2,435	5.6	-8.62
제주	271	0.6	271	0.6	276	0.6	0.92
전체	48,114	100.0	46,921	100.0	43,193	100.0	-5.25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2-2. 지역별·계열별 입학정원 감소 추세 상위 학과

〈부록 2-2-1〉 지역별 인문사회계열 입학정원 감소 추세 상위 학과

(단위: %)

구분	(특정대학)학과	연평균증감률
서울	비즈니스영어과	-0.24
	세무회계과	-0.01
	문헌정보과	0.00
부산	보건행정과	-0.35
	경찰경호과	-0.20
	사회복지계열	-0.15
대구	유아교육과	-0.22
	호텔관광과	-0.15
	경찰행정과	-0.13
인천	아동미술보육과	-0.34
	아동건강보육과	-0.07
	유아교육과	0.00
광주	유아교육과	-0.35
	사회복지과	-0.18
	유아교육과	-0.12
대전	사회복지과	-0.23
	경찰행정학과	-0.18
	장례지도과	-0.04
울산	유아교육과	0.00
세종	유아교육과	-0.11
	사회복지과	-0.07
강원	사회복지과	-0.18
	관광리조트과	-0.13
	사회복지과	-0.11

(단위: %)

구분	(특정대학)학과	연평균증감률
경기	상담아동청소년과	-0.30
	세무회계과	-0.29
	아동보육과	-0.29
충북	사회복지과	-0.29
	사회복지과	-0.18
	경영회계과	-0.11
충남	유아교육과	-0.19
	호텔관광과	-0.13
	세무경영과	-0.09
전북	글로벌호텔관광과	-0.07
	청소년교육지도과	0.00
	경영세무회계과	0.00
전남	유아교육과	-0.29
	복수자율전공학부	-0.24
	아동노인복지과	-0.23
경북	유아교육과	-0.18
	사회복지과	-0.13
	사회복지과	-0.13
경남	유아교육과	-0.21
	경영유통과	-0.15
	아동보육복지과	-0.12
제주	관광중국어과	-0.07
	사회복지과	-0.06
	관광영어과	0.00

주: 2019년~2021년 대학, 학과명, 주야간을 기준으로 3개년 자료가 매칭이 되는 학과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2-2〉 지역별 자연과학계열 입학정원 감소 추세 상위 학과

(단위: %)

구분	(특정대학)학과	연평균증감률
서울	보건의료정보과	-0.07
	의료정보과	0.00
	치위생과	0.00
부산	호텔외식조리과	-0.26
	병원서비스경영과	-0.16
	호텔외식조리과	-0.15
대구	의무행정과	-0.13
	보건행정과	-0.13
	안경광학과	-0.11
인천	간호학과	0.00
	보건환경과	0.00
	식품영양과	0.00
광주	보건행정과	-0.11
	임상병리과	-0.06
	식품영양과	-0.05
대전	보건의료행정과	-0.18
	과학수사과	-0.14
	호텔외식조리과	-0.13
울산	언어치료과	-0.11
	식품영양학과	-0.06
	물리치료과	0.00
강원	관광외식조리과	-0.13
	호텔조리과	-0.09
	관광외식조리과	-0.06
경기	섬유의상코디과	-0.24
	식품영양학과	-0.24
	뷰티아트과	-0.19

(단위: %)

구분	(특정대학)학과	연평균증감률
충북	호텔조리제빵과	-0.29
	보건의료행정과	-0.27
	안경광학과	-0.21
충남	언어치료과	-0.13
	안경광학과	-0.12
	외식산업학부	-0.07
전북	의무부사관과	-0.24
	보건행정과	-0.18
	보건행정과	-0.11
전남	작업치료과	-0.23
	미용관광복지과	-0.18
	임상병리과	-0.18
경북	보건의료행정과	-0.15
	화장품뷰티과	-0.13
	호텔조리과	-0.13
경남	호텔외식조리과	-0.24
	보건의료정보과	-0.15
	보건의료행정과	-0.12
제주	안경광학과	-0.12
	치위생과	0.00
	물리치료과	0.00

주: 2019년~2021년 대학, 학과명, 주야간을 기준으로 3개년 자료가 매칭이 되는 학과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2-3〉 지역별 예체능계열 입학정원 감소 추세 상위 학과

(단위: %)

구분	(특정대학)학과	연평균증감률
서울	뷰티매니지먼트과	-0.29
	섬유패션디자인과	-0.15
	레저스포츠학과	-0.06
부산	연극과	-0.18
	실용음악과	-0.08
	산업디자인과	-0.07
대구	뷰티스타일리스트과	-0.13
	뷰티스쿨헤어전공	-0.01
	스포츠레저과	0.00
인천	패션디자인과	0.00
	실용음악과	0.00
	산업디자인과	0.00
광주	뷰티미용과	-0.15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0.07
	스포츠재활과	0.00
대전	생활체육과	-0.13
	인테리어디자인과	-0.06
	모델과	-0.06
울산	요가과	0.00
세종	연기과	-0.15
	실용음악과	-0.15
	방송영상스피치과	-0.13
강원	골프경기지도과	-0.07
	골프경영과	-0.06
	스포츠레저과	-0.05
경기	건축디자인과	-0.29
	시각디자인과	-0.24
	융합예술과	-0.15

(단위: %)

구분	(특정대학)학과	연평균증감률
충북	실내디자인과	-0.13
	시각디자인과	-0.07
	사회체육과	0.00
충남	실용음악학부	0.00
	뷰티헤어디자인과	0.00
	뷰티코디네이션학과	0.00
전북	방송연예과	-0.14
	뮤지컬방송연기계열	-0.13
	패션산업과	0.00
전남	공연예술복지과	-0.11
	태권도체육과	-0.07
	음악과	-0.04
경북	축구과	-0.02
	생활체육과	0.00
	K-POP과	0.00
경남	미용예술과	-0.09
	재활레저스포츠과	-0.07
	레저스포츠과	0.00
제주	관광레저스포츠계열	0.00
	산업디자인학과	0.00
	음악과	0.00

주: 2019년~2021년 대학, 학과명, 주야간을 기준으로 3개년 자료가 매칭이 되는 학과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2-4〉 지역별 공학계열 입학정원 감소 추세 상위 학과

(단위: %)

구분	(특정대학)학과	연평균증감률
서울	지적과	-0.15
	컴퓨터전자공학과	-0.07
	메카트로닉스공학과	-0.05
부산	항공전자통신과	-0.35
	정밀화학과	-0.29
	건축계열	-0.23
대구	자동차과	-0.31
	기계과	-0.25
	항공정비과	-0.23
인천	조선해양과	0.00
	토목환경과	0.00
	항공지리정보과	0.00
광주	전기과	-0.33
	자동차과	-0.30
	기계자동화과	-0.15
대전	기계설계과	-0.24
	컴퓨터정보학과	-0.24
	반도체자동화과	-0.24
울산	안전및산업경영공학과	-0.06
	전기전자공학부	0.0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0.00
강원	건설정보과	-0.11
	건설지적토목과	-0.09
	비철금속과	-0.07
경기	스마트IT과	-0.39
	인터넷정보과	-0.35
	건축학부	-0.30

(단위: %)

구분	(특정대학)학과	연평균증감률
충북	전기전자과	-0.29
	기계자동차과	-0.09
	반도체전자과	-0.06
충남	전기전자서비스과	-0.13
	소방안전관리과	-0.07
	드론산업안전과	-0.06
전북	신재생에너지화학계열	-0.24
	자동차로봇학과	-0.11
	전기과	-0.08
전남	토목조경과	-0.18
	산업기술전자과	-0.18
	특수통신과	-0.13
경북	국방전자통신과	-0.14
	전기에너지과	-0.09
	철도전기과	-0.09
경남	기계공학과	-0.29
	조선해양공학과	-0.23
	자동차과	-0.18
제주	인테리어건축과	0.00
	컴퓨터멀티미디어과	0.00
	인테리어건축과	0.00

주: 2019년~2021년 대학, 학과명, 주야간을 기준으로 3개년 자료가 매칭이 되는 학과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2-3. 지역별·계열별 신입생 충원을

〈부록 2-3-1〉 지역별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충원율(평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00.0	100.0	98.3	-0.85
부산	91.7	87.0	71.9	-11.45
대구	98.3	90.1	86.6	-6.14
인천	100.0	100.0	84.3	-8.18
광주	99.0	96.5	86.5	-6.53
대전	98.3	85.9	60.9	-21.29
울산	100.0	97.9	89.7	-5.29
세종	100.0	85.7	53.3	-26.99
강원	92.4	89.6	76.2	-9.19
경기	99.8	97.2	76.2	-12.62
충북	97.2	87.5	66.0	-17.60
충남	95.8	89.2	72.0	-13.31
전북	99.0	97.9	91.6	-3.81
전남	88.6	88.8	80.6	-4.62
경북	86.9	88.0	86.1	-0.46
경남	90.9	84.8	79.9	-6.25
제주	99.6	91.6	71.8	-15.10
전체	96.3	93.0	80.0	-8.86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3-2〉 지역별 자연과학계열 신입생 충원율(평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00.0	100.0	98.3	-0.85
부산	97.4	95.4	85.8	-6.14
대구	98.0	95.5	89.7	-4.33
인천	100.0	100.0	94.9	-2.58
광주	100.0	97.8	92.1	-4.03
대전	100.0	94.8	76.8	-12.36
울산	100.0	94.9	93.2	-3.46
강원	95.6	89.3	80.5	-8.24
경기	100.0	99.2	91.5	-4.34
충북	96.4	89.1	82.6	-7.43
충남	97.8	89.3	80.7	-9.16
전북	99.7	98.8	92.9	-3.47
전남	82.8	78.3	68.5	-9.04
경북	92.8	90.3	81.9	-6.06
경남	98.4	95.2	87.8	-5.54
제주	99.3	93.3	82.2	-9.02
전체	96.8	93.6	85.5	-6.02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3-3〉 지역별 예·체능계열 신입생 충원율(평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00.0	100.0	99.2	-0.40
부산	93.5	84.8	78.9	-8.14
대구	99.3	99.8	91.3	-4.11
인천	100.0	100.0	99.2	-0.40
광주	100.0	98.7	94.8	-2.63
대전	99.4	95.1	66.9	-17.96
울산	100.0	100.0	100.0	0.00
세종	100.0	98.6	83.6	-8.57
강원	92.8	94.8	92.4	-0.22
경기	100.0	99.7	91.7	-4.24
충북	96.7	91.4	67.8	-16.27
충남	100.0	97.0	86.3	-7.10
전북	96.2	93.5	85.5	-5.73
전남	88.8	100.0	95.6	3.76
경북	93.4	89.3	92.9	-0.27
경남	98.6	89.9	83.3	-8.09
제주	100.0	100.0	95.6	-2.22
전체	98.2	97.1	89.4	-4.59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3-4〉 지역별 공학계열 신입생 충원율(평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00.0	100.0	96.5	-1.77
부산	94.4	71.9	64.8	-17.15
대구	95.7	87.9	84.6	-5.98
인천	100.0	100.0	95.6	-2.22
광주	100.0	96.7	89.7	-5.29
대전	99.1	83.7	65.0	-19.01
울산	100.0	98.4	89.1	-5.61
강원	95.7	90.7	77.2	-10.18
경기	100.0	94.1	72.4	-14.91
충북	97.7	81.4	67.3	-17.00
충남	94.6	75.6	67.6	-15.47
전북	99.7	94.9	96.2	-1.77
전남	94.4	94.3	84.5	-5.39
경북	91.1	91.9	82.0	-5.13
경남	90.4	82.5	76.6	-7.95
제주	99.3	94.3	72.2	-14.73
전체	97.3	90.7	78.6	-10.12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2-4. 지역별·계열별 경쟁률

〈부록 2-4-1〉 지역별 인문·사회계열 경쟁률(평균)

(단위: 대 1,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3.1	10.9	9.2	-16.2
부산	9.2	8.3	5.8	-20.6
대구	5.6	6.0	4.3	-12.37
인천	13.0	11.6	7.8	-22.54
광주	4.9	4.5	4.0	-9.65
대전	6.8	6.3	3.5	-28.26
울산	4.4	4.3	6.3	19.66
세종	7.2	7.1	4.7	-19.21
강원	4.5	4.2	2.3	-28.51
경기	12.0	10.7	7.4	-21.47
충북	6.7	6.7	3.5	-27.72
충남	7.5	6.7	4.3	-24.28
전북	3.4	3.1	2.3	-17.75
전남	2.2	2.2	1.6	-14.72
경북	3.7	3.8	2.5	-17.8
경남	5.3	4.1	3.8	-15.33
제주	2.7	2.3	1.5	-25.46
전체	8.2	7.4	5.3	-19.6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4-2〉 지역별 자연과학계열 경쟁률(평균)

(단위: 대 1,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5.3	14.2	11.8	-12.18
부산	19.0	18.3	12.6	-18.57
대구	9.8	9.9	8.9	-4.7
인천	11.7	12.0	8.6	-14.27
광주	7.6	6.7	6.4	-8.23
대전	10.5	9.3	6.6	-20.72
울산	8.6	11.9	10.7	11.54
강원	7.0	6.8	5.1	-14.64
경기	13.2	12.7	9.8	-13.84
충북	9.7	9.6	7.8	-10.33
충남	9.2	8.9	6.5	-15.95
전북	7.7	7.1	5.6	-14.72
전남	4.7	3.9	3.0	-20.11
경북	6.8	6.5	4.8	-15.98
경남	9.8	8.6	6.8	-16.7
제주	3.1	2.5	2.1	-17.69
전체	9.9	9.5	7.4	-13.54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4-3〉 지역별 예·체능계열 경쟁률(평균)

(단위: 대 1,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5.6	13.0	10.7	-17.18
부산	7.4	6.8	5.0	-17.8
대구	4.7	4.6	3.9	-8.91
인천	12.1	9.8	8.4	-16.68
광주	5.1	5.8	4.0	-11.44
대전	6.3	5.7	3.6	-24.41
울산	3.2	2.7	2.9	-4.8
세종	5.3	5.4	3.8	-15.33
강원	3.4	4.0	2.8	-9.25
경기	15.6	14.1	11.3	-14.89
충북	6.0	5.6	2.8	-31.69
충남	7.2	6.3	4.2	-23.62
전북	4.2	3.7	2.6	-21.32
전남	2.3	2.3	1.7	-14.03
경북	3.3	3.5	2.8	-7.89
경남	5.2	4.7	3.5	-17.96
제주	2.5	2.0	2.0	-10.56
전체	10.6	9.6	7.3	-17.01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충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4-4〉 지역별 공학계열 경쟁률(평균)

(단위: 대 1,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12.4	9.9	7.3	-23.27
부산	9.4	9.3	7.7	-9.49
대구	7.1	6.5	4.7	-18.64
인천	9.9	8.1	6.4	-19.6
광주	4.0	4.9	3.9	-1.26
대전	5.5	4.8	3.4	-21.38
울산	5.0	4.4	5.2	1.98
강원	4.8	4.0	2.6	-26.4
경기	10.1	8.1	6.1	-22.29
충북	6.3	5.1	3.0	-30.99
충남	6.7	5.6	3.7	-25.69
전북	3.6	3.2	2.4	-18.35
전남	3.1	2.9	2.1	-17.69
경북	4.3	4.4	3.0	-16.47
경남	5.2	4.6	3.6	-16.79
제주	2.5	2.1	1.7	-17.54
전체	7.4	6.4	4.8	-19.46

자료: 대학알리미(2022a). 신입생 총원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1-5. 지역별·계열별 취업률

〈부록 2-5-1〉 지역별 인문사회계열 취업률(평균)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65.4	60.7	60.0	-4.22
부산	63.9	65.8	61.0	-2.30
대구	70.1	67.8	66.6	-2.53
인천	68.9	69.8	65.9	-2.20
광주	73.4	73.1	70.2	-2.20
대전	68.4	68.4	60.6	-5.87
울산	74.8	77.4	71.4	-2.30
세종	64.4	72.0	69.8	4.11
강원	67.0	70.0	67.3	0.22
경기	70.2	68.6	66.9	-2.38
충북	67.0	68.6	64.9	-1.58
충남	73.2	71.0	68.9	-2.98
전북	70.0	68.3	73.6	2.54
전남	66.5	65.5	67.0	0.38
경북	68.0	67.2	70.1	1.53
경남	71.7	67.0	65.2	-4.64
제주	75.3	71.9	70.9	-2.97
전체	68.9	67.6	66.2	-1.98

자료: 대학알리미(2022b). 졸업생의 취업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5-2〉 지역별 자연과학계열 취업률(평균)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73.9	71.1	66.8	-4.93
부산	72.0	77.0	72.8	0.55
대구	73.4	73.7	69.0	-3.04
인천	80.2	70.2	64.5	-10.32
광주	77.5	76.3	74.2	-2.15
대전	75.7	74.6	72.4	-2.20
울산	81.1	86.1	81.5	0.25
강원	71.1	71.7	75.4	2.98
경기	74.5	73.6	73.6	-0.61
충북	74.0	75.8	73.8	-0.14
충남	74.7	77.6	74.2	-0.34
전북	70.2	76.2	75.0	3.36
전남	72.0	74.0	69.6	-1.68
경북	73.9	73.5	72.9	-0.68
경남	73.0	71.9	72.0	-0.69
제주	78.4	77.7	75.3	-2.00
전체	74.1	74.6	72.7	-0.95

자료: 대학알리미(2022b). 졸업생의 취업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5-3〉 지역별 예체능계열 취업률(평균)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71.5	70.8	61.6	-7.18
부산	53.6	50.8	57.6	3.66
대구	57.9	56.8	51.6	-5.60
인천	77.1	73.8	62.1	-10.25
광주	75.2	78.5	70.2	-3.38
대전	53.5	60.2	55.9	2.22
울산	74.7	58.4	49.2	-18.84
세종	71.5	66.6	68.9	-1.84
강원	59.3	62.2	66.5	5.90
경기	68.8	69.0	65.9	-2.13
충북	57.9	75.0	73.8	12.90
충남	59.8	61.3	61.7	1.58
전북	57.6	48.0	57.9	0.26
전남	57.1	65.8	63.2	5.21
경북	60.7	60.0	60.3	-0.33
경남	49.8	60.1	51.8	1.99
제주	55.7	66.4	68.8	11.14
전체	65.7	65.9	63.2	-1.92

자료: 대학알리미(2022b). 졸업생의 취업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2-5-4〉 지역별 공학계열 취업률(평균)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감률
서울	71.5	68.8	68.0	-2.48
부산	71.4	69.3	66.8	-3.27
대구	74.5	73.0	70.6	-2.65
인천	67.6	68.7	67.6	0.01
광주	71.3	69.8	70.9	-0.28
대전	66.8	68.6	65.4	-1.05
울산	77.2	70.1	70.1	-4.71
세종	55.6	66.7	-	19.96
강원	71.6	75.3	71.8	0.14
경기	72.3	72.2	69.3	-2.10
충북	74.6	74.5	73.1	-1.01
충남	70.4	70.3	70.6	0.14
전북	73.9	74.8	76.8	1.94
전남	70.4	68.8	63.4	-5.10
경북	72.1	70.7	68.5	-2.53
경남	67.4	64.2	63.6	-2.86
제주	78.4	76.1	63.1	-10.29
전체	71.7	70.8	68.7	-2.11

자료: 대학알리미(2022b). 졸업생의 취업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검색일: 2022.3.10.

부록 3. 설문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및 향후 계획, 정책 요구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명칭 변경)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올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져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실태 조사에서는 전문대학에서의 정원조정 관련 노력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요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대학의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책임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기획처(실) 장님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정부의 정책 지원 실태,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본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제공 가능한 자료를 제외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작성하기 힘든 내용도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류 장 수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관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 ▶ 조사기관 : ㈜아이알씨
- ▶ 담당자 : 김성은 대리, (T)02-6279-1919, (E)okkim2019@naver.com

응답기관 정보	대학교명			
	학교 주소	()시/도 ()시/군/구		
응답자 정보	성명		소속 부서	
	전화번호		e-mail	

※ 응답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은 회신내용 확인을 위한 연락 시 필요한 사항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I 응답자 현황

문1. 귀 대학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문2. 귀 대학의 입학정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입학정원 1,000명 미만 대학 ② 입학정원 2,000명 미만 대학
③ 입학정원 2,000명 이상 대학

문3.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기획처장 ② 교무처장 ③ 학생처장
④ 입학처장 ⑤ 기획처 담당자

II 전문대학의 정원 조정 현황 및 향후 방향

문4. 귀 대학에서 향후 3년간(2023학년도~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요 학과 3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개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학과까지만 작성).

계열	모집단위(학과 또는 전공)	예상 충원율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예시) ①	OO학과	50%
		%
		%
		%

문5. 귀 대학의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가 입학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년도	(정원내) 입학정원	성인학습자(만25세 이상) 수
2020학년도	명	명
2021학년도	명	명
2022학년도	명	명

문6. 귀 대학에서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을 학령기 학생보다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중심으로 모집한 주요 계열 및 학과 3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개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학과까지만 작성).

- ① 있음 ② 없음 ☞ 문7로 이동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계열	학과(또는 전공)		계열	학과(또는 전공)		계열	학과(또는 전공)	
	명칭	정원		명칭	정원		명칭	정원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예시) ①	OO학과	50명	③	OO학과	50명	②	OO학과	50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문7. 귀 대학의 2022학년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의 전형별 비율 및 인원수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정원내) 일반전형 (%)
 ② (정원내) 특별전형 (%)
 ③ (정원외)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특별전형 (명)
 ④ (정원외) 계약학과 (명)
 ⑤ 전공심화과정 (명)

문8. 귀 대학의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년도	(정원내) 입학정원	외국인 유학생 수
2020학년도	명	명
2021학년도	명	명
2022학년도	명	명

200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문9. 귀 대학에서 최근 3년간 (정원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주요 계열 및 학과 3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개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학과 까지만 작성).

- ① 있음 ② 없음 ☞ 문10으로 이동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계열	학과(또는 전공)		계열	학과(또는 전공)		계열	학과(또는 전공)	
	명칭	정원		명칭	정원		명칭	정원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예시) ①	OO학과	50명	③	OO학과	50명	②	OO학과	50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문10. 귀 대학에서 최근 3년간 취업률이 높은 계열 및 학과(전공)를 3개 이상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학과(전공)	3년간 평균 취업률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예시) ①	OO학과	50%
		%
		%
		%
		%
		%

문11. 귀 대학에서 2021년 2월 졸업생 중 취업한 졸업생들의 취업처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	%	100%

해당 지역(대학 소재 광역시도 내)	타 지역(대학 소재 광역시도 외)	합계
%	%	100%

문12. 귀 대학에서는 2023학년도 입학정원(신입생 총원율)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문13. 귀 대학에서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추진한 학과 개편 현황(모집단위 기준)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① 학과개편 있었음 ② 학과개편 없었음 ☞ 문14로 이동

문13-1. 해당연도에 신설한 학과가 있는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계열	학과(또는 전공)		계열	학과(또는 전공)		계열	학과(또는 전공)	
		명칭	정원		명칭	정원		명칭	정원
학과 신설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보기>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예·체능		
	예시) ①	OO학과	50명	③	△△학과	30명	②	□□학과	20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IV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

문17.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였으면 하는 정책의 요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추진 정책	요구 수준				
	1 전혀 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 필요
1) 중장기적 육성 모델 및 전략 수립					
2)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률 제정					
3) 전문대학 재정 지원 확대					
4)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					
5) 정부 차원의 사회적 산학협력시스템 구축(대학-지역-산업체)					
6) 새로운 유형의 구조조정 방안					
7) 공영형 전문대학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8) 고등직업교육 교부금 도입					
9) 한계 대학 퇴로 방안 마련					
10) 대학(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 일반대학 등) 협력체계 구축					

문18.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령 제정에서 우선시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진 정책	중요도				
	1 전혀 중요 하지 않음	2 중요 하지 않음	3 보통	4 중요	5 매우 중요
1)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					
2) 사학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 마련					
4) 재단으로부터 대학 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교수평의회 권한 강화					
5) 퇴출되는 대학의 교직원 임금/퇴직금 보전 방안					
6) 타 고등교육기관과 구분되는 전문대학 역할 명확화					
7) 기타 ()					

문19.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에서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20. 전문대학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수도권 정원 축소, 대학 평가 시 양적 지표 제외

--

문21.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 차원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산업체 정보 생산 및 유통/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 산업별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정부 차원의 대학-산업별 협의체 운영 지원 등

--

문2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예시) 성인 비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정책 개발, 재직자 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i>

문25.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의 연계 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 및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예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재정 지원 등</i>

문26.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 유학생 대상 학위 및 비학위과정 운영 확대 및 해외 캠퍼스 확대를 위한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예시) 규제 개혁, 해당 국가에 센터 설립 운영 등</i>

208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문27. 지역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탁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 및 정부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고용노동부 재정 활용 방안 등

문28. 마이스터대학 전문 도입을 위한 과제 및 중앙정부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자율성 확대, 마이스터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별도의 자격 부여 등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4. FGI 조사지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FGI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명칭 변경)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올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져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FGI 조사에서는 전문대학에서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FGI 조사는 직접 작성하는 형태(14개 문항)로 가급적 의견을 자세히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작성한 내용들이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FGI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10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문01.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대학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예시) 한국에 맞는 육성 모델 개발 등등</i>

문02. 전문대학 관련 규제 개혁에서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03. 전문대학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예시) 수도권 정원 축소, 대학 평가 시 양적 지표 제외</i>

문04. 현재와 같은 정원 감축을 통한 양적 구조조정이 전문대학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국내 전문대학 질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대학별 유형, 특성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 마련 등

문05.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 차원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산업체 정보 생산 및 유통/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 산업별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정부차원의 대학 - 산업별 협의체 운영 지원 등

문06. 현재 계열별로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계열(학과)과 원인, 취업이 어려운 계열과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움	계열(학과)	원인
취업이 어려움	계열(학과)	원인

212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문07. 국내 실정에 비추어 공영형 전문대학 도입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방식과 절차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08.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실무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관련 재정지원사업 신설/ 신산업 분야 거점 대학 지정/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

문09.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성인 비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정책 개발, 재직자 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

문10.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의 연계 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 및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재정 지원 등

문11.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 유학생 대상 학위 및 비학위과정 운영 확대 및 해외 캠퍼스 확대를 위한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규제 개혁, 해당 국가에 센터 설립 운영 등

문12. 지역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탁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 및 정부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고용노동부 재정 활용 방안 등

214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문13. 마이스터대학 전문 도입을 위한 과제 및 중앙정부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자율성 확대, 마이스터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별도의 자격 부여 등

문14. 기타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추가로 제시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자 약력

- 강경종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종우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종욱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김선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위원
- 주홍석
- 인덕대학교 교수
- 홍은선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 발행 연월일 2022년 10월 28일 인쇄
2022년 10월 31일 발행
- 발행인 류장수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44)415-5000, 5100
팩스: (044)415-5200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6961-301-9 93370
- 인쇄처 세일포커스(02-2275-6894)